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2023. 9.



최종보고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2023. 9.



■ 연구책임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 공동연구진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

박정호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위원

인은숙 사회혁신연구소 부소장

이규홍 사회혁신연구소 선임연구원

제 출 문

원주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연구진

연구책임자 | 권기태

공동연구자 | 김현수, 박정호, 인은숙, 이규홍

목 차

I.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5
II. 지속가능발전 정책 환경	11
제1절. 정책 여건 및 전망	13
제2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제정과 지역의 과제	27
III.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환경 분석	35
제1절. 분야별 현황 분석	37
제2절. 민선 8기 시정목표 연계	56
IV.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63
제1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개요	65
제2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69
제3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72
V.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83
제1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개요	85
제2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	91
제3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총괄 현황	94
제4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서	112
[목표1]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113
[목표2]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124
[목표3]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133
[목표4]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145
[목표5]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152
[목표6]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161

[목표7]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175
[목표8]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185
[목표9]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196
[목표10]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208
[목표11]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217
[목표12] 총폐기물 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226
[목표13]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238
[목표14]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250
[목표15]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260
[목표16]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269
[목표17] 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	277

VI.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실효성 확보 방안 285

제1절.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287
제2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289
제3절.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291
제4절.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발간	298
제5절. 향후 과제	302

부록 303

참고문헌 308

표 목차

〈표 1〉 연구방법	8
〈표 2〉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20)	21
〈표 3〉 지속가능발전 정책환경 17개 목표별 핵심키워드	25
〈표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 21개 주요시책	27
〈표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에 따른 변경 및 도입 내용	29
〈표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지방정부 위임 사무	30
〈표 7〉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운영 현황	39
〈표 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9~2018) 성과	39
〈표 9〉 원주시 농업경영체 등록인구	44
〈표 10〉 민선 8기 원주시 경제분야 공약	45
〈표 11〉 문화도시 고도화 전략 단계별 소요예산	46
〈표 12〉 원주시 공원조성 현황	50
〈표 13〉 원주시민 공동체 의식	53
〈표 14〉 원주시민 지역 정체성(소속감)	53
〈표 1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	54
〈표 16〉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원주시 부서별 업무 연계	58
〈표 17〉 17개 목표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 연계	59
〈표 18〉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모델	66
〈표 19〉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별 비교표	66
〈표 20〉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존 계획 및 수정·보완 계획 수립 과정	67
〈표 21〉 원주-MGoS 속의 공론장 회차별 진행 현황	68
〈표 2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71
〈표 23〉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73
〈표 24〉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전후 비교	74

〈표 25〉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76
〈표 26〉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정의서	77
〈표 27〉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5P 구조도	87
〈표 2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과제	91

그림 목차

〈그림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경과	3
〈그림 2〉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절차	6
〈그림 3〉 연구내용 및 추진과정	7
〈그림 4〉 연구 추진원칙 및 관점	9
〈그림 5〉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의 전체구조	13
〈그림 6〉 2023년 여름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피해현황	15
〈그림 7〉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2020)	19
〈그림 8〉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가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단위: 달러)	20
〈그림 9〉 국내 GDP당 및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1
〈그림 10〉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24
〈그림 11〉 법률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이행체계	28
〈그림 1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29
〈그림 13〉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이행체계	55
〈그림 14〉 원주시 민선 8기 비전소명	56
〈그림 15〉 원주시 6대 시정목표 및 10대 핵심 공약	56
〈그림 16〉 민선 8기 분야별 공약	57
〈그림 17〉 원주시 시정목표와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61
〈그림 18〉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체계	65
〈그림 19〉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체계	85
〈그림 20〉 기존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	89



I.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개요

- 연구명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기간 : 2023년 5월 23일 ~ 2023년 9월 19일(4개월)

2.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1) 대외적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행 틀이 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와 이를 평가하기 위한 232개 평가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어 확정됨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함
 -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에선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처음 제정됐으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대체법안으로 제정되며 그 지위를 상실함. 이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각각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이뤄진 뒤 현재까지 시행중임. 2023년 4월 기준, 현행 법률 중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성격, 취지 등을 반영한 법률은 106개에 달함¹⁾(권기태, 2023)

- 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07.6.5. 국회제출 → 2007.7.3. 국회통과 → 2008.2.4 시행 → 2010.1.13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법명 개정 → 2022.7.5 폐지 및 기본법 복원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폐지
2010.1.13 녹색성장기본법제정 → 2010.4.14 시행 → 2022.3.25 폐지 및 탄소중립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21.9.24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2.3.25 시행
-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22.1.4 법률제정 → 2022.7.5 시행

〈그림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경과

자료 : 권기태(202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해와 과제」에서 재구성

1) 현행 법률 중에서 목적, 정의, 원칙 조항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반영된 것은 79개이며, 책무, 사업, 기준 조항에 반영된 것은 27개임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정부는 UN지속가능발전 틀 내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함.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2015)에 이어,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변경계획 수립(2018), 제4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K-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2) 대내적 배경

- 원주시는 이 같은 세계적, 국가적 흐름을 고려해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W-SDGs)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속가능발전TF를 신설함(2021.4.).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통과 직후인 2022년 1월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함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은 지역 주요 이해당사자와 밀도 높은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수립함. 시 담당 부서 교육과 심화컨설팅 등을 거쳐 17개 목표별 과제와 사업을 설계함
 - 특히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W-MGoS)²⁾을 6개 그룹으로 나뉘, 그룹별 배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토론과 숙의과정을 진행함
- 이런 가운데, 2022년 수립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재’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취지에 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2022년 민선 8기가 들어서고, 2023년 3월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 되는 등 지역 내 환경변화를 고려한 보완작업의 필요성도 커짐
- 더불어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원주시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조화는 물론 현 세대를 포함해 미래세대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두텁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짐

3. 연구 세부목표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민관 실무협의체, 각 부서 논의 기반 공동 목표, 이행계획 수립(17개 목표별, 연차별)
- 원주시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 반영
- 지속가능발전 이해 증진 및 역량강화 촉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표 보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시

2) W-MGoS는 WonJu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약자임

1. 연구범위 및 방법

□ 추진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 시행)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2023.3.31. 시행) 제2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원주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원주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40년
- 내용적 범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대내외 주요 현황·여건 변화 검토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舊 기본계획 수정·보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舊 이행계획 수정·보완)
 - 지속가능성 평가 위한 목표, 성과지표 마련(수정·보완)
 - 그 밖에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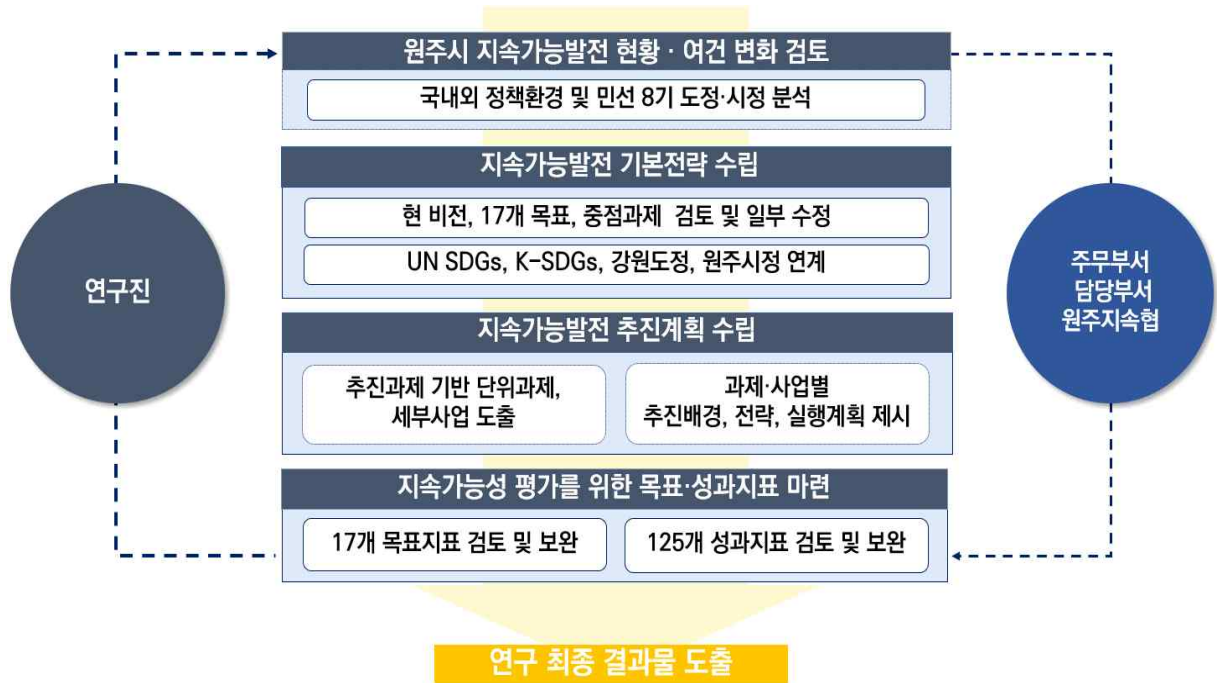
2022년 수립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기본계획	이행계획



2023년 수립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기본전략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립 목표 검토 및 수정·보완 • 목표지표 검토 및 수정·보완 • 추진과제 검토 및 수정·보완 •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수정·보완 (일몰사업, 신규사업 고려) • 성과지표 보완(측정가능성/관리용이성) • 목표 정합성 측면 검토 • 지속가능성 제고 민선 8기 공약사항 반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행화 • 연차별 추진계획(5개년) : 2023, 2024, 2025, 2026, 2027 • 연차별 투자계획(5개년) : 2023, 2024, 2025, 2026, 2027 • 작성자(부서, 담당자) 현행화

2.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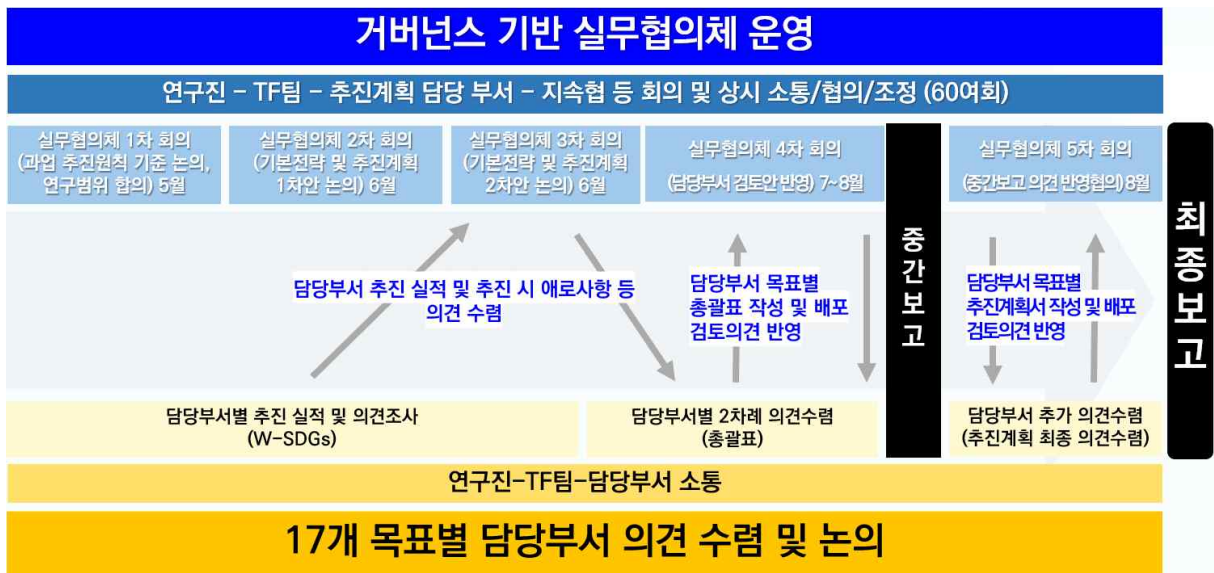
□ 주요 절차



〈그림 2〉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절차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차 실무협의체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방향, 원칙, 범위 설정 (5월)
 - 2차 실무협의체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세부 추진방안 논의 (6월)
 - 3차 실무협의체 : 기 수립 계획(‘기본 및 이행계획’) 수정안 검토 (6월 말)
 - 4차 실무협의체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초안 논의 (8월)
 - 5차 실무협의체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최종안 논의 (9월)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현황·여건 분석 및 전망 (5월)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여건 분석(UN, 정부, 강원도)
 - 지속가능발전 관련 목표지표 현황 분석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 분석 및 정합성 검토
- 기 수립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점검 (5~6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 정합성
 - 민선 8기 시정과제, 실천계획 연계성
 - 정책별, 분야별 중요도 부여와 수정·보완 범위 및 우선순위 결정
- 기 수립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정안 도출 (6월)
 - 목표명-목표지표-추진과제-단위·세부사업 포함된 ‘총괄현황표’ 논의 및 확정
 - 민선 8기 공약 및 시정과제 연계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초안 및 최종안 도출 (7~8월)

- 기 수립 계획(2022) 추진 당시, 숙의공론화 의의 및 결과 반영
 - 현황 및 대내외 여건변화 반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 정합성 고려
 - 민선 8기 공약 및 시정과제 연계
 - 부서별 정책수요 반영
 -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 반영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도출
- 중장기 행정계획 및 관련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방안 제시
 - 협치, 거버넌스 과제 도출



〈그림 3〉 연구내용 및 추진과정

□ 방법론

-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우선 UN 지속가능발전 관련 동향 및 정부, 원주시 정책자료 분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 분석, 지속가능발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원주시 중장기계획 및 사회조사 등 문헌 검토를 실시함. 이와 함께, 통계청 및 원주통계 등 관련 데이터 수집도 진행함으로써 정책변화의 근거를 확보함
- 2022년 1월 기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본 연구를 통해 수립하게 되는 기본전략과 연계성을 분석
 - 기존 계획 시 수립원칙을 연계하고, 내용상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여 반영함
 - 민선 8기 공약 및 시정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함. 이 과정에서 원주시 부서별 수요를 반영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을 협의함
- 기후에너지과 지속가능발전TF,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업수행 기관(연구소)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과업 추진 시 필요한 원칙, 범위 등을 협의함. 또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함
 - 실무협의체 활동 외 3자(TF팀·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연구소) 간 상시 협의 기반 진행

〈표 1〉 연구방법

구분	문헌조사	점검 및 연계성 분석	자문회의 (실무협의체)
원주시SD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 분석	●	●	
민선8기 공약 및 시정과제 연계	●	●	●
기본전략 수정·보완	●	●	●
추진계획 수정·보완	●	●	●
계획 실효성 확보 (협치·거버넌스 측면)	●	●	●

3. 원칙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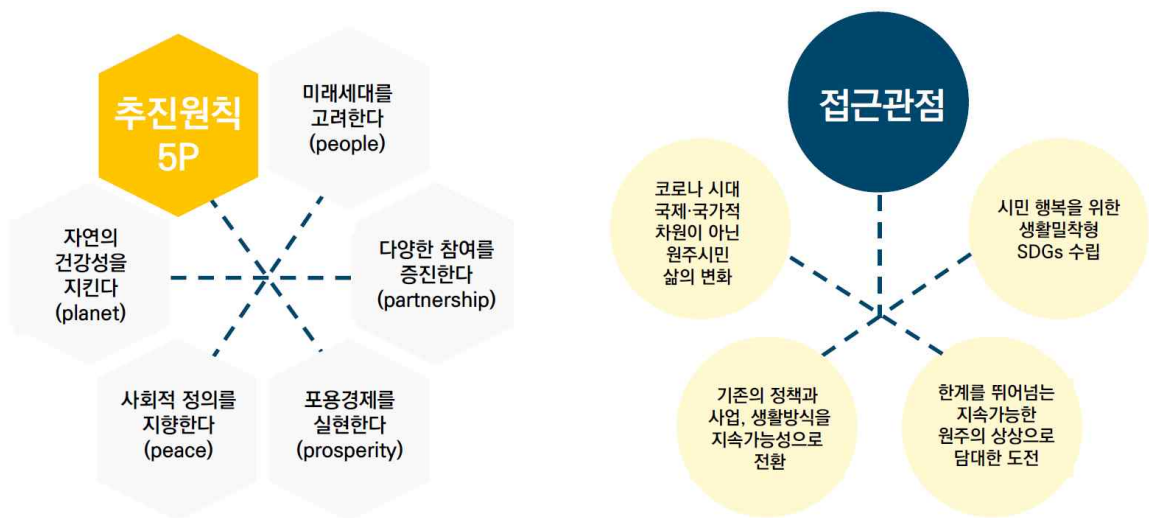
□ 정책여건 및 고려사항

-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 UN SDG 정상회의(Summit) 2023*2023.9.18. 개최) 추진 동향. 한국 SDGa 이행현황(2023) 등 국·내외적 정책여건을 고려해 수립
- [민선8기 정책방향]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등 현 시점 원주시 정책방향 고려해 수립
- [포스트 코로나와 일상회복]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높았던 기 수립(2022.1.) 당시와 달리, 현재 위기 단계 하향조정, 감염자 수 감소 등 일상회복 추세를 고려해 수립

□ 추진원칙 및 기준

- 추진원칙 5P
 - ‘원주시 미래세대’(people), ‘자연 건강성’(planet), ‘참여 증진’(partnership), ‘사회적 정의’(peace), ‘포용경제’(prosperity)를 다섯 가지 원칙으로 함
 - 이와 함께 ‘원주시민 삶 변화’, ‘생활밀착형 목표’, ‘기존 방식의 지속가능 전환’, ‘담대한 도전’의 4가지 핵심 관점을 견지함
- [세부기준 1] 현 시점 여건 변화 고려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도출
 - 과업의 바탕이 되는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핵심 요소 유지
 - [비전] 기 수립된 비전 ‘자연이 숨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도시 원주’는 유지
 - [기본전략] 17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현재 정책여건, 지속가능성 등 고려해 일부 수정·보완. 다만 비전-목표 간 정합성, 정책추진의 일관성 고려해 수정 범위 최소화

- [추진계획] 기존 추진계획 역시 현재 원주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정·보완
- [세부기준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로 전환
 - UN 합의사항 이행을 제도화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 전략)에 의거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기존 ‘기본 및 이행계획’에 적용된 명칭, 구성, 시간적 범위 등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춰 전환
 - 상위법을 근거로 마련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원주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의 연계, 반영
- [세부기준 3]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제고
 - 17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추진계획 간 연계성 검토
 - 국내외 동향, 민선8기 역점·신규·일몰사업 등 고려해 추진계획 수정, 보완
 - 추진계획의 시간적 범위(2023~2027)를 고려해 ‘목표지표’, ‘성과지표’, ‘단위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핵심 수정, 보완 범위로 설정
- [세부기준 4] 지역사회 숙의공론 결과 계승
 - 원주시청,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숙의위원회(W-MGoS) 등 지역사회 주체들의 숙의공론 결과 계승
 - 2021년 W-MGoS 논의, 행정·연구진 토론, 목표별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협의사항



〈그림 4〉 연구 추진원칙 및 관점



Ⅱ. 지속가능발전 정책환경

제1절 정책여건 및 전망

제2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과
지역의 과제

1.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그림 5〉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의 전체구조

자료 : STEPI(2021).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래변화를 추동하는 동인과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함
 - (변화 동인) 향후 20년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네 가지 영역에서 도출하고 각 동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전망
 - (변화 모습) 변화 동인으로 인한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역학 관계 변화를 전망
 - (미래 시나리오) 미래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조합하여 20년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묘사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기후변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를 도출
- 20년 후 미래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
 - 20년 후 미래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는 ‘글로벌 난제’, ‘파편화된 사회’, ‘불평형성’, ‘분쟁’, ‘적응’

- 불평형성이 심화되고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파편화된 사회로 변모하여 분쟁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
-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변화 등 더 강도 높은 글로벌 난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및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해질 것

▶ 회복력(resilience) 및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해질 것

- 미래를 추동하는 변화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영역에서 도출
 - (인구) 인구증가 속도 둔화와 고령화 가속화
 - 인구증가 속도 둔화와 중위연령 상승은 개도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중국과 선진국에는 경제성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
 - 감염병, 만성질환, 유소년 정신건강 등 보건 이슈는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
 - (환경) 극심한 폭풍,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화
 -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할 것
 - 기후변화는 사회적 계급이나 지리적 변수에 따라 인류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방식과 시기를 놓고 세계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
 - (경제) 경제의 중심이 기존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
 -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국의 세계 GDP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2040년경에는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임
 - COVID-19 대응, 고령인구 부양 등 공공부문 지출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 상승 전망
 - (기술) 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문제 발생의 근원
 - 기술은 고령화, 기후변화, 생산성 둔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국가 및 사회 안에서 새로운 긴장과 분열을 만드는 양면성을 보유
 - 기술발전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 능력과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여 일상의 모든 측면에 긍정·부정적 변화 요소로 작용

- ▶ 고령화 가속화**
- ▶ 기후변화의 영향과 탄소중립 달성 방식과 시기 논쟁**
- ▶ 경제중심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
- ▶ 기술은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새로운 문제 발생**

-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변화 모습
 - (사회) 비관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신뢰가 낮아진 사회
 - 경제 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 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것
 - 인류는 기존 국가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
 - (국가) 민주주의 거버넌스 위기가 높아지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긴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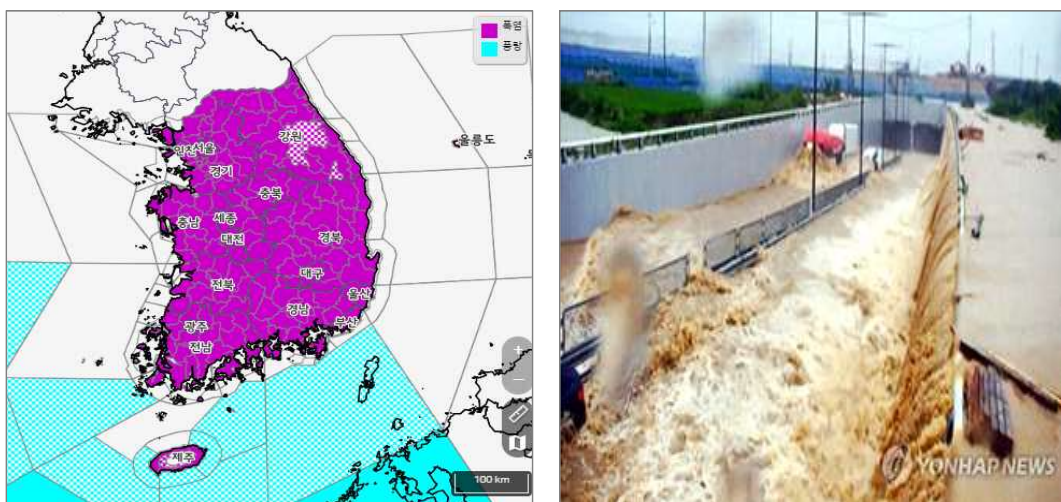
-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물결이 최고조에 도달했지만, 최근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감소 추세이며 민주주의 후퇴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
-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 간 격차가 커져 사회와 정부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비국가행위자 등 새로운 행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
- (국제사회) 국제질서를 이루는 권력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다극적 질서가 도래
 - 기존 권력의 원천 외 응용기술, 인적자원, 정보력, 네트워크 등 새로운 권력 등장
 - 외부충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과 회복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NGOs, 종교집단, 글로벌 기술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가

▶ 사회변화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증가 및 신뢰가 낮아진 사회
 ▶ 시민의 기대와 정부 대응 간 격차 심화, 긴장도 고조
 ▶ 국제질서는 다극적 질서가 도래

2.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

□ 기온상승과 생존위기

- 2023년 7월 ~ 8월 중 '폭염'과 '폭우'가 짧은 주기로 번갈아 나타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7월 중순에는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는 기후재난 참사가 발생함. 풍수해 재난 이후에는 강원도 및 제주도 산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재까지(8월초 기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7월 마지막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기온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생존의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6〉 2023년 여름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피해현황

출처 : 기상청(폭염특보 발효현황(좌),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우))

- 현재 지구 기온상승 속도와 이로 인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기후문제를 ‘변화’가 아닌 ‘위기’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이상고온, 폭염, 한파, 가뭄, 폭우, 태풍, 산불, 미세먼지, 물 부족, 천연림 고갈, 농지 유실, 홍작, 기근, 농업 유형 변화, 과일 주산지 및 어종 변화, 식량안보 위협, 신종감염병 대두, 경제상황 악화 등을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설정하고,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향적인 접근과 적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³⁾를 발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밝힘⁴⁾. 또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⁵⁾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3년도 여름, 전 세계가 극심한 기후재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고, 지구가 끓어오르는 ‘지구 열대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함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가 끓어오르는 ‘열대화 시대(global boiling)’다. ... 지금도 기후변화는 진행 중이고,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며 화재,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으로 세계가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한 G20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발언(2023.07.27.)⁶⁾

- 기온상승으로 인류 전체의 생존문제에 봉착한 지금, 지구 생태계가 지탱 가능한 수준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요구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발전을 뜻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
- 기후위기 문제는 인간의 복지와 기본적인 인권, 나아가 생존권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고, 현 인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의미가 없음
- 생태계 공생, 인간관계의 공정성, 좋은 정치와 행정 등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생산, 기술, 제도 등을 지속가능한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확대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1990년 이래 매 5 ~ 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8차 총회(3.13.(월)~3.19.(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5)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6)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2023년 7월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출처는 “유엔 사무총장 지구 온난화 시대 끝, 이제는 ‘열대화’ 시대”. 더나은미래, 2023.07.28.

□ 기후위기와 인권

- 기후위기는 인간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생명권(생존권), 생계권, 건강권, 식량권, 물 권리, 주거권, 발전권,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조효제, 2020)
-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위기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한 건강 문제라고 지적함.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위협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기온(고온, 저온) : 심뇌혈관질환, 온열질환, 한랭질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신장 및 비뇨기질환, 정신건강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알레르기 물질) :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 자연생태계 변화 :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신종 감염병
 - 기후재난(홍수, 태풍, 가뭄 등) : 사망 및 상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정신건강
- 모든 인류가 기후위기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은 개인, 사회, 집단, 국가,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회경제적,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개인적·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특별히 취약하며, 특히 아동, 노인, 여성, 빈곤층, 장애인, 야외노동자, 농어민, 미래세대의 존엄과 생존은 위협받고 있음
 - 냉해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줄어 작물을 바꿔야만 하는 농부, 해역 표층 수온 상승과 해양 산성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겪는 어부, 야외노동자, 건설노동자, 청소노동자, 쪽방촌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에너지빈곤층,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불투명한 미래로 기후 우울증을 겪는 미래세대 등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 이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2022)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함
-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한 국내 대응체계로 환경부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총괄 주무 부처로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건강관리 강화를 맡고 있으며,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기후보건 영향평가 도입을 추진 중임. 고용노동부는 야외노동자 폭염 대비 가이드라인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통합적·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 보호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지원(단기/장기) 및 정책의 지속적인 실효성 담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기후위기와 농업

- 기후위기는 강수, 수자원 가용성 변화, 병충해 분포 등 변화를 일으키며, 농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업은 특성상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농업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경우 농업과 식품 시스템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생산자·소비자·기후변화·환경문제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 식품 체계 구축과 농업생태자원 보존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시한 ‘기후스마트농업’⁷⁾은 작물의 생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복원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제거하는 효과를 가짐. FAO는 ‘기후스마트농업’을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기술적·정책적·재정적 측면에 두루 강점을 가진 종합적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농가소득 직접 지원제도’, ‘친환경생태농업 전환’, ‘농림어업인 재기 지원’, ‘로컬푸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탄소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t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 농가소득 직접 지원제도: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고자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농가 단위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함.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친환경 생태농업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면서 생산함. 정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1~2025)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본래 목적인 농업환경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음
 - 로컬푸드 정책 :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 단계나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해 탄소발자국이 적은 친환경적인 식품임. 국내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2개소에서 2020년 554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역 구성원에게 좋은 식품을 공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⁸⁾
- 이 같은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면 기후 적응과 농업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요구됨. 특히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대체로 생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유통과 소비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생산·유통·소비 등 식품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 구축이 중요함

7) 2010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헤이그회의에서 처음 제시됨

8)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탄소중립 식생활에 도움되는 로컬푸드”, 2021.06.07.

□ 기후위기와 좌초산업

- 기후위기 좌초산업이란 화석원료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 정제, 자동차,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 탄소집약도가 높고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이들 산업이 보유한 자원과 시설은 급속히 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의미에서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라고 불림
-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산업과 노동자,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증가와 차별이 심화될 수 있음. 에너지 전환과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따라 도태당하는 산업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피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8%로 미국(11.6%), 영국(9.6%)보다 2~3배 높음. 총제조업 가운데 좌초위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비중은 2017년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40.5%,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30.6%에 이룸. 또한 좌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84만3500여 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8.5%를 차지함. 국내 산업계가 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기후위기 대응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대량 실직 등 지역경제 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주요 국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단위: %



〈그림 7〉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2020)

자료 : 기획재정부(중앙일보에서 인용)⁹⁾

-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국가별 좌초자산 규모를 측정하는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19년 기준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음. 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뒷받침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경쟁력을 꺾어내리기 때문임. 한국 좌초자산 규모는 106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2위인 인도(760억달러)와도 큰 격차를 보였음

9) 중앙일보, “[view] 한국 제조업 비중, 미·영의 2~3배…코로나 위기 버팀목 됐다”, 2020.04.21.

- 유럽의 경우 기후위기 정책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크레딧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며, 특정 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 2020년 말 ‘좌초산업 노동자를 위한 기금’ 계획 발표.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352조 원)를 조성하는데 이 중 1천억 유로(135조 원)를 좌초산업 노동자들의 이직, 재교육 등에 투입하고 기술적 지원을 보장
 - 독일 : 탈석탄법을 제정하고(2020.7) 에너지 전환 및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지역에 대해 시기별 보상금 차등 및 435억 유로 지원
 - 체코 : 탄광지역 노동자 직업훈련 교육, 새로운 기계설비 운영 방법 교육
 - 폴란드 : 탄광 도시를 문화 도시로 바꾸기 위해 박물관, 콘서트홀을 유치해 건축, 관광, 문화 등 다른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



〈그림 8〉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가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단위: 달러)

자료 : 세계일보¹⁰⁾

- 국내 좌초산업의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정책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급격한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산업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기산업 구조조정 실직자 업종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등 직업전환 교육 및 고용안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세계일보, “‘퇴출 에너지원’ 화석연료 산업… ‘좌초자산’ 천문학적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2020.08.05.

□ 온실가스 배출

- 화석연료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었음. 현대사회에서 전기 사용은 필수적이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는 비재생에너지(석탄·천연가스·원자력 등)를 사용해 생산 중임
- 높은 제조업 비중과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8위이며,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7.3t)의 두 배가 넘는 15.5t으로 미국(약 19t)보다는 적지만, 일본(10t)이나 중국(9t)에 비해 훨씬 큰 규모임(2022년 기준)¹¹⁾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656.2백만톤CO₂eq임. 이는 1990년 대비 124.7%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6.4% 감소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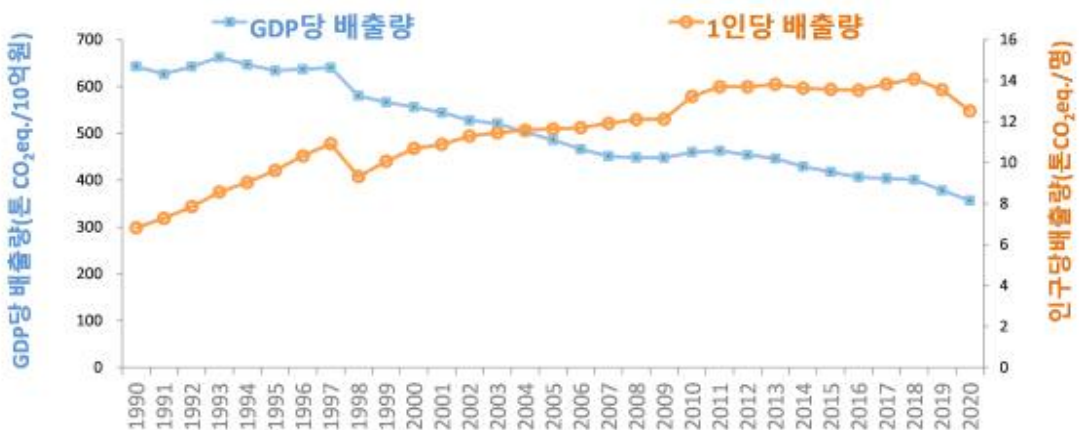
〈표 2〉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20)

(단위: 백만 톤 CO₂eq.)

	1990	2000	2010	2018	2019	2020	90년대비 증감률	19년대비 증감률
총배출량 (백만 톤 CO ₂ eq.)	292.1	502.7	656.1	727.0	701.2	656.2	124.7%	-6.4%
에너지	240.3	411.6	565.7	632.6	611.6	569.9	137.2%	-6.8%
산업공정	20.4	50.9	53.0	55.8	52.2	48.5	137.4%	-7.0%
농업	21.0	21.4	22.1	21.1	21.0	21.1	0.4%	0.4%
폐기물	10.4	18.9	15.4	17.4	16.5	16.7	60.9%	1.3%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2020¹²⁾

- 우리나라의 GDP당 배출량(2020년)은 2019년 대비 5.7% 감소한 357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최저치임. 인구 1인당 배출량의 경우는 199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5% 감소한 12.7톤/명임



〈그림 9〉 국내 GDP당 및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2020

11) 매일경제, “1인당 탄소배출 2배 많은 한국…탄소중립 충격 선진국중 가장 커”, 2022.3.22.

12) 총배출량은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배출량임

-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가파르게 감소함. 하지만 2000년대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나, 1인당 배출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함(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018). 한국이 이를 충족하려면 2030년 CO2 배출량을 3억1128만t을 감축해야 하며, 앞으로 매년 직전 해 대비 5.95% 감축이 필요함
-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7.6%씩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함(온실가스 격차 보고서, 2019). 따라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 수준 대비 50% 이상 설정 목표로 삼아야함
 - 감축 소요 기간(배출정점→25%→탄소중립) : EU(1990→2019→2050), 미국(2007→2025→2050), 중국(2030→미정→2060), 한국(2018→2030→2050)
- 이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시급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필요함. 또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 정책 수단 마련하고, 탄소 중심 산업체계 재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

□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 체제 출범

-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가속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 순위는 석탄발전의 시급한 감축임. 주요국들은 탈석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으며,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회원국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권장하고 있음
 - 프랑스 2022년, 영국 2025년, 이탈리아 2025년, 덴마크, 캐나다 2030년, 독일 2038년까지 탈석탄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공약으로 2050년 이전 탄소 순배출 제로, 2035년 발전 부문 배출제로 선언함. 또한 파리협약 재가입과 2030년 감축목표 상향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새로운 무역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UN 총회 및 SDGs 포럼에서 UN 시스템의 존중과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정책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지원할 것임을 선언함. 또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bu Dhabi Sustainability Week)¹³⁾에 참여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것을 표방함. 특히 기업 기술혁신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 분야 개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저에너지·모빌리티 기술 융합 '스마트 시티'로의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함

13)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은 2008년 이래 UAE 정부와 아부다비 미래에너지공사(Masdar)가 매년 개최하는 중동 최대의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로, 2023년도 주제는 'COP28을 위한 통합된 기후행동(United on Climate Action Toward COP 28)'임(경제외교 활용포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 기조연설", 2023.01.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밀한 정책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SDGs FORUM 축사 중 발췌(2022.09.21.)

“올해(2023) UAE에서 개최될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는 기후 위기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UAE의 오랜 친구로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 인천에서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중 발췌(2023.01.16.)

- 2023년 3월에는 국제사회와의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안)을 발표하였음.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의 지위와 최초 수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과 ‘중장기 감축 목표(2030년)’, ‘부문별 감축정책’, ‘이행기반 강화정책’,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전략 ①: 구체적·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국가전략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국가전략 ③: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국가전략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본계획(안)은 감축전략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¹⁴⁾’, ‘국제감축’ 등 총 10대 부문을 정하고, 부문별 감축전략으로 총 37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함
 -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
 - CCUS 부문은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점을 반영함
 -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함
 -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함
- 기본계획(안)은 이행기반 강화정책으로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국제협력’ 총 6대 분야를 설정하고, 총 45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14)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을 말함(SK E&S 미디어룸, “[에너지백과]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2022.06.30.)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국가전략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중장기 감축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2018 727.6백만톤 → 2030 436.6백만톤

부문별 감축정책

전 환	산 업	건 물	수 송	농축수산
· 석탄발전 감축 · 원전+재생e↑ · 수요 효율화	· 핵심기술 확보 · 기업지원 · 배출권 고도화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 그린리모델링	· 무공해차 보급 · 철도·항공·해운 저탄소화	·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 어선 및 시설 저탄소화
폐기물	수 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 자원 순환 이용 확대	· 청정수소공급 확대 · 수소활용 생태계 강화	· 산림순환경영 · 내륙·연안습지 복원 및 보호	· 법령, 저장소 등 인프라 마련 · 기술 확보·상용화 R&D	· 민간합동지원 플랫폼 · 부문별 사업 발굴 및 이행

이행기반 강화정책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 기후감시·정보제공 · 극한기후 대응 · 취약계층 지원	· 녹색기술 육성 · 녹색산업 성장 · 녹색 재정·금융 확대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탄소중립 전환 영향 집단 지원
지역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 지자체 탄소중립 기반 구축 · 지역 기후대응 역량 강화 · 중앙·지역 상호 협력 활성화	· 저탄소·미래분야 인력 양성 ·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 기후대응 국제입지 강화 · 그린 ODA 확대

범정부 상설 협의체 + 이행점검·평가체계 운영

〈그림 10〉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자료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4.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향가치 확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환경 검토를 위해 ‘2040 미래 시나리오 전망’, ‘기후위기와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시간적으로는 2040년 미래 전망, 공간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역, 마을까지 조망하고 지속가능발전 위협과 증진요소 모두를 고려함

〈표 3〉 지속가능발전 정책환경 17개 목표별 핵심키워드

UN SDGs	17개 목표별 핵심키워드
	고령화, 기후취약계층, 질병, 팬데믹, 저출생, 1인가구의 증가, 절대빈곤 증가 코로나19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세계 기아심화, 어린이 영양실조, 식량공급 및 영양섭취 곤란, 농지 감소, 농업인 고령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사회적가치 실현 필요
	감염병, 만성질환, 유소년 정신건강, 보편적 의료보장,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위협, 의료보건 종사자 지원, 지역돌봄 건강안전망 구축
	비대면사회, 온라인교육, 학습의 개인화, 교육격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 대상 폭력 다양화, 여성혐오, 여성근로자 일자리 상실, 무보수 가사·돌봄노동 팬데믹 이후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제고 강화 필요
	수자원 확보와 공급 위기, 물부족,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시설 부족, 기초위생 부족 공공성, 수자원확보, 통합물관리, 탄소중립과 물관리
	탄소중립,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탈탄소 사회의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조리시설 사용, 에너지효율개선 탄소중립전환 및 로드맵,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디지털 제조기술 확산, 플랫폼 자본주의,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청년 빈곤화 팬데믹, 기후위기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세계 제조 생산 급격히 감소, 기술(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문제의 근원), 디지털 경제, 바이오혁신 문화예술인 지원 및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UN SDGs	17개 목표별 핵심키워드
	<p>팬데믹으로 불평등심화, 개도국 지니계수상승, 디지털불평등 심화, 디지털전환, 다문화사회 진전, 난민증가</p> <p>디지털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포용 정책, 디지털불평등 해소</p>
	<p>팬데믹으로 빈민가 거주자 증가, 도시빈곤, 공동체간 갈등, 회복력,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초연결 스마트시티 가속화, 대중교통 확대 필요</p> <p>지역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p>
	<p>전세계물질발자국 증가, 무책임한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위협,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노출 증가,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p>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p>
	<p>기후변화영향 본격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기후위기, 회복력 및 적응력, 탄소중립, 미세먼지, 슈퍼태풍, 파리협정 1.5이내 제한 목표, 국가기후변화대응계획</p> <p>2050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시나리오 마련, 기후적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활동, 기후 불평등 해소, 지역 안전 강화</p>
	<p>플라스틱 해양오염, 어업붕괴, 바다온도상승, 산성화, 부영양화, 극심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p> <p>생태하천복원, 소하천 거버넌스, 강 문화 조성</p>
	<p>꿀벌 멸종 위기, 가금류 멸종 위기, 지속가능한 숲관리, 생물다양성, 침입외래종 방지 및 통제</p> <p>자연생태계보전, 자연과 생태계의 법적 권리 보장</p>
	<p>팬데믹으로 아동노동, 뇌물범죄 증가(저소득 국가), 낮은 신뢰도, 가치 다변화, 가치 갈등발생, 공공 가치 강조</p> <p>자치분권,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p>
	<p>공적개발원조(ODA)목표치 미달,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정부와 시민사회 긴장(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간 격차 심화)</p> <p>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기업ESG확산</p>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제정 의의¹⁵⁾

□ 기본법 제정의 의미

-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최초 제정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UN에서 도출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중앙정부 주도 하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함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 되면서, 기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의 역전된 위계 체계가 정상화됨
 -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상위개념으로 정립되는 형태로 법체계가 정상화됨.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의미함
-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21개 시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 21개 주요시책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3조 ~ 26조	
제23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정의로운 전환 시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의 지원
	모든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임금·사회보장 시책
	제도 및 금융제도의 환경친화적 개편·운영과 국민의 소비 및 생활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시책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 시책
제24조 (포용적 사회 구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 사전예측과 대응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시책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계구축 시책
	보편적 의료 보장 강화 시책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시책
제25조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생태계 변화에 대응 시책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시책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시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시책
생물 다양성,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 시책	

15) 1절은 권기태 2023, 「지속가능발전법의 이해와 지방정부 적용방안」 내용을 재구성해 작성함

제26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정의와 인권을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 마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 단체의 지원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활동 참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

자료 : 법제처

- 특히 ‘재’ 제정된 기본법에서는 사회 영역의 내용이 강화됨.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1개 시책 가운데, 포용적 사회 구현(제24조)을 위한 시책이 7개 달함
 -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는 내용이 반영됨. 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음
 - 산업계 및 산업 종사자가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추가됨.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명시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기본법 체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기본전략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이행’ → ‘추진계획 점검 및 평가’ → ‘보고’를 특정 시기에 맞추어 반복 수행하는 순환적 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경우 5년마다 숙의공론화장을 거쳐 수립하며, 일상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 기존 계획과 조례를 지속가능성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 또한 정책자문과 함께 관련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더불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숙의공론화장을 거쳐 2년마다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림 11〉 법률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이행체계
 자료 :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해와 지방정부 적용방안」

- 2007년 제정 기본법과 달리 ‘재’제정된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숙의공론화장 운영’과 같은 신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행체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표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에 따른 변경 및 도입 내용

주요 항목	변경 또는 도입된 내용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변경: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기본전략 이행계획 → 추진계획 • 기간: 5년마다 수립, 2년마다 추진계획 점검 • 각종 법정 기본계획의 상위적 개념으로 ‘기본전략’ 사용 • 내용: SDGs를 준용하여 17개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가능
조례, 행정계획 수립시 지속가능성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조례) 제정이나 개정시, 주요 행정 계획(중앙정부198개) 수립이나 변경시 지속가능성 검토 • 중장기 행정계획의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조례)로 정함 ex,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지역종합계획 등 포함 필요 • 대상 조례 범위 협의 필요: 집행부 발의/의원 발의 포함 여부
지방정부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지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심의 절차로서 필수 (전략, 추진계획, 법령조례검토, 지표, 보고서 등 심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1개 시책의 수립(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서 반영하는 방법 가능)
숙의공론화장 운영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추진계획, 지표, 보고서 등 추진시 이해관계자의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하여 실질적 의견수렴 • 1회성 또는 단순 행사성 의견수렴 지양

자료 :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해와 지방정부 적용방안」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안팎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중요함

구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격	행정기구	민관협력기구
필요성	- 행정내부 정책추진과 가치 내재화 필요	- 지역내 지속가능발전 확산 사업과 네트워크 필요
구성 운영	- 행정내부에서 심의 및 자문기구 - 메타위원회(다양한 위원회의 참여)로 20~30인 위촉	- 행정외부에서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기구 - 행정 및 다양한 개인, 단체 참여가능 (100~200명)
주요 역할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지표·평가보고서 심의 의결,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주요시책 심의자문 등	- 지속가능발전 전과정의 시민참여 활동 - 민·관 협력의 다양한 사업의 기획추진, 모니터링 등
특징	- 행정절차로 운영 - 심의의결기구로서 일상사업 한계 - 결정사항의 행정구속력 강함	- 민간사무국 주도로 독자적 사업 운영 - 민관협력기구로서 일상사업 활발 - 행정을 구속하는 운영방식 아님
사무	- 지자체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	- 민간사무국에서 전담 (지속협 사무국)

〈그림 1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자료 :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해와 지방정부 적용방안」

- 기본법에서도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 각각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메타위원회와 민관협력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¹⁶⁾

□ 기본법상 규정된 지방정부 역할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등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정립되고, 이행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SDGs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일이 중요해졌음
-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분권 구조가 전제되어야 함. 분권적 이행구조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임(인은숙, 20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하향식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자율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 수 있음. 이는 1)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 2)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3) 추진상황의 점검, 4)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5)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7)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8)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9)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임, 10) 주민 의견의 수렴
-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중요해졌음. 또한 기본법 '재'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기본법의 조항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지역 추진체계 마련: 기본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행정 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또는 전담부서 설치, 컨트롤 타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마련
 - 지속가능발전 이행 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협력사업 확대, SDGs 관련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6) 권기태 외(202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역확산 과제」, 34-35쪽.

〈표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지방정부 위임 사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방기본전략)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u>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u>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제9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	<p>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제14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u>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p>	<p>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u>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u></p> <p>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20조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u>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u>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p>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p> <p>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27조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u>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u></p>

<p>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 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p>
<p>제29조 (국민의견의 수렴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자료 : 법제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과 지역의 과제

-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상위개념으로 정립되는 형태로 법체계가 정상화되었음.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의미함. 특히 ‘재’제정된 기본법에서는 사회 영역의 내용이 강화되었음. 대표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명시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 경영’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정립되었고, 이행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일이 중요해졌음.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하향식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각 지방정부는 기본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행정 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또는 전담부서 설치, 컨트롤 타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마련을 통해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의 추진만으로 이행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협력사업 확대, SDGs 관련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원주시는 2023년부터 기본법 체계를 반영한 기본조례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최초 수립 이후 1년 만에 추진계획 점검 및 지표평가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논의 파트너로서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해 역할을 했고, 또 다른 핵심단위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 연내 구성할 예정임
 - 다만 기본법 체계와 정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명시된 21개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원주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연계하는 작업이 중요함.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전반의 정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숙의공론장 운영이 필요함. 산업계 역시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한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 및 역할을 내재화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Ⅲ.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환경 분석

제1절 분야별 현황 분석

제2절 민선 8기 시정목표 연계

1. 사회 분야

□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공동체 마을 만들기

- 원주시의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만족’ 30.6%, ‘보통’ 47.9%, ‘불만족’ 21.5%이며, 평균점수는 3.13점임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60~69세 40.1%, 70세 이상 46.0%), 연령이 내려 갈수록 만족도가 감소해 13~19세의 경우, 6.9%에 그침
- 원주시는 2018년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목표를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6대 핵심전략¹⁷⁾ 중 하나로 ‘저소득 자립 지원’을 제시함
 - 세부사업은 ‘자활사업 확대 추진’,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사회적 일자리 연계 자립 지원’,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등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해소 방안을 담고 있음
 - 이중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¹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수시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에는 원주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원주형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이 담겨 있음
 - 세부적으로는 ‘고령자 친화마을 및 테마형 고령자 주거단지 조성’, ‘원주형 커뮤니티 주택 지원’, ‘원주시 커뮤니티케어 지원센터 설치’, ‘주민주도형 아이돌봄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절대빈곤 해소, 상대빈곤의 최소화

- ▶ 원주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라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온 동시에 지역 내 협동조합, 대학 등 민관협력을 모색하며 복지안전망을 꾸준히 다져오고 있는 만큼, 2040년 미래비전을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 절대빈곤 종식에 대한 공감대는 물론 비급여 빈곤층, 노동 빈곤층과 같은 상대빈곤 문제 역시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보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원주시는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가칭 ‘원주희망기금’을 마련, 안전망 구축 필요
- ▶ 이를 위해 공론화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 지역 내 빈곤층이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절대빈곤을 즉시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17) 커뮤니티케어, 저소득 자립 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여성 가족보육, 보건 의료 공공성 강화, 사회보장 기반 구축

18)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건강 분야

- 원주시는 의료기관 방문 소요 시간이 20.5분으로 강원도 23.8분보다 낮으며, 주 이용 의료기관 만족도도 강원도(3.51점) 대비 약간 높음(3.56점)
 -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전국 대비 35% 높고, 강원 대비 1% 높음
- 2022년 기준 흡연율은 18.1%이며, 음주율은 20대에 크게 증가하고 40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70대 이상부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간음주율은 전국 대비 12% 높고, 강원 대비 9% 높으며,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대비 11% 높고, 강원 대비 92% 수준임
-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2022)
 - 스트레스 인지율은 25.6%로 2021년 대비 6.3% 감소했으나, 강원도 대비 3.6% 높음.
 - 우울감 경험률은 6.6%로 2021년 대비 0.9% 감소했고, 강원도 대비 1.2% 낮음.
- 대상별 건강에 대한 관심(2022)
 - 청소년 대상 건강문제는 '게임 및 휴대폰 중독'과 '금연 및 절주'가 가장 중요함
 - 성인 대상 건강문제는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가장 중요함(상대적으로 30~50대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인지도가 높음)
 - 노인 대상 건강문제는 '치매관리'와 '재가복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함
- 주관적 건강평가의 평균 점수는 3.30점이며, 강원도 대비 다소 낮고, 2020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2022)
- 원주시 병원수는 2012년 378개에서 2021년 457개로 증가세이며, 병상수도 4,402개에서 5,327개로 증가하였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원주의료원)이 있고, 종합병원은 일산동, 개운동에 각 1개소 분포. 의료인 1인당 인구수는 2018년 97명에서 2021년 59명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함. 지역별 의료기관의 격차가 있어 사회서비스가 분절될 수 있음.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통한 의료-돌봄-주거-복지 등 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 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169조 4930억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2011년 대비 63조원이상 증가함. 이에 고령인구 외에도 대상별 건강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의료기관-민관협력체계,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디지털 및 생활체육 분야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돌봄망·예방시스템 구축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와 연계 필요
- ▶ 민간-공공 및 의료기관 협력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필요
- ▶ 환자 접근성 패러다임 전환 필요
- ▶ 건강격차를 보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도입 필요
- ▶ 원주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 확립·추진으로 건강안전망 확보 필요
- ▶ 디지털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건강관리 데이터 활용과 시스템 구축
- ▶ 생활체육 등 건강자립을 촉진 및 지원 필요

○ 교육

- 2022년 기준 유치원 73개, 초등학교 51개, 중학교 24개(국공립 18개, 사립 6개), 고등학교 15개(국공립 5개, 사립 5개, 특수목적 2개, 특성화 3개), 전문대학 1개, 대학교 5개, 대학원 13개, 기타학교 4개
- 2021년 기준 공공도서관 5개, 박물관 2개, 청소년 수련시설 9개

○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2023.9)

-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을 모토로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음
- 1995년 원주시 여성회관설치조례를 시작으로 2018년 평생교육원으로 승격 및 원주시 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202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 강사은행 및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 동아리 등을 운영 중임

〈표 7〉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운영 현황

교육기관 현황	강사 현황(등록)	강좌 현황(누적)
7곳	149명	501개

자료 :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2023.9), 재구성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체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역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사)원주시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립(2009),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9~2018), 원주시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계획 등을 추진하고 마련함
- 행정 차원에서는 환경 기본 조례(2013) 제정,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8) 제정,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운영 중임

〈표 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9~2018) 성과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파트너십	교육참여 시민
54종 (지속가능발전목표 13개 연계)	41곳	124,413

자료 : 제20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2018), 재구성



**제도권교육, 평생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교육자원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확산**

- ▶ 제도권교육(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 대학원 등) 교육시설이 무척 잘 형성되어 있음
- ▶ 평생교육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원주시 인구대비, 시대 트렌드에 따른 평생교육 확장에 대비해볼 때 평생교육 관련한 기반 구축이 더 필요함
- ▶ 원주시속가능발전교육은 타 지자체에서 배울만큼 질적으로 우수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제도권교육 및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양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여성정책

-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2018년~2022)」을 바탕으로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수립·시행해 왔음
- 원주시 양성평등정책은 4대 목표 및 11개 중점과제(2018~2022 중장기계획)로 비전은 '여성과 함께 만드는 역동적인 원주, 일과 돌봄을 나누는 행복한 원주'임
 - 4대 목표별 11개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성 평등정책 책무성 증진, 여성 대표성 목표 관리, 지역 여성리더 육성), 경제활동 참여 성별격차 완화(일.가족 양립 기반 정착, 취업.창업 지속가능성 증대, 직주근접형 사회적 경제 창출), 원주 여성 지역창조 역량 확대(여성친화마을 운영, 분야별 여성네트워크 구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모든 시민의 공간사용 가치 증대(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세부추진 및 협력 체계 강화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사업추진 및 관리 내실화,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음
- 원주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적 추진기반인 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저변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여성가구주비율은 33.7%를 차지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50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수의 비율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성별 경제활동인구(2017년기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50.7%), 남성(72.6%)이며, 고용률(%)은 여성(48.6%), 남성(70.8%)임
 - 여성.가족지원시설은 6개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를 운영중임
 - 2017년~2020년 여성폭력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시설은 45개소로 지역아동센터 31개, 양육시설 4개, 그룹-홈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다함께돌봄센터 4개가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가 있음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 커뮤니티센터 운영, 여성친화마을 조성 및 친화도시 인식 확산,

- ▶ 마을 단위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여성친화마을 조성 및 젠더거버넌스 기구 활성화 위한 프로세스 정착 필요
- ▶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개념 반영을 위한 제도화 및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정책 추진 시 이뤄지는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성평등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이 필요함
- ▶ 시민참여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해야 함. 이 과정에서 생활 속 실천 거점으로서 여성친화마을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디지털 역량강화

- 원주시의 디지털배움터는 2021년 10월 현재 총 17개소에서 운영 중임
 -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연간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단구동배움터, 명륜작은도서관,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문막읍 주민자치센터, 미리내도서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시립 중앙도서관, 영재도서관, 원주메이커스나래, 원주청소년수련관, 원주건강문화센터, 원주상공회의소, 원주시자작나무도서관, 원주시립중천철학도서관,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강원지부
- 원주시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관내 초중고 돌봄교실 등에서 SW 코딩, 스크래치 인공지능(AI) 교육 등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진행 중
 - 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연간 1,000명) 및 관련 SW교육 전문강사(연 20명)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원주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해 2020년 9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308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함. 2021년 7개 마을에 구축 진행 중
- 원주시학습관은 2021년 7월 강원도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함
 - 은행 ATM, 음식 주문, 무인계산대, 무인민원발급기, 영화관 티켓 발권, 도어락, 대중교통 승차권 발권(KTX, 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생활밀착형 맞춤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음
 - 2021년 9월 '디지털 문해교육사 양성 전문과정'을 통하여 역량있는 디지털 문해교육사 11명을 배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
- 더불어 원주시학습관은 2022년부터 키오스크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 예정임



디지털 포용도시 조성,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 ▶ 디지털 포용도시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필요
- ▶ 인프라 구축, 시민역량 확충, 성숙한 디지털문화 확립 선순환 기반 마련 필요
- ▶ 정보격차 해소 및 예방, 사회구성원 모두 디지털 활용 및 디지털 혜택 기반 마련 필요
- ▶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복지프로그램 마련 필요
- ▶ 일상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일대일 멘토 형식 도입 필요
- ▶ 고령화지역, 농촌지역, 노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안 마련 필요
- ▶ 디지털뉴딜사업과 연계해 통합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 협조 필요

□ 인구 회복과 도시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2022)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전국 시군 중 118곳이 소멸위험에 처해있음. 이는 전체 시군의 51.8%이며, 지방의 74.7%가 소멸 위험 지역임
- 하지만 원주시는 2010년부터 계속 인구가 늘고 있으며 2020년 전국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고¹⁹⁾, 강원도 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2022)
 - 원주시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36만871명임
- 이러한 원주시 인구증가 추세는 혁신·기업도시 동시 조성²⁰⁾과 귀촌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혁신·기업도시는 원도심 침체를 가속화하여 지역 불균형을 초래함
 - 구도심과 읍면동 20곳은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보여 행정구역의 30% 이상이 소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심 5곳(반곡관설동, 지정면,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의 인구가 49.7%를 차지
 - 원도심 침체를 살펴보면, 25개 읍면동 중 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호저면, 중앙동, 소초면, 학성동, 봉산동 8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남(2020.5)
 - 청년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은 199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렇듯 원주의 지역들에 격차가 발생하고 청년 인구감소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에 위기에 처할 수 있음. 이에 도심 간 격차를 해결하고 청년층이 머무는 원주가 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인프라 구축,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소규모 재생사업과 함께 도심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 연계 교통망 구축
 -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창업, 취업, 참여활동, 커뮤니티, 회복, 교육, 주거, 홍보 등) 추진



삶터인 마을이 일터이자 놀이터가 되고 배움터가 되는 지역 재생, 누구나 원하면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청년 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 ▶ 원주시 차원의 기준과 예방법을 가지고 도심 간 연결과 체감이 앞서는 구조의 재생 방안 마련 필요
- ▶ 공공교통수단 혹은 도보로 접근이 쉬운 오픈 스페이스의 유기적 연결 필요
- ▶ 정부의 생활SOC계획을 원주 원도심 특성에 맞춘 특화된 재생방안 마련 필요
- ▶ 주민 삶과 연계되는 생활기반시설을 원도심 특성에 맞춰 공원, 텃밭, 정원, 문화, 교육, 체육, 의료, 돌봄, 복지시설 등 구체화해 마을 단위에서 15분 이내에 최소 1곳 씩 슬세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접근 필요
- ▶ 생활편리성과 지역매력 저하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원도심 재생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필요
- ▶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혁신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 실현

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인구가 증가한 전국 시 단 위 지역은 12곳임. 이중 인구증가율 1%를 넘긴 곳은 원주시(1.57%)와 천안시(1.25%) 2곳임

20) 혁신도시가 조성된 반곡관설동은 25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며,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은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신도심

□ 기후변화 적응

- 원주시는 2014년 ‘제1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2014~2018)’을 수립하고, 2019년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을 수립해 건강·재난/재해·농축산·산림/생태계·물관리 5개 부문 55개 세부사업 제시
 - 원주시 연평균기온은 2000년에 비해 2040년대에는 2.2도, 2090년대에는 5.4도 상승이 예측(2019)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기후위기로 예상되는 피해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의 문제는 바로 원주시의 도시회복력에 관한 문제로 귀결됨
- 원주시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 및 고령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밀도가 높은 수준임.²¹⁾ 관내 읍면동별 지역 간 온도 및 강수량 편차가 크며 치악산 등 지역 간 표고 및 경사도 편차도 큼. 또한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함
- 또한 원주시는 2001~2010년 강원도 18개 시군 중 기후환경(2.5)이 가장 취약하고 특히 폭염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²²⁾.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 열지수(28.2)와 폭염일수(6.0)가 가장 높아 취약성이 높게 나타남. 다만 전국평균의 취약성과 같은 2.5등급임
 - 2018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기상청)에서도 원주는 내륙 지역에서 주간에 최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특성이 반영돼 연간 폭염일수가 10일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원주시 기후변화 및 취약성 평가 결과, 건강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생태계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²³⁾
 - 원주시 기후변화 인식조사 결과 및 취약성 평가 결과, 98.63%가 기후변화를 알고 있고,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7.21%로 파악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 기후영향예산제 도입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 ▶ 기수립된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의 효과적인 활용 및 추진 필요
- ▶ 개인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 정립 필요
-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 기후영향예산제(‘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통한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필요
-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환경 및 기후영향 검토 의무화를 통한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 통합성 및 예산 일관성 검토 필요
- ▶ 민관산학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및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21) 근거: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22) 강원도 18개 시군 2001~2010년 기후환경지표 분석 결과(강원도 고온 취약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안, KRIC, 2018)

23) 근거: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2. 경제 분야

□ 농업 분야

- 원주시 농가 인구는 2019년 17,659명으로 2015년 대비 점차 감소하였다가 2020년 21,336명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도 21,070명으로 소폭 감소했음. 농가(전업 및 겸업 포함)수는 2019년 7,383가구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 8,935가구, 2021년 9,512가구로 소폭 증가함
- 경지면적은 2015년 8,671ha 대비 2020년 7,652ha로 감소하다 2021년 7,799ha로 소폭 상승함
 - 원주시 2022년 벼 재배면적은 3천76ha이며, 2021년 3천124ha 대비 1.5%(48ha)가 감소
 - 벼 10a(아르·1천㎡)당 생산량은 2022년 494kg이며 2023년 예상 생산량은 524kg임
- 2014년 1만7천326톤, 2020년에는 1만4천057톤으로 6년 동안 3천269톤(18.8%)이 감소함. 쌀 재배면적은 2014년 3천525ha에서 2018년 2천794ha로 20.7%가 감소함
- 원주시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전체 식량자급률은 2014년 51%에서 2018년 47.7%로 낮아졌음. 식량 작물은 2014년 56.7%에서 2018년 50.4%로 감소했고, 채소 및 과채 자급률 또한 38.4%에서 30.1%로 낮아짐. 과수 자급률은 33.2%에서 37.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50% 이하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에 등록된 원주 농업경영체(경작지 1천㎡ 이상이거나 연중 농사일이 90일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는 1만2천994명으로 50대 이상(93.5%)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농업인은 11명에 불과하였음

〈표 9〉 원주시 농업경영체 등록인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대	13	11	11	7	6	11
30대	136	161	168	160	147	130
40대	1,039	1,134	1,080	997	910	701
50대	3,627	3,878	3,777	3,706	3,460	2,843
60대 이상	7,169	7,291	7,735	8,139	8,392	9,309
합계	11,984	12,475	12,771	13,009	12,915	12,99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원주투데이(2021) 재구성



농가인구수 감소·경지면적 감소·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필요

- ▶ 원주시 농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 및 정체 추세에 있음. 경지면적은 계속 감소 및 정체 추세에 있음.
- ▶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무척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 유입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원주시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단위 요인과 원주시의 도시화 심화에 따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 현실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 ▶ 국가안보와도 관계되므로 적극적 통계 관리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필요

□ 호혜와 상생의 경제

- 원주시 산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많이 포진돼 있는 구조로, 제조업 비중이 높음.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매년 초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체 비중을 보면 ‘의료정밀기기’ 및 ‘식료품’, ‘기타기계’, ‘금속가공’, ‘전기장비’ 순으로 나타남.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 ‘의료정밀기기’, ‘기타기계’ 순을 기록함
- 하지만 2022년 기준 지역활력지수가 27.94로 전국 상위 30위 권 밖에 위치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과 생산인구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강원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높지만, 전국 1위인 수원시 지수(82.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원주시는 2023년 현재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역경제회복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민선 8기 핵심 시정목표 중 하나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를 내걸고 대기업 유치에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표 10〉 민선 8기 원주시 경제분야 공약

	핵심 공약	세부 공약명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중심도시로 성장	대기업 반도체 유치
		부론 IC 개통 추진
		부론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완성
		택지 개발·조성(①문막읍내 택지 개발 ②반도체 배후도시 추진 ③대학 타운 조성)
	원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정책	시작 직속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전통시장 클린하우스 설치
		남부시장 문화관광시장 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에 원주푸드 우선공급제 실시
		지역업체 우대 적극 시행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상지대 후문 원상복구 추진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기반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 ▶ 앞으로 20년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정목표인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에 한 걸음 다가가야 함
- ▶ 이를 위해 관내 기업 투자지원 강화로 탈지역 유출을 막는 한편, 향토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입지확보를 통한 기업유치, 지역 중소기업 우대 등 지원책이 동반되어야 함
- ▶ 이와 함께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주체간 소통기구를 활성화 해야 함. 또한 청년 등 신규 주체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산업 자원 확충

- 원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201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 준비에 돌입한 뒤, 6년이 지난 2019년 창의도시에 지정됨
- 문화도시로서 원주의 토대는 2003년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마련됨
 - 이후 그림책을 통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문화도시’ 지정을 거치며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잡게 됨
- 원주시는 2020년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문화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 고도화 전략을 마련함. 이를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국제네트워크 활동뿐 아니라, 문화자원을 토대로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사업비 : 440억원(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국비 50% 이내)

〈표 11〉 문화도시 고도화 전략 단계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구분	합계	단계별			
		단기 (‘20~‘22년)	중기 (‘23~‘30년)	장기 (‘21~‘45년)	
총계	440	80	160	200	
문화도시 조성 및 고도화 전략	소계	440	80	160	200
	국비	220	40	80	100
	도비	-	-	-	-
	시비	220	40	80	100
	민자	-	-	-	-

자료: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2020)



중장기 관점 문화예술산업 인프라 구축, 시설 확충 및 콘텐츠 다각화

- ▶ 원주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다져온 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산업을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
- ▶ 지역사회에서도 ‘산업의 중심이 문화예술로 이동하는 담대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시됨. 이같은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산업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 필요
- ▶ 문화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및 노하우 공유
- ▶ 고령화, 다문화, 청년 정주성 개선, 문화소외 등 문제해결형 문화프로그램이 발굴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원주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콘텐츠와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문화특화공간 조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문화향유 시스템 마련 필요

3. 환경 분야

□ 물관리

- 기후변화라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섬강권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수자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
 - 가뭄이 발생했던 2014~2015년 횡성댐의 평균 저수량은 29백만^m로 예년에 비해 60%까지 감소하여 물 부족 위기가 있었음
- 원주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급수량(^m/일)은 증가하고 1인당1일급수량은 감소하고 있음. 향후 인구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수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요관리, 안전한 먹는물 공급, 물의 사회적형평성 고려 등의 정책이행이 필요함
- 원주시 상수도보급률은 2019년 95.5%, 2020년 95.6%, 2021년 95.6%로 정체 상태임. 농촌 읍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공급 확충하여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지표인 미급수인구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며, 도.농간 상수도 보급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분석됨
 - 급수인구는 2019년 336,987명, 2020년 341,792명, 2021년 345,037명으로 미급수 지역 대부분이 인구가 많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등 환경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이 낮은 물을 음용하고 있고, 또한 고령으로 기후변화,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임
- 원주시 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 기준 90.6%, 2020년 90.6%, 2021년 90.6%로 정체 상태임. 2021년 기준 총인구 361,056명 중 미처리인구는 31,898명에 해당함. 하수처리시설은 원주, 문막, 흥업, 기업도시에 위치함
 - 원주지역 마을상수도(24곳) 및 소규모 급수시설(70곳)은 총 94곳으로 모두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음. 하루 평균 급수량은 1951t,이용자는 5,800여명으로 농촌지역 인구의 7%가 사용하고 있음. 원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해야함(2021)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물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형평성 실현 필요

- ▶ 원주시는 기후위기 시대, 중장기적으로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물-에너지-식량 연관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피고, 물 확보(water security) 문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 물관리정책은 수량과 수질 및 생태계 사이의 통합관리의 형태(수량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 수자원관리체계 등)로 전환되고 있음
- ▶ 원주시에서도 물관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장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도물 공급 확대 통한 사회적형평성 실현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함

□ 하천생태

- 원주시에는 국가하천 3개(섬강, 한강, 원주천)와 서곡천, 삼산천 등 19개의 지방2급 하천이 있으며, 소하천은 184개가 있음
 - 원주시 관내 호소는 농업용 저수지 100개소가 있으며, 원주시 관할로는 84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은 16개소임
- 원주시는 총 26개 지점에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도지정: 이리천 외 9개소 (총10개소, 월 1회 수질측정)
 - 시지정: 황둔천 외 14개소 (총15개소, 분기 1회 수질측정)
 - 시지정 (소권역 대표 지점) : 삼산천 (총1개소, 월 1회 수질측정)
- 원주지방환경청은 남한강, 북한강 등 5개 수계의 62개 지점에 대해 매월 BOD, COD, T-N, T-P 등 52개 항목을 조사함(2022)
 - 원주천1(개운동 치약교), 섬강4(지정면 간현리 지정대교), 서곡천(문막읍 동화교), 섬강 5(문막읍 문막리 문막교)는 ‘ 좋음’
 - 원주천2(호저면 주산리 주산교)와 산업단지 하천인 호저면 주산리 중방교의 수질 상태는 ‘보통(Ⅲ)’
- 원주시 하천에는 각시붕어, 갈겨니, 꺾지, 납자루, 돌고기, 독중개, 메기, 모래무지, 묵납자루, 미꾸라지, 버들치, 붕어, 쉬리, 얼룩동사리, 종개, 참마자, 피라미 등 담수어류가 서식하고 있음
 - 2015년 원주천, 2020년 서곡천 상류, 2023년 행구수변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포착됨. 수달은 지역 하천 생태계의 건강함을 판단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표임.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깨끗하고 수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으로 수달의 서식지가 잘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함



**하천의 자연성 복원, 소하천 수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강문화 조성, 소하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물순환 거버넌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방안 필요
- ▶ 소하천은 대부분 수계의 발원지로서 수질과 수량 확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 소하천의 수생태계는 큰 하류 하천 생태계의 종 다양성, 개체의 풍부성, 기능 및 구조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며, ‘비점오염원관리’, ‘수질기준 ‘ 좋음 (Ib)’의 유지 및 관리’,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한 철저한 수질 관리’ 등 필요
-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섬강이 흐르는 지역 중 공업단지에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관리강화’ 및 ‘비점오염물질 억제시설 설치 등’ 추진 필요
- ▶ 도심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하천을 여가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관리’ 및 ‘자연친화형 하천 복원’등을 추진 필요
- ▶ 장기적으로 원주 내 하천을 둘러싼 자연성, 장소성을 비롯하여 강문화를 보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

- 원주시 쓰레기 수거 현황을 2015년부터 연차별로 살펴보면, 배출량은 증가 추세였다가 2020년 다소 감소함. 건설물폐기물의 경우 2017년 발생량 408.8톤/일에서 2018년 834.7톤/일, 2019년 821.7톤/일으로 큰 폭으로 증가 후 2020년에는 444.5톤/일로 감소함. 건설물폐기물의 경우 99%가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물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원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은 2016년도 233.4톤/일에서 2020년 466.2톤/일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발생량도 2016년도 517.3톤/일에서 2020년 689.3톤/일로 역시 증가함
- 원주시 2040년 지속가능발전목표로는 총폐기물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는 설정하여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원주시 2015년부터 2019년 폐기물재활용률을 살펴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차 증가추세였다가 2020년 89%로 크게 하락함. 코로나19이후 일회용품 사용증가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량(톤)은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폐비닐이 차지함.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 및 처리함
- 원주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년~2021년)을 수립 추진해왔으며,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시책 추진으로 발생의 최소화, 자원절약,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또한 'Zero-Waste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원주시민의 참여 확대 등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노력해 왔음



폐기물 원천 감량제도 강화,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민관산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필요

- ▶ 원주시 북원여자중학교 '아름다운 지구 살림 프로젝트' 사례와 같이 쓰레기 분리배출-성상분석-배출량 계측 등을 통한 감축목표 설정을 하는 운동모델이 필요함
- ▶ 인구증가와 다양한 쓰레기 발생과 양의 증가로 인해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여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방법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 증대의 필요
- ▶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며,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 시민의식 개선,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주시의 폐기물 처리방식의 통합적 접근 필요
- ▶ 원주시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으로 통합적 폐기물 원천 감량제도 강화 및 실천확산의 기반구축이 필요함
- ▶ 시민에게만 감량과 재활용을 강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자원순환교육장을 설치하여 자원순환 운동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야함. 특히, 지역내 유통업체 등 사업체들의 참여와 실행이 매우 중요함

□ 육상생태

- 2021년 기준 원주시 녹지는 지정 완충녹지 129개(923,219㎡), 지정 경관녹지 68개(1,641,669㎡), 지정 연결녹지 1개(3,463㎡)로 점차 감소 및 정체 상태에 있음
- 원주시의 도시공원 조성 및 조성추진 면적은 2,950천㎡이며, 현재 중앙공원 2구역, 마장공원, 단구공원 조성 중에 있고 추후 반곡근린공원, 반곡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있음(2022.12)
- 2021년 기준 원주시에 지정 및 조성된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은 358개(8,234천㎡)임
- 1인당 공원면적 확보현황(2022.12)
 - 1인당 확보기준은 6.0㎡ 이상임
 - 1인당 지정현황은 15.6㎡(확보기준 대비 2.7배), 1인당 조성현황은 8.08㎡(지정현황대비 51.82%)로 WHO(세계보건기구) 공원확보 권고기준인 9.00이상의 조성현황 대비 1.10배임

〈표 12〉 원주시 공원조성 현황

구분	공 원 결 정 현 황 (천㎡)															
	합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지정	201	5,694	50	4,890	84	200	42	75	17	204	4	279	2	35	2	8
조성	166	2,950	39	2,265	70	162	37	62	14	145	4	279	1	30	1	4

자료 : 원주시청(202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2023.9 기준 등록시설 203개). 또한 토양오염검사 의무 기준에 따라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시행중임(※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3년 및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6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 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원주시민 환경체감도는 토양에 관하여는 3.20점(5점 만점), 녹지환경에 관하여는 3.46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음(2022)
 - 토양에 관하여는 좋음(30.5%), 보통(55.3%), 나쁨(14.2%)로 조사됨
 - 녹지환경에 관하여는 좋음(47.4%), 보통(40.4%), 나쁨(12.2%)로 조사됨
-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주 보호 동물은 반려동물(개, 집고양이)임



녹지환경 조성 및 확대, 생태계 보호, 자연의 권리 보장 필요

- ▶ 원주시는 시민행복을 위해 녹지환경을 확대하고 있고 1인당 공원면적 확보평균은 높은 편이나 도시개발 및 면적 확대로 인해 전체 녹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 원주시의 다채로운 녹지환경 자원에도 불구하고 녹지환경에 관한 높은 만족을 보이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시민의 욕구에 맞는 녹지환경 조성이 필요함
- ▶ 도시화로 인해 로드킬, 조류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고 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은 인간에게도 좋다는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관련한 정책이나 현황조사(통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

- 우리나라는 국가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 대응으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음
 -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 최소화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
 -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후 이슈의 중요성이 대두됨
- 강원도는 국가탄소중립계획보다 10년 앞서는 강원형 2040 탄소중립을 선언(2021)
- 원주시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2022.05.22.) 탄소중립 달성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 제6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비전(지역비전)
 - 제7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제8조 :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제9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중임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사업 현황(2005년~2020년)
 - 지역지원사업(30개소) : 태양열지원사업, 지역태양광지원사업
 - 주택지원사업 : 태양열(131가구), 태양광(1,442가구), 지열(159가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설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을 운영하며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 중임
 -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2015년~2022년 방문 연인원 : 212,739명)
 - 기후변화홍보관(2015년~2022년 방문 연인원 : 357,982명)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대응 행사
 - 기후변화주간 행사(매년 4월 지구의날, 테마별 시민 체험전, 기후변화 사진전 등)
 - 친환경 교통주간 행사(매년 9월 22일, 세계 차없는 날, 저탄소 친환경 교통생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체험 및 캠페인 등)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 ▶ 국가와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을 함께 고려
- ▶ 민관산학의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선언 및 추진
- ▶ 원주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4. 제도행정분야

□ 거버넌스 · 생평·평화·자치 가치 내재화

- 원주시는 지역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 15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²⁴⁾
- 원주시는 정책 수립, 행정제도 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접수하기 위해 시민제안 제도를 운영 중임. 또한 홈페이지 의견수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시정모니터단²⁵⁾ 운영 등도 하고 있음
 -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이슈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으며, 총 17,067명이 응답에 참여했음
 - 시정모니터단의 경우, 26명(2021년 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니터단이 평소 생활 하면서 느낀 시정에 대한 여론, 불편사항 등을 직접 제보함
 - 이와 함께 원주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까지 시청 본청 1층 민원실과 읍·면·동에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을 보급하기로 함
- 이같은 관점을 반영해 원주시는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소통·행정 분야 핵심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감행정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세부 사업을 제시함
 - 원주 미래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 : 지역 시민대표, 시의회, 기관장, 오피니언리더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논의 협력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확대 운영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통한 시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과정 마련, 참여예산 규모 확대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부론(富論)마당’ 구축 및 활성화 : 온라인 기반 시민참여, 의견제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정제안, 생활민원, 주민생각, 커뮤니티맵핑 지도, 법률상담, 소식알림 등의 메뉴로 구성됨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 구현, 시정참여 거버넌스 혁신 필요

- ▶ 원주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자치공동체 구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 첫 단계로 ‘시민 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참여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 함
- ▶ ‘시민체감형 소통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 ‘행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함
- ▶ 이를 통해 민관 소통 확대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 강화는 물론 시민참여의 일상화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4) 2020.12. 기준

25) 2009년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

□ 파트너십 분야

- 원주시가 조사한 원주시민의 공동체 의식결과에 따르면 문항이었던 ‘서로 잘 안다, 자주 이야기 한다, 서로 잘 돕는다,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에서 긍정응답보다 부정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음. 또 2020년 대비 모든 분류의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음

〈표 13〉 원주시민 공동체 의식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점수 (5점)
서로 잘 안다	22.3	32.0	24.2	17.5	4.0	2.49
자주 이야기 한다	32.0	33.7	18.7	12.2	3.4	2.21
서로 잘 돕는다	28.4	29.5	24.8	13.6	3.7	2.35
동네행사 적극 참여	42.3	30.8	16.4	6.8	3.7	1.99

자료 : 원주시 사회조사(2022)

- 원주시민의 지역민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소속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감을 느끼는지에 관한 원주시민 긍정응답 비율(73.3%)이 강원도민 비율(68.1%)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4〉 원주시민 지역 정체성(소속감)

단위 : %, 점

분류	전혀없다	별로없다	약간있다	매우있다	점수(4점)
강원도	8.0	23.9	46.8	21.3	2.81
원주시	6.1	20.6	47.6	25.7	2.93

자료 : 원주시 사회조사(2022)

- 원주시는 2006년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21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제21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원주시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기관·기업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원주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약속과 실천을 추진해 나가는 UN 권고에 의한 협의기구임.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지방의제21 수립과 실천사업을 추진함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시민 간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추진 민관거버넌스기반 활성화

- ▶ 원주시민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조사를 보면, 공동체 의식이 무척 낮은데, 지역민으로서 소속감은 공동체 의식에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소속감은 있으나 서로 이야기하거나, 돕거나, 행사에 함께 하는 등의 대면 경험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다양한 접촉 기회를 마련하여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하는 필요가 있음
- ▶ 원주시는 시민사회, 교육기관 등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민관산학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면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제정, 시행됨
- 기본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 특히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같은 기본법 체계를 준용함

〈표 1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조항별 주요 내용

구분	법조문	주요 내용
목적	제1조(목적)	법 위임사항과 시행사항 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점검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한 세대(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 추진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
	제4조(추진상황 점검)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5조(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안과 행정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발전지표 효율적 개발·보급을 위한 절차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보고서)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2년으로 한차례 연임 가능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간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설치
제16조(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추진 실효성 방안 관련	제16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제17조(위탁)	업무 위탁 사항
부칙	제1조~제2조	시행일, 경과조치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또 일상적으로 추진계획을 실행하고, 조례를 지속가능성에 따라 검토하며 추진하도록 규정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2년마다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과 변경, 기본전략을 추진하는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실행
 - 2년마다 추진계획의 점검과 지표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례의 제정이나 변경 시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정책 심의와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이러한 과정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해 추진
 - 기본전략 수립·변경 및 (필요시)지속가능발전지표 효율적 보급 시 홈페이지 게재



〈그림 13〉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이행체계

1. 민선 8기 시정목표

○ 비전소명



〈그림 14〉 원주시 민선 8기 비전소명

○ 6대 시정목표 및 10대 핵심 공약(우선순위)

<p>1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p> <p>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p>	대기업(삼성전자 반도체) 유치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p>2 안전이 안전한 원주</p> <p>3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4 시민 안전 서비스 제공 및 보장</p>	학생 1인당 교육비 매달 10만원 지급	시장실 1층 이전
<p>3 민원인이 웃는 원주</p> <p>5 민원인이 원하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 제공 6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p>	전용 체육시설 조성	주차장 조성사업
<p>4 건강하게 밤을 즐기는 원주</p> <p>7 누구나 운동을 즐기는 인프라 구축 8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p>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강화
<p>5 문화를 즐기는 원주</p> <p>9 특색있는 지역 문화 발굴 및 육성 10 손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제공</p>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터 추진	반려동물 복지 및 환경조성
<p>6 누구나 행복한 원주</p> <p>11 모든 시민을 세심히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 12 차별 없는 평등한 시민사회 구현</p>		

〈그림 15〉 원주시 6대 시정목표 및 10대 핵심 공약

○ 6대 목표 목표별 84개 공약(세부공약 132개)

- 완료율 17.4%(완료: 23건, 확정: 3건, 추진 중: 106건)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생안이 잇는 원주
건강하게 행복하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행복한 원주

● 대기업 유치를 통한 중심도시로 성장

관리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1-4	대기업(삼성전자 반도체)유치	투자유치과
1-10	부원IC 개발 추진	투자유치과
1-11	부원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완성	투자유치과
1-9	① 문막읍내 택지 개발	지역개발과
	② 반도재 배후도시 추진	투자유치과
	③ 대덕타운 조성	지역개발과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생안이 잇는 원주
건강하게 행복하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행복한 원주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원주, 시민과 밀접한 도시생활 환경 개선

관리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2-12	건강안전관리(구 보건소) 발원바탕 지원	의류지원과
2-13	공공산후 조리에 지원	지역안전과
2-14	지배층자 관리 시스템 확대	지배안전과
2-15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설치	수도사업과
2-16	거리, 산악 해수출입차량정 설치	해수과
2-17	① 자율방범대, 예방대, 직선식 합동 지원 순찰	안전총괄과
	② 역용소방대 지원 확대	
	③ 수상안전교육센터 설립	
2-18	원주산 근태시스템	건설정책과
2-19	① 원주 '별곡 길' 보행로 및 공용화장실 설치	건설정책과
	② 경관로 태크로드 설치	
2-20	① 혁신도시시 인도교 설치 및 수변공원 정비	건설정책과
	② 해저천 인도교 설치	
2-21	①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부구간 개발 추진	건설정책과
	② 동부순환로 건설공사 재계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생안이 잇는 원주
건강하게 행복하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행복한 원주

● 원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관리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1-1	시장 직속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경제진흥과
1-2	전통시장 골목하수소 설치	
1-3	남부시장 문화관광시장 조성	관광진흥과
1-5	공공기관 및 기업에 원주푸드 우선공급제 실시	로컬푸드과
1-6	지역경제 우대 규제사행	외국과
1-7	재난지원금 1만원 10만원 지원	자치행정과
1-8	상시대 추경 원주복지 추진	도로관리과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생안이 잇는 원주
건강하게 행복하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행복한 원주

● 시민의 삶에 한걸음 다가가는 정책

관리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3-31	전기차 충전소 다수 확보	기후에너지과
3-32	도시가스 공급(영선동)	기후에너지과
3-33	① 어린이 안심 안전공원 조성 ② 장미원(우정동) 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3-34	학곡 이수지 농촌 수변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3-35	① 기업도시 중앙공원 내 화장실 추가 설치 ② 수변공원 주차장 추가 확보 및 관리강화	공원녹지과
3-36	어린이 돌봄원 조성	노년과
3-37	쓰레기 재활 자원순환사업 실시	생활자원과
3-38	중저면 복합센터 설립(배지동, 주민자치센터 포함)	재산관리과
3-39	① 이농장 차우개선 ② 각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지원 확대	자치행정과
3-40	학생 1인당 교육비 총액 10만원 지급	자치행정과
3-41	① 기업도시 고등학교 조기학교, 혁신도시고등학교 추진 ② 국영정육아 학교 유치	자치행정과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생안이 잇는 원주
건강하게 행복하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행복한 원주

● 시민의 활력을 책임지고 건강한 원주시민을 위한 정책

관리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5-59	① 지역 공연장, 예술인력역 우대	문화예술과
	② 지역문화 예술 공연단체 활성화	
	③ 문화예술 전시회 대폭 지원	
5-60	④ 찾아가는 문화예술 육성	문화예술과
5-61	어린이 예술회관	문화예술과
5-62	문화 체육 복합센터 건립	문화예술과
5-63	행구동 지역축제 추진	관광체육과
5-64	드림랜드 치유숲 추진	관광과
5-64	국제 경기(대외) 부설	
5-65	① 반곡 금대 사적 지역 관광 활성화 ② 반곡역(화리동) 관광단지 활성화 및 혁신도시 연계방안 마련	관광과
5-66	기업도시 돌봄길 여건 조성 설치	
5-67	혁신도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지역개발과
5-68	어린이 도서관 설립	시정홍양도서관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생안이 잇는 원주
건강하게 행복하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행복한 원주

● 시민의 삶에 한걸음 다가가는 정책

관리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6-69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② 어린이 돌봄센터 설치	
6-70	③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복지정책과
6-71	④ 청년센터 설립	
6-71	⑤ 청년 창업 매캐미 실시	복지정책과
	⑥ 나눔문화 확산 지원	
6-72	⑦ 나눔문화 확산 지원	복지정책과
6-72	⑧ 사랑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원 인상	
6-73	⑨ 24시간 어린이집 개원	보육아동과
6-73	⑩ 영년립 도서관 조성	
6-74	⑪ 유대 재향학교 건립	경로장애인과
	⑫ 대구에 어린이 시립도서관(미래창조 프라자)추진	
6-74	⑬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충사육 원상회	경로장애인과
	⑭ 장애인 직업 교육 확대	
6-74	⑮ 장애인 일자리 확대	경로장애인과
	⑯ 장애인 보양구 지원확대	

〈그림 16〉 민선 8기 분야별 공약

2. 원주시 부서별 업무 연계

- 17개 목표들은 분야별 목표인 동시에 분야 간 목표이기도 하므로 SDGs가 상호연결되는 방식을 이해하면 더 나은 정책 구상과 이행 분야 간 통합을 통해 효과적인 촉진이 가능해짐. 이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SDGs 실현을 위해 관련 행정부서들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원주시 부서별 2023년 업무와 연계하여 살펴본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며,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통해 협업으로 행정혁신과 사회혁신을 가져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시정의 최고의 가치이자 철학으로 최고리더십의 의지와 추진력이 매우 중요함. 민관 파트너십으로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목표와 연관성 있는 부서들의 자원과 노력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음(one for all, all for one 관점으로 접근)
 - SDGs 13번 목표인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본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전반의 영향과 파급력이 예측되므로 모든 부서에서 공동학습을 하고 통합적 의제로 다뤄야함
 - 특히 전 부서와 읍면동에서는 SDGs 17번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업, 협력, 협치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이행에 기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함

〈표 16〉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원주시 부서별 업무 연계

부서명		UNSDGs(중점목표)
최고리더십		17개 목표 모두
경제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투자유치과	
	지역개발과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체육과	
	교통행정과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토지관리과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주택과	
행정국	총무과	17개 목표 모두
	자치행정과	
	징수과	
	재산관리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2 식량안보의 지속가능한 농업	9 산업혁신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3 기후변화 대응	15 육상생태계 보전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 사업소	경영관리과	수도시설과	2 식량안보의 지속가능한 농업	6 건강하고 양질의 물관리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수도운영과	하수과					
평생교육원	학습관	시립중앙도서관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7 기후를 강화하다	
	미리내도서관						
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 식량안보의 지속가능한 농업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9 산업혁신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4 해양생태계 보전
	역사박물관	농산물도매시장					15 육상생태계 보전
	도시정보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 부서 및 목표들과 연계				

3. 원주시 위원회 연계

- 원주시는 약 150여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를 연계하면 다음과 같음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메타거버넌스로 하여 각 위원회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표 17〉 17개 목표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 연계

* 조례폐지 위원회, 연관성미비 제외

UNSDGs	원주시 SDGs 관련 주요 위원회
G1 빈곤총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 주거복지위원회 • 노인급식지원위원회
G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귀농·귀촌인육성·지원위원회 •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위원회 •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 • 농지관리위원회 •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향토·대표음식 심의위원회 •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위원회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
G3 건강하고 행복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G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 도서관운영위원회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 미래유산보존위원회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UNSDGs	원주시 SDGs 관련 주요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등 답사교재편찬위원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G5 성평등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책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G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G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G8 좋은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 관광진흥자문위원회
G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육성위원회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유통·한지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산업단지 운영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 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G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건축위원회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지명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정책위원회
G13 기후변화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G14 해양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관리위원회
G15 육상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위원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G16 인권, 정의,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G17 지구촌 협력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읍·면·동개발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4. 원주시 시정목표 연계

- 민선 8기 공약 및 시정목표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운영원리가 내재하여 있으며, 원주시속가능발전목표와도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 2번, 7번, 8번, 9번, 13번
 - 언제나 안전한 원주 : 5번, 6번, 13번, 14번
 - 민원인이 웃는 원주 : 4번, 11번, 12번, 15번, 16번 17번
 - 건강하게 맘 흘리는 원주 : 3번, 15번
 - 문화를 즐기는 원주 : 9번, 11번, 15번
 - 누구나 평등한 원주 : 1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비전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시정목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민원인이 웃는 원주	건강하게 맘 흘리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평등한 원주
원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2	5	4	3	9	1
	7	6	11	15	11	3
	8	13	12	15	15	4
	9	14	15			5
	13		16			6
			17			10

〈그림 17〉 원주시 시정목표와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IV.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제1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개요
- 제2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제3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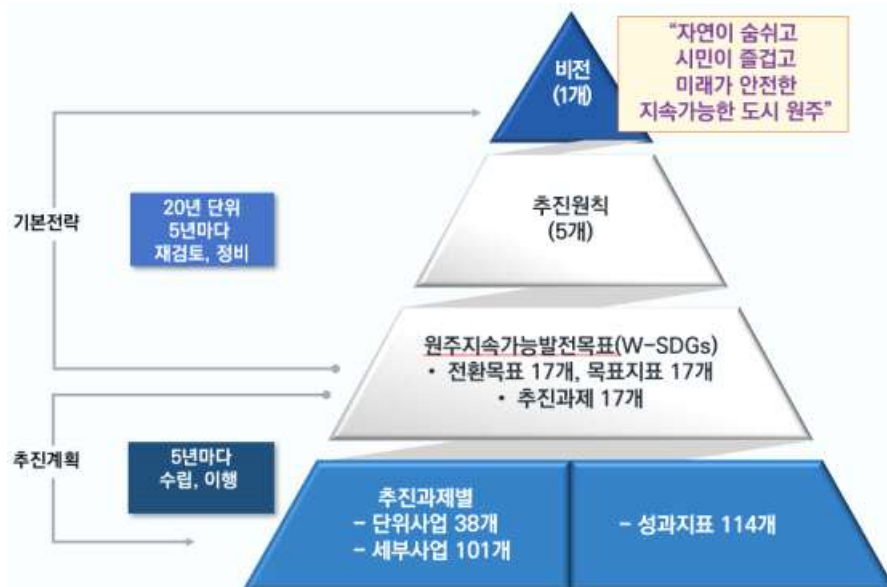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 시행)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2023.3.31.) 제2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원주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기본전략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2040년(20년 간)
 - 기본전략 : 2022~2040년
 - 추진계획 : 2023~2027년
- 공간적 범위 : 원주시 전역

□ 기본전략의 체계

- 계획구조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체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모델은 제3세대 모델로, 기존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당시, 원주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원주시 행정, 지역사회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 논의를 통해 ‘원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모델로’ 설정한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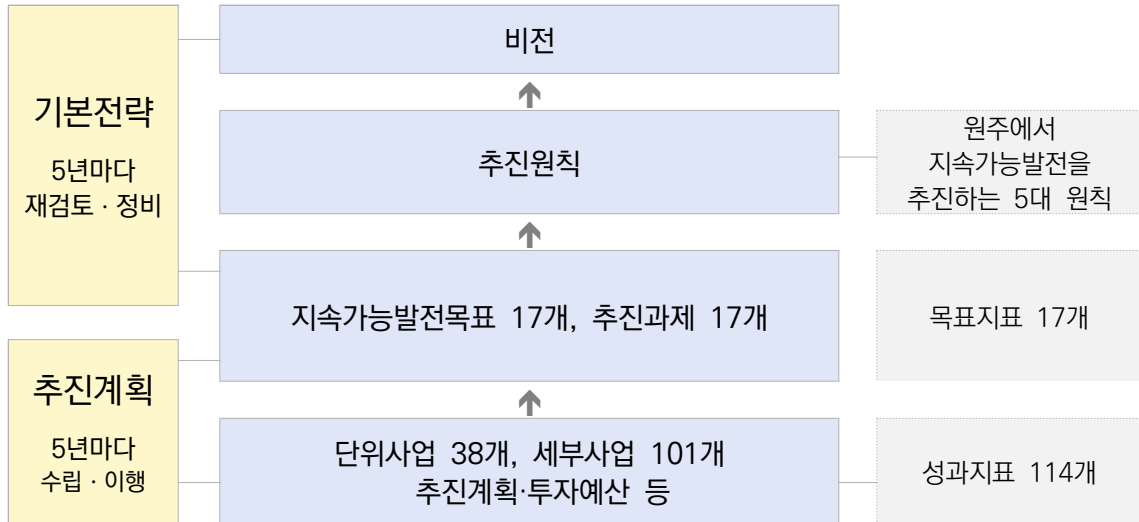


〈그림 18〉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체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모델 : 제3세대 모델 ‘행동목표형’

- 본 모델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7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 부서들과 38개 단위사업 및 101개 세부사업을 수립함

〈표 18〉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모델



〈표 19〉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별 비교표

구분	1세대 기본계획 (2007~)	2세대 기본계획 (2015~)	3세대 기본전략(계획)
성격	종합행정계획	종합행정계획	핵심전환전략
형식	국가SD전략 체계 준용	UN SDGs 체계 준용	UN SDGs 체계 준용
체계	경제, 사회, 환경, 행정혁신, 추진기반 (5개 영역) 300~400여개 기존사업	17개 목표 100~200개 기존사업	17개 목표 핵심전환 추진계획
배경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2007)	UN SDGs 수립 (2015)	UN SDGs 수립(2015) 2019 유엔총회(2019)
특징	중복적 종합계획 목표와 사업의 괴리	중복적 종합계획 목표와 사업의 괴리	※ 1~2세대 단점 보완

□ 기대효과

-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지속가능발전 계획 체계를 보여줌
- 다른 계획과 차별화, 성과관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 가능
-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와 단위·세부사업 간 정합성 강화, 지표별 검증력 강화
- 원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으로 17개 목표마다 대외적 홍보 수월

2. 수립 절차

□ 의견수렴 과정

- 본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진행함

〈표 20〉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존 계획 및 수정·보완 계획 수립 과정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과정 (2023년 수정·보완)	실무협의체	추진계획 담당부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보고회
	추진방향 및 원칙 논의, 수정·보완	검토, 작성	검토, 자문	최종검토, 자문

□ 실무협의체 운영 현황

-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함. 실무협의체는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TF팀,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2023년 5월 26일부터 과업 종료시까지 운영함

〈표 21〉 원주-MGoS 속의 공론장 회차별 진행 현황

주요 내용	
<p>〈1차 실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 5. 26. 13:30 ❖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추진 배경 공유 ▪ 추진원칙 및 기준 논의 ▪ 수정·보완 범위 논의 ▪ 추진계획 등 협의 	
<p>〈2차 실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 6. 16. 13:00 ❖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작성양식 및 작성수준 협의(총괄현황표) ▪ 추진계획 및 일정 협의 	
<p>〈3차 실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 6. 29. 9:30 ❖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1차 수정안논의(총괄현황표) ▪ 부서 배포용 자료 양식 협의 	
<p>〈4차 실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 8. 1. 15:00 ❖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초안 논의확정(총괄현황표) ▪ 부서 배포용 추진계획서 양식 논의 	
<p>〈5차 실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 8. 24. 13:00 ❖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목표별 수정보완 사항 논의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정안 논의 ▪ 최종보고회 준비사항 논의 	









1. 목표 변경사항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정·보완 사항

- 3번 : 민선8기 시정목표인 '건강하게 맘흔리는 원주'를 연계해 목표명 수정
- 5번 : 대상을 마을 단위에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해 목표명 수정
- 8번 : 민선8기 시정목표인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를 연계해 목표명 수정
- 9번 : 민선8기 시정목표인 '문화를 즐기는 원주'를 연계해 목표명 수정
- 13번 : 민선8기 시정목표인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연계해 목표명 수정
- 16번 :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목표명 수정

[표 1]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변경 전후 비교

UNSDGs		기존	수정	비고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좌동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좌동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든 시민에게 동네주치의를 도입하여 건강을 돌본다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수정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좌동	
	성평등 보장	마을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수정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좌동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좌동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사회적경제 주류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수정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생태환경 기반 창의문화산업을 육성해 문화로 혁신하는 도시모형을 만든다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수정

UNSDGs	기존		수정	비고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좌동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좌동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총폐기물 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좌동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원주를 만든다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수정
 14 해양생태계 보전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좌동	
 15 육상생태계 보전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좌동	
 16 인권·정의·평화	시민참여를 통해 생명·평화·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공동체를 실현한다	수정
 17 파트너십	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		좌동	

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본 연구는 행정, 주요이해관계자그룹(MGoS, 시민숙의위원회), 연구진 내 토론, 목표별 담당 부서 등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에 기반한 의견수렴과 숙의공론 등을 통해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함

〈표 2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2040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성평등 보장	성평등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총폐기물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해양생태계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육상생태계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제도·인권·평화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파트너십	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

1.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과정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목적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원주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임
 - 사회적 형평성, 경제발전,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원주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원주시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정합성을 갖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실행하는 촉진제이자 매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2040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과정 및 지속가능성 현황 진단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영역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기능

□ 기존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석 시사점

- 지방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음
 -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세부)목표 또는 전략별로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사회, 환경, 제도·행정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임
 - 전자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1:1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있지 않고 그 하위 세부목표 또는 전략에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활용하는 경우임. 대부분 지자체가 17개 목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후자는 2030년 혹은 204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값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함. 해당 지자체에서 경제, 사회, 환경, 행정 등 일반적인 4개 분야의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임
- 중앙정부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가 UNSDGs의 채택과 함께 변화하였으나 지표 개발과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음
 - 2006년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77개를 별도로 운용하고 평가하였음
 - 2018년에는 UNSDGs 체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에 설정한 지표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설정. 그러나 2020년 지속가능성 평가 시 전체 지표 중에서 40% 지표가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함
- 따라서 현행 지속가능발전지표 운용을 분석한 결과, 원주시에 적용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음
 - 평가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운용
 - 지표의 체계와 구조를 복잡하지 않게 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 통합 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계로 전환하고 해당목표에 맞는 목표(값) 설정
- 많은 지표보다는 핵심적인 목표지표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 운용
- 완벽한 체계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운용하면서 지역 사회 논의와 합의로 개선하는 단계적 운용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조 및 특징

-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추진계획 성과지표’로 운용함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설정함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함

〈표 23〉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지속가능발전목표 점검 지표		추진계획 점검 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	추진과제 및 단위·세부사업별 지표 (성과지표)	114개

2.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수정·보완 사항

- 2번 : 지역먹거리(로컬푸드) 확산 노력 및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로 수정
- 3번 : 기존 '방문건강 및 첨단기술 기반 건강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신규 추가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포괄하는 지표로 수정
- 5번 : 성평등 정책 초점을 마을 단위에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도록 확대한 점을 고려해 지표 수정
- 8번 : 민선8기 시정목표인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를 반영해, 기존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신규 추가된 사업들(ex. 기업유치 등)을 포괄하는 지표로 수정
- 9번 :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인프라 확대 등 신규 사업을 포괄하는 지표로 수정
- 13번 : 기후재난을 넘어 지역 안전 전반을 포괄하며, 지역 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
- 16번 : 측정 및 관리의 수월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원주시 사회조사) 지표인 '시정관심도'로 수정
- 17번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

〈표 24〉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전후 비교

SDGs	현행	수정
	목표지표	
1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	좌동
2	식량자급률	지역먹거리지수
3	동네주치의 도입률	시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점수
4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도	좌동
5	성평등 마을수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6	상수도 보급률	좌동
7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률	좌동
8	사회적경제 고용 비중	시민의 일자리 충분도
9	창의문화산업 종사자 비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종사자 비중

SDGs	현행	수정
	목표지표	
10	일반시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좌동
11	지역생활 만족도	좌동
12	폐기물 총발생량(kg/일·인)	좌동
13	녹색예산태깅 긍정영향비율	자연재해 안전 인식
14	소하천 수질(BOD 평균 등급)	좌동
15	원주 도심 연결녹지	좌동
16	정책만족도	시정 관심도('관심있음' 비율)
17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표 25〉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SDGs	목표지표
1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
2	지역먹거리 지수
3	시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점수
4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도
5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6	상수도 보급률
7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률
8	시민의 일자리 충분도

SDGs	목표지표
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종사자 비중
10	일반시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11	지역생활 만족도
12	폐기물 총발생량(kg/일·인)
13	자연재해 안전 인식
14	소하천 수질(BOD 평균 등급, 11개 하천 평균)
15	원주 도심 연결녹지
16	시정 관심도('관심있음' 비율)
1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률

3.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정의서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정의서

- 향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정의서에 5개년 연도별 추세 및 협력부서를 추가, 보완할 필요 있음

〈표 26〉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정의서

원주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						
SDGs	지표명	지표정의	산출방식	단위	출 처	취합부서
1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	취약계층이 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비율) ※취약계층 : 저소득층,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매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3가지 항목 (불만족/보통/만족) 중 '만족' 응답 비율	%	원주시	복지정책과
	목표값	30.6%(2020) → 40%(2025) → 60%(2030) → 80%(2040)				
2	지역먹거리 지수	지역먹거리(로컬푸드)의 지역별 확산노력 및 성과를 수치화한 것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매년 산출	등급 (S-E)	바로정보 (www.baroinfo.com)	로컬푸드과
	목표값	B(2022) → B(2025) → A(2030) → S(2040)				
3	시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점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원주시민의 인식 정도	매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5점 척도(매우나쁨/나쁜편/보통/좋은편/매우 좋음)의 평균 점수	점	원주시 (자체산출)	건강증진과
	목표값	3.30(2022) → 3.50(2025) → 3.75(2030) → 4.25(2040)				
4	원주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원주시민의 인식 정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인지도에 대한 설문 조사	%	원주시청 (자체산출)	기후 에너지과
	목표값	조사 없음(2020) → 60%(2025) → 70%(2030) → 80%(2040)				

원주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						
SDGs	지표명	지표정의	산출방식	단위	출 처	취합부서
5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원주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물음에 대한 원주시민의 인식 정도	매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5점 척도 (전혀공감하지않음/공감하지않는편/보통/공감하는편/매우공감)의 평균 점수	점	원주시 (자체산출)	여성가족과
	목표값	3.16(2020) → 3.50(2025) → 3.75(2030) → 4.0(2040)				
6	상수도 보급률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상수도보급률(%)= (급수인구÷총인구)×100	%	원주시 통계청	수도시설과
	목표값	95.6%(2021) → 97%(2025) → 99%(2030) → 99.9%(2040)				
7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률	2019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감축하여 2040년까지 순배출량 0(Net Zero) 달성하는 것임	(측정연도 배출량-흡수 및 제거량)/(기준년도 배출량-흡수 및 제거량)×100 *배출량은 에너지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흡수 및 제거는 흡수원,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	인벤토리에 기반한 산출	기후 에너지과
	목표값	2018년(기준점) 2025년 15%, 2030년 40% 2040년 100%				
8	시민의 일자리 충분도	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에 대한 원주시민의 인식 정도	매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5점 척도(전혀 그렇지않다/그렇지 않은편이다/보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	점	원주시 (자체산출)	경제진흥과
	목표값	2.46(2021) → 2.7(2025) → 3.2(2030) → 4.2(2040)				

원주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						
SDGs	지표명	지표정의	산출방식	단위	출 처	취합부서
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종사자 비중	전체 산업종사자수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수 비율	원주통계정보	%	원주시 (자체산출)	문화예술과
	목표값	2.3%(2020) → 2.5%(2025) → 3.5%(2030) → 5%(2040)				
10	일반시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일반시민 대비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진단 ※ 일반시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시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산출하여 비교	▶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정보접근수준 + 디지털정보역량수준 + 디지털정보활용수준	%	원주시 (자체산출) (참고자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과
	목표값	73%(국가, 2020) → 80%(2025) → 85%(2030) → 100%(2040)				
11	지역생활 만족도	원주시 사회조사 > 사회통합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지역생활 만족도	11점 척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보통), 10(매우 만족한다)	점	원주시 사회조사	도시계획과
	목표값	6.28점(2022) → 7점(2025) → 8점(2030) → 10점(2040)				
12	폐기물 총 발생량	1일 1인당 폐기물총발생량	(1일 폐기물총발생량 / 총인구수)	kg	원주시 통계청	자원순환과
	목표값	6.2kg(2019) → 5.58kg, 10% 감량(2025) → 4.96kg, 20%(2030) → 3.1kg, 50%감량(2040)				

원주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						
SDGs	지표명	지표정의	산출방식	단위	출 처	취합부서
13	자연재해 안전 인식	지역 내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원주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 정도	매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중 '자연재해' 항목에 대한 5점 척도(매우불안/비교적불안/보통/비교적 안전/매우안전)의 평균 점수	점	원주시 (자체산출)	안전총괄과
	목표값	3.65(2022) → 3.80(2025) → 4.0(2030) → 4.5(2040)				
14	소하천 수질 (BOD 평균 등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mg/ℓ) 평균등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mg/ℓ) 평균등급(1이하 '매우 좋음', 2이하 ' 좋음', 3이하 '약간 좋음', 5이하 '보통', 8이하 '약간 나쁨', 10이하 '나쁨', 10초과 '매우 나쁨')	등급	원주시 통계청 환경부	환경과
	목표값	좋음(2020) → 좋음(2025) → 매우좋음(2030) → 매우좋음(2040)				
15	원주 도심 연결녹지	원주시 시설녹지 중 연결녹지 개소	매년 실시하는 원주시 통계연보 결과(시설녹지현황 중 연결녹지 조사)	개	원주시 (자체산출)	공원녹지과
	목표값	1개(2021) → 10개(2025) → 20개(2030) → 40개(2040)				
16	시정관심도	원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정도(비율)	매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3가지 항목 (관심없음/보통/관심 있음) 중 '관심있음' 응답 비율	%	원주시 (자체산출)	기획예산과
	목표값	28.8%(2021) → 35%(2025) → 50%(2030) → 75%(2040)				

원주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						
SDGs	지표명	지표정의	산출방식	단위	출 처	취합부서
17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률	평가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률을 산출하여 목표지표의 달성 정도를 진단	해당년도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률 산출	%	원주시 (자체산출)	기후 에너지과
	목표값	-(2023) → 60%(2025) → 80%(2030) → 100%(2040)				



V.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제1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개요

제2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

제3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총괄 현황

제4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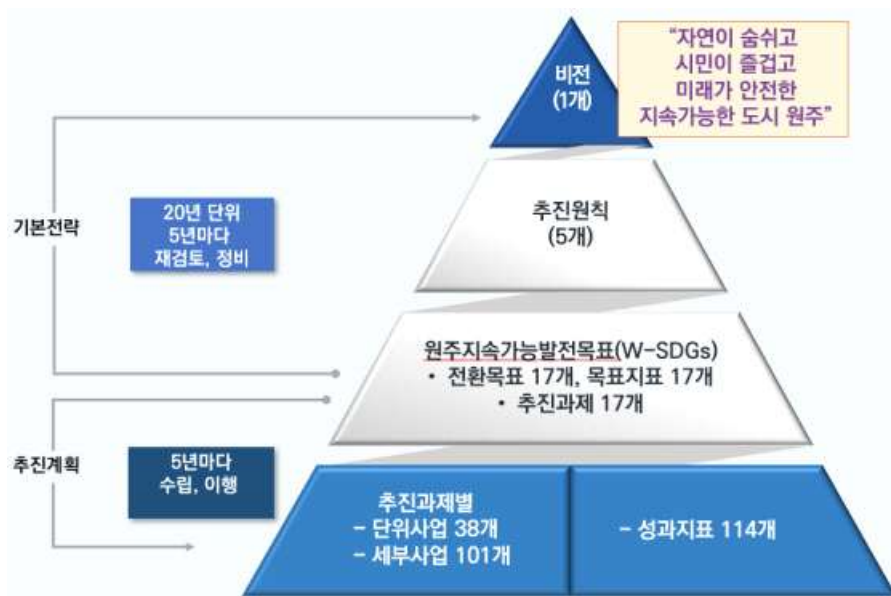
1.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개요

□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3~2027년
- 공간적 범위 : 원주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추진과제 17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101개, 목표지표 17개, 성과지표 114개

□ 추진계획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임
- 추진계획에는 개별 추진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추진내용, 단위사업, 추진일정, 투입예산 등이 포함됨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기존 명칭인 '이행계획'에서 '추진계획'으로 변경함



〈그림 19〉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체계

□ 수립기준 및 원칙

- 원주시의 다음세대를 고려한다 (people)
- 원주시의 자연 건강성을 지킨다 (planet)
- 원주시의 다양한 참여를 증진한다 (partnership)
- 원주시의 사회적 정의를 지향한다 (peace)
- 원주시의 포용경제를 실현한다 (prosperity)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추진과제 성격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17대)와 추진과제(17개), 단위사업(38개), 세부사업(101개)은 선행연구와 원주시 민·관·산·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도출함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그동안 원주시 사회조사에서 도출된 키워드, 공약·시정계획, 관련 주요 행정계획, 도시잠재력·미래·지역 이슈 키워드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함
 - 원주시의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그룹(W-MGoS; Wonju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인 시민숙의위원회, 행정, 원주지속협 등의 의견을 수렴함
 - 17개 목표 관련 주요 부서 의견 반영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과제는 아래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함
 - 지속가능한 원주를 위한 ‘전환’을 돕는 목표
 - 기후위기, 지역 인구소멸 원인으로부터 삶을 지키는 위기관리 목표
 - 원주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실사구시적 목표
 - 원주시의 각종 이슈를 관통하여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목표
 - 민선 8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목표

□ 추진전략

- 기후위기 대응
 -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저감 노력, 취약성 대비 정책 등 기후위기 대응 추진
 - :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 : 생태하천, 녹지공간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드러난 사회적 위기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와 원주에서 드러난 사회적 문제와 건강,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의 근본적 대응 추진
- 불평등 해소
 - 돌봄, 세대, 성평등, 디지털불평등, 물복지, 기후취약계층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 원주시민들의 밀접한 생활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영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경제로 전환 모색
- 지역 인구소멸 대응
 -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근본적 대응 추진

□ 5개 축(5Ps)과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2015년 채택한 UN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됨

-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통합, 경제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임
-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United Nations, 2015:3-4)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립함

영역	5P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추진과제 (17개)
환경 보전	지구환경 (Planet)	G6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
		G12	총폐기물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스템 구축
		G13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G14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
		G15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도시숲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전제 조건 및 방법	평화 (Peace)	G16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시정 참여 거버넌스 혁신
	파트너십 (Partnership)	G17	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시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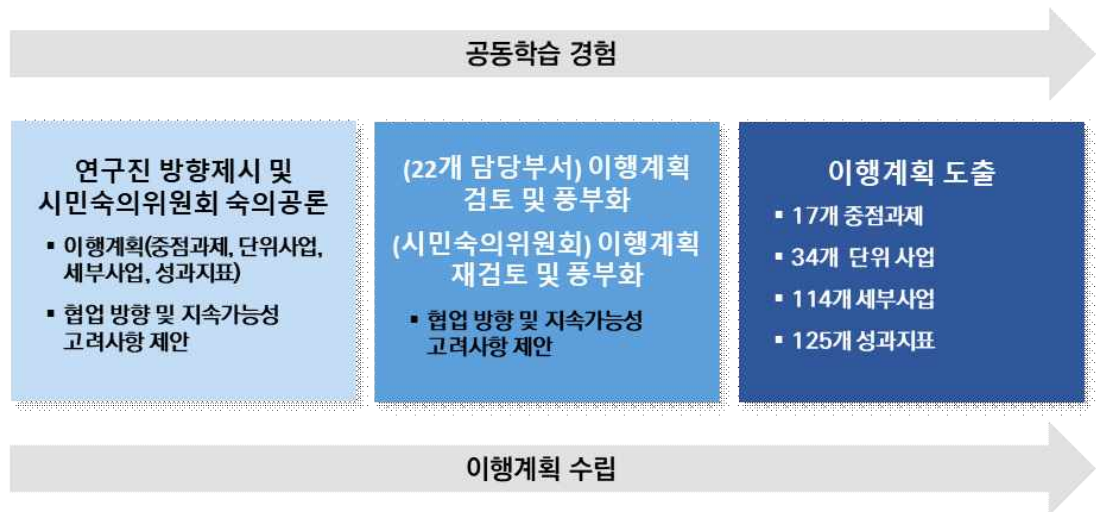
〈표 27〉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5P 구조도

영역	5P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추진과제 (17개)
사회 통합	사람 (People)	G1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빈곤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G3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시민 건강 돌봄 인프라 확대
		G4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ESD 시스템 확산 구축
		G5	성평등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
		G10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경제 성장	번영 (Prosperity)	G2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기반 구축
		G7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추진
		G8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기반 마련
		G9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예술산업 인프라 구축
		G11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일터-삶터-놀이터 포용마을 정착

2.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과정

□ 기존계획 수립시 부서협의(2022년 수립)

- 2022년 원주-MGoS(시민속의위원회) 6개 그룹별 속의공론장을 2~3회씩 운영, 행정 목표별 담당 부서교육, 설명회, 컨설팅, 내부 논의 등을 거쳐 17개 중점과제, 34개 단위사업, 114개 세부사업, 125개 성과지표를 도출함
- 연구진은 시민속의위원회 속의 공론을 거쳐 원주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중점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초안을 원주시 현황에 맞게 작성하여 원주시 행정 내 담당 부서에 제공함
- 담당 부서는 교육, 설명회, 컨설팅과 동시에 내부논의를 거쳐 초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진에 제안함. 이 과정을 통하여 W-SDGs에 관한 전반적인 공동학습이 이루어짐
-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한 이행계획을 시민속의위원회에 공유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함
- 마지막으로 이행계획(안)에 대해 담당 부서 최종 의견수렴 후 최종 이행계획을 도출함



〈그림 20〉 기존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

□ 변경계획 수립시 부서협의(2023년 수정·보완)

- 현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함. 의견수렴 과정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으며,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서 선정 이유
 - : 추진과제 업무 연관성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부서 검토
- 추진과제 선정 취지, 목표 확정 프로세스
 - 2022년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을 연계하여 수정·보완
 - 원주시 중장기계획 및 사업계획, 민선8기 공약 등 분석
 - 지역 전문가 자문 및 실무협의체(원주시/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연구진) 논의

- 수립된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정합성 검토
- 변화된 정책환경(행정수요, 민선8기, 일몰사업 등)과 연계해 수정
-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원주시가 집중과 선택할 만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적극 연계해 반영
- 성과지표 조정
- 신규 추진과제의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추진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독려
- 협조부서 선정, 협조 위원회 선정, 협력단체 선정, 거버넌스 구축 검토
 - 향후 추가 수정·보완 시, 타 부서와 협업으로 할 수도 있음. 협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작성할 경우, 세부내용을 더욱 풍부화할 수 있음
- 기대효과의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요소에 대한 이해
 - 모든 사업은 4가지 관점에서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함. 이를 통해 포괄성, 연계성 향상을 도모함
- 단위사업의 풍부화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및 실행방안 제시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추진과제, 38개 단위사업을 도출함

〈표 2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과제

UN SDGs	17대 원주 SDGs	17개 추진과제	38개 단위사업	부서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빈곤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① 취약계층 상호지지·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② 빈곤층 자립지원 체계 구축	생활보장과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기반 구축	①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을 위한 기반 마련	로컬푸드과 기업지원 일자리과
			②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확산	농정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시민 건강 돌봄 인프라 확대	①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건강증진과
			② 첨단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③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ESD 시스템 확산 구축	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 및 양적 확산	기후에너지과
			②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체계 구축	
 성평등 보장	성평등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	①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가족과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	① 시민중심 먹는물 관리 혁신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② 농촌지역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추진	① 시민참여형 2040 탄소중립로드맵 수립 및 추진	기후에너지과
			② 탈탄소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과

UN SDGs	17대 원주 SDGs	17개 추진과제	38개 단위사업	부서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기반 마련	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투자유치과
			②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지원 일자리과 경제진흥과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제진흥과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예술산업 인프라 구축	① 문화산업 기반 강화	문화예술과
			② 예술산업 기반 조성	
 10 REDUCED INEQUALITIES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기반 구축	정보통신과
			②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일타살타놀이터 포용마을 정착	① 생활권 중심의 15분 거점생활권 사업	도시계획과
			② 도심 연결 인프라 구축	건설과
			③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과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총폐기물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① 폐기물 원천 감량 제도 강화 및 실천 확산	자원순환과
			② 자원순환교육장 운영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① 기후영향예산제 도입	기후에너지과
			②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안전총괄과
 14 LIFE BELOW WATER 해양 생태계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	① 원주천 친수환경 조성	생태하천과
			② 생태하천 조성 방안 마련	환경과
			③ 하천거버넌스 구축	생태하천과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도시숲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① 시민참여형 도심 녹지공간 확대	공원녹지과
			②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	환경과

 <p>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p> <p>제도. 인권. 평화</p>	<p>시민참여를 통해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p>	<p>시정 참여 거버넌스 혁신</p>	<p>①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p>	<p>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p>
 <p>17 PARTNERSHIPS FOR THE GOALS</p> <p>파트너십</p>	<p>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p>	<p>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시스템 구축</p>	<p>① 지속가능발전 추진 제도화</p>	<p>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p>
			<p>②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자치역량 강화</p>	<p>기후에너지과</p>



2040 W-SDGs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총괄 현황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 : 30.6%(2020) → 40%(2025) → 60%(2030) → 80%(2040)						
Goal 1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않는 원주를 만든다	빈곤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❶ 취약계층 상호지지·지원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사업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횟수 및 지원건수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 건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빈곤지역 주민 소통 플랫폼 (온마을쉼터) 이용 및 참여 건수	
				천사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천사 후원 수혜자 지원 건수 및 금액	
		❷ 빈곤층 자립지원 체계 구축	저소득층 자립지원 운영	자활참여자 성공률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마음건강 및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지역먹거리지수 : B(2022) → B(2025) → A(2030) → S(2040)						
Goal 2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기반 구축	①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을 위한 기반 마련	로컬푸드-사회적경제 연계 자원조사	로컬푸드-사회적경제 연계 자원수	로컬푸드과
				농촌·도심 상호교류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오프라인 직매장·직거래 공간 운영 횟수	
					온라인 쇼핑몰(원주몰) 매출액	로컬푸드과
					원주새벽시장 매출액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②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확산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횟수	농정과
				운영단체 지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모임 횟수	
					사회적농업 운영단체 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과정 수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시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점수 : 3.30(2022) → 3.50(2025) → 3.75(2030) → 4.25(2040) 원주시 사회조사(격년)							
Goal 3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시민 건강 돌봄 인프라 확대	①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읍면동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횟수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자 수		
				② 첨단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AI · 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AI · IO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 수
			건강리더 양성 과정		건강리더 양성자 수		
			③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건수 (2023 대비)		체육과
					체육회관 건립 추진율		
				생활체육 참여 및 활성화 지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록 클럽 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도 : - (2020) → 60%(2025) → 70%(2030) → 80%(2040)						
Goal 4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ESD 시스템 확산 구축	①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활성화 및 양적 확산	지역사회 ESD 교육 자원을 활용한 ESD 활성화 지원	ESD 거버넌스 참여 기관 수	기후에너지과
					생애주기별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개발 수	
			②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체계 구축	지역 ESD 시민 배움터 확산 지원	지역 ESD 시민배움터 프로그램 수	
				지역 평생교육 체계 내 ESD 연계 지원	평생교육 내 ESD 연계 컨설팅 및 교육 횟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 3.16(2020) → 3.50(2025) → 3.75(2030) → 4.5(2040) ※ 원주시 사회조사						
Goal 5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여성 커뮤니티센터 운영	여성 커뮤니티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성친화마을 조성 및 운영 수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	여성친화도시 시민 홍보 횟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횟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상수도 보급률 : 95.6%(2021) → 97%(2025) → 99%(2030) → 99.9%(2040)						
Goal 6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	① 시민중심 먹는물 관리 혁신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실적	수도시설과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수질안심도	수도운영과
				정수처리 고도화	고도처리시설 운영 여부	
			② 농촌지역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	농촌지역 수돗물공급 관망 확장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설치 실적	수도시설과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정비 실적	
					관망관리체계 구축 공정률	수도운영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	지하수 오염방지 관련사업 홍보 횟수	
					지하수 실태조사 실시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및 비용지원 가구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온실가스 총 배출량 감축률 : 기준점(2018) → 15%(2025) → 40%(2030) → 100%(2040)						
Goal 7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추진	① 시민참여형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원주시 탄소배출량 조사 (인벤토리)	원주시 탄소배출량 조사 (인벤토리) 실시	기후에너지과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이행률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운영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운영 횟수	
			②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기업 ESG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 개소	
				시민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용·복합 설치 지원 개소 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시민의 일자리 충분도 : 2.46(2021) → 2.7(2025) → 3.2(2030) → 4.2(2040) ※ 원주시 사회조사						
Goal 8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기반 마련	❶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업유치 기반조성 강화	기업유치 기반조성 면적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확대	유치기업 수	
			❷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기업지원 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경제진흥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금액	경제진흥과
				민·민 주체 간 소통기구 활성화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청년세대 등 신규주체 발굴 및 성장지원	청년세대 등 신규 주체 역량강화 교육(또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창의문화산업 종사자 비중 : 1.5%(2020, 추정) → 6%(2025) → 11%(2030) → 20%(2040) ※문화콘텐츠산업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Goal 9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예술산업 인프라 구축	① 문화산업 기반 강화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여부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여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 사업 추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 사업 추진 여부	
			② 예술산업 기반 조성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육성 예산 규모 증감률(전년 대비)	
				문화예술시설 확충	시민 1인당 문화예술시설 면적	
				문화예술자원 콘텐츠사업화 지원	문화예술자원 콘텐츠사업화 개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일반시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73%(2020, 국가) → 80%(2025) → 85%(2030) → 100%(2040)						
Goal 10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❶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기반 구축	디지털 사각지대 추가 발굴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장소 수	정보통신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교육인원 수	
					SW미래채움교육 참여자수	
			❷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시행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연차별 시행률	
				디지털 포용 추진기관 협의	디지털 포용 추진기관 협의 횟수	
				시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배움터 서포터즈 인원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지역생활 만족도 : 6.28점(2022) → 7점(2025) → 8점(2030) → 10점(2040)						
Goal 11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일터-삶터-놀이터 포용마을 정착	① 생활권 중심의 15분 거점 생활권 사업	15분 거점생활권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거점생활권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과
				15분 거점생활권 공간구조 재편 관련 민·관 거버넌스 운영	거점생활권 설정 및 기능 부여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횟수	
				15분 거점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거점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여부	
			② 도심 연결 인프라 구축	도심 간 접근성 개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율	건설과
				도심 연계 교통망 구축	동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추진율	
			③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운영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이용자 수	복지정책과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폐기물 총발생량(kg/일 . 인) : 6.2kg(2019) → 5.58kg(2025, 10%감량) → 4.96kg(2030, 20%감량) → 3.1kg(2040, 50%감량)						
Goal 12	총 폐기물 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스템구축	① 폐기물 원천 감량 제도 강화 및 실천 확산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추진율	자원순환과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민관산학 거버넌스 자문회의 개최 수	
				쓰레기무단투기관리 강화	무단투기 단속 건수	
				영농폐기물처리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집하장설치수)	
			② 자원순환교육장 운영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자원순환교육장 설치	자원순환교육장 설치 여부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횟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거점수거시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개소 수	
				자원순환 문화 확대 교육	자원순환 교육실시 횟수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 건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자연재해 안전 인식 : 3.65(2022) → 3.80(2025) → 4.0(2030) → 4.5(2040) ※원주시 사회조사						
Goal 13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❶ 기후영향 예산제 도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여부	기후에너지과
				원주시민 체감형 과제 선정 및 점검·평가	원주시민 체감형 과제 수 및 점검·평가 여부	
			❷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또는 개편)	기후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또는 개편) 여부	안전총괄과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운영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운영 횟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연도별 추진율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소하천 수질 (BOD 평균 등급, 11개 하천 평균) : 좋음(2020) → 좋음(2025) → 매우 좋음(2030) → 매우 좋음(2040)						
Goal 14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	① 원주천 친수환경 조성	원주천 르네상스 추진	원주천 르네상스 추진율	생태하천과
			② 생태하천 조성 방안 마련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개발부하량 범위 내 할당률)	환경과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공정률	
			③ 하천거버넌스 구축	통합물관리 시스템구축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여부	생태하천과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률	
				하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 횟수 소하천거버넌스 운영 횟수	
			생태하천 시민모니터링	생태하천 시민모니터링 횟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원주 도심 연결녹지 : 1개(2021) → 10개(2025) → 20개(2030) → 40개(2040)						
Goal 15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도시숲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① 시민참여형 도심 녹지공간 확대	도심 녹지공간 현황조사	도심 녹지공간 현황조사 실시	공원녹지과
				도심 녹지공간 조성 확대	시민 1인당 공원 면적	
				도심 녹지공간 보호 제도 강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횟수	
			②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	포유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포유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여부	환경과
				로드킬 및 조류충돌 감소를 위한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구축	로드킬 및 조류충돌 감소를 위한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수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시정 관심도(‘관심있음’ 비율) : 28.8%(2021) → 35%(2025) → 50%(2030) → 75%(2040) ※ 원주시 사회조사						
Goal 16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공동체를 실현한다	시정 참여 거버넌스 혁신	①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시민제안 신청 건수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 대비 반영 건수(반영율)	
				시정모니터제도 활성화	시정모니터원 제보/건의 건수	자치행정과
			② 참여 방식의 혁신	위원회 참여 주체 다양화	청소년·청년, 장애인, 다문화 등 참여 비율	기획예산과
				주민체감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대비 공개 비율	정보통신과
				시민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자율방법 합동 순찰 횟수	안전총괄과

UNSDGs	W-SDGs	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률 : -(2020) → 60%(2025) → 80%(2030) → 100%(2040)						
Goal 17	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시스템 구축	❶ 지속가능발전 추진 제도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횟수	기후에너지과
				대상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	지속가능발전 교육 인원 수 (공무원, 시민)	
				주민참여형 W-SDGs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발전 추진점검 공론장 운영 횟수	
			❷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자치역량 강화	공동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공동체 수	
				주민주도형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주민주도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계획서

U N 목 표	Goal 1.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원 주 목 표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목 표 지 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	2020	2025	2030	2040
		30.6%	40%	60%	80%

1 빈곤층의 경제적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2019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을 발표하며 한국은 경제적 발전 대비 사회 부문의 투자가 부족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저성장, 인구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함. 이와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 사회적 갈등요인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OECD 삶의 만족도 지수²⁶⁾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2.9%(2011년~2016년 기준)로 갈수록 떨어짐(2001~2010년 연평균 성장률 4.4%)
 - 노인 상대 빈곤율의 경우, 한국은 45.7%(2015년 기준)인 반면, 미국은 20.9%, 독일 9.5%, OECD 12.5%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임
-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차상위 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자원 연계 기반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맞춤형 개편을 실시함
- 2016년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²⁷⁾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민관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²⁸⁾을 통과시킴

26) Better Life Index 중 Life Satisfaction(2017)

27) 국무총리(위원장), 14개 관계부처 장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구

28)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복지기관, 지역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제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 사례

- 2019년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을 통해 정부는 현 사회보장제도 하에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생겨난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중위소득 40% 이하)이며²⁹⁾, 국민연금 장기체납 및 납부 예외³⁰⁾에 따른 미수급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함
 - 특히 양극화와 만성빈곤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이 있어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최저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도 새로운 문제로 지적함
 - 이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12대 중점과제 중 소득분야 과제로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를 제시하고, 당시 89만명(2018년 기준)이던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명으로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는 상대 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40년 1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강원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만 1,493명(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4.6%임³¹⁾. 연도별로는 2017년 6만 627명, 2018년 6만 7,064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군구별 현황은 원주시가 1만 4,518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가 1만 4,4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³²⁾ 이어 강릉시(1만 577명), 속초시(4,761명), 동해시(4,276명), 삼척시(3,574명) 등이 뒤를 이음
 - 보장구분별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5만 4,684명으로 가장 많고 주거급여 5만 1,685명, 생계급여 4만 8,803명, 교육급여 1만 1,428명 순(2017년 기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전담팀을 설치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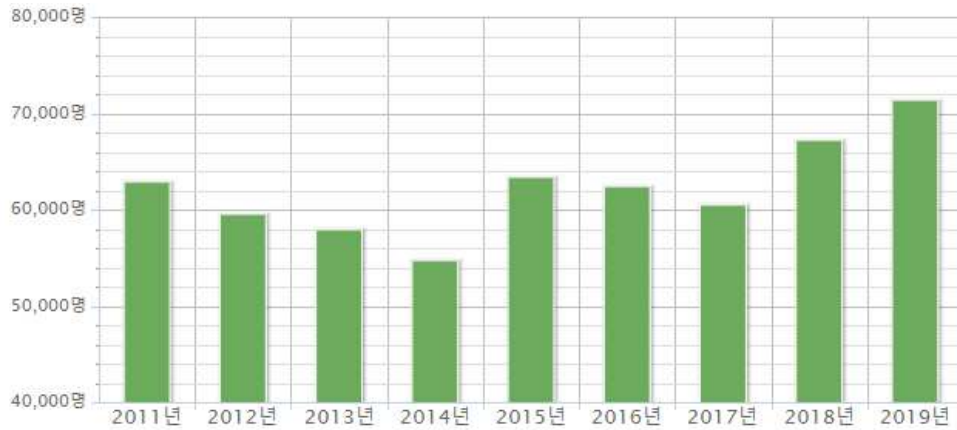
29)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30) 2018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35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7.0%임

31) 강원통계정보. 2019년도 기준 강원도 총 인구는 156만 571명임

32) 원주시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 6,718명으로 증가함 (2021 원주시통계연보)

- 수급자의 가구 유형은 일반세대(29.9%) 비중이 가장 많았고 노인(27.6%), 장애인(21.0%), 모자·부자세대(10.2%) 순을 기록함



강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추이, 강원통계정보

-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만족’ 응답이 40%를 기록함. 반면 ‘보통’ 42.7%, ‘불만족’ 17.3%임(평균 3.30점)

강원도 시군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단위:%)

구분	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점)	
강원도	100.0	17.3	42.7	40.0	3.30	
시군별	춘천시	100.0	22.0	51.1	26.9	3.05
	원주시	100.0	21.5	47.9	30.6	3.13
	강릉시	100.0	14.6	35.8	49.5	3.45
	동해시	100.0	18.8	41.2	40.1	3.33
	태백시	100.0	19.9	41.1	39.0	3.24
	속초시	100.0	12.8	27.7	59.5	3.58
	삼척시	100.0	10.0	41.2	48.8	3.51
	홍천군	100.0	13.3	44.9	41.7	3.38
	횡성군	100.0	10.0	29.3	60.7	3.66
	영월군	100.0	11.1	39.1	49.8	3.55
	평창군	100.0	15.9	41.4	42.7	3.32
	정선군	100.0	12.0	34.6	53.3	3.53
	철원군	100.0	16.6	49.8	33.6	3.21
	화천군	100.0	6.5	36.2	57.3	3.70
	양구군	100.0	16.6	39.5	43.9	3.37
	인제군	100.0	13.1	46.7	40.2	3.37
고성군	100.0	13.7	34.9	51.4	3.45	
양양군	100.0	20.0	38.0	42.0	3.28	

자료: 2020 강원도의 사회지표(2021)

- ‘만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횡성군(60.7%)으로, 속초시(59.5%), 화천군(57.3), 정선군(53.3%), 고성군(51.4%)이 뒤를 이음. 반면 원주시는 30.6%로 춘천시(26.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임
- 평균(5점 만점)의 경우, 화천군이 가장 높은 3.70점이었으며, 횡성군(3.66점), 영월군(3.55점), 정선군(3.53점)이 뒤를 이음. 가장 낮은 곳은 춘천시로 3.05점을 기록함. 원주시의 경우, 춘천시(3.05점)의 뒤를 이어 3.1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강원도는 ‘강원비전 2040’ 을 통해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프로그램 지속 발굴 및 고도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함
- 원주시는 민선 7기 복지분야 공약사항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를 내세우고 11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다만 복지관, 센터, 도서관 건립 등 하드웨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세부과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행복드림센터 건립, 제2장애인 복지관 건립, 직업재활시설 건립 및 주단기보호소 확충,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난감도서관 건립, 태장1동 행정복합문화공간 조성, 단구동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임
- 원주시의 사회복지대상자의 보장별 현황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만 732명, 한부모 가족이 4,365명, 장애인 복지가 1만 8,299명임(2019년 기준)³³⁾

원주시 사회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단위:가구, 명)

국민기초 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1,661	16,718	6,924	10,732	1,878	4,365	5,251	18,299

자료: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2020), 2021 원주시통계연보

- 원주시의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만족’ 30.6%, ‘보통’ 47.9%, ‘불만족’ 21.5%이며, 평균 점수는 3.13점임
 - 이 가운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60~69세

33) ‘국민기초 생활보장’ 통계치의 경우, 2021 원주시통계연보 자료임

40.1%, 70세 이상 46.0%), 연령이 내려갈수록 만족도가 감소해 13~19세의 경우, 6.9%에 그침

원주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만족도(단위:%, 점)

구분	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점)	
원주시	100.0	21.5	47.9	30.6	3.13	
지역	동부	100.0	20.9	48.8	30.4	3.13
	읍면부	100.0	23.4	45.2	31.4	3.11
성별	남자	100.0	21.6	49.3	29.0	3.09
	여자	100.0	21.3	46.6	32.1	3.16
연령	13~19세	100.0	25.3	67.8	6.9	2.88
	20~29세	100.0	23.5	62.9	13.6	2.87
	30~39세	100.0	27.8	53.1	19.1	2.91
	40~49세	100.0	22.6	51.5	25.9	3.05
	50~59세	100.0	19.7	42.2	38.1	3.25
	60~69세	100.0	19.6	40.3	40.1	3.28
	70세 이상	100.0	14.9	39.1	46.0	3.40

자료: 2020 원주시사회조사보고서(2021)

- 원주시는 2018년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목표를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6대 핵심전략³⁴⁾ 중 하나로 ‘저소득 자립지원’을 제시함
 - 세부사업은 ‘자활사업 확대 추진’,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사회적 일자리 연계 자립지원’,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등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 이 중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³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외에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수시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생활보장과)	수급자 발굴, 지원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천사지킴이 발굴

자료: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2018), 원주시

34) 커뮤니티 케어, 저소득 자립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여성 가족보육,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사회보장 기반 구축

35)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가구, 건)		1,500	1,575	1,654	1,737	1,82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9,498	30,982	31,000	32,000	33,000	
	지방비	소계	2,950	6,196	6,200	6,400	6,600
		시도비	2,065	3,098	3,100	3,200	3,300
		시군구비	885	3,098	3,100	3,200	3,300
국비	26,548	24,786	24,800	25,600	26,400		

자료: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2018), 원주시

- 원주시는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을 수립(2014)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도 개정(2016)함. 이를 근거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함
 - 하지만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력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음. 실제 원주시 25개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137명(2021년 기준)이며, 1인당 약 330가구의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원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마련한 지역참여예산제³⁶⁾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봉산동 등에서 ‘상호부조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함. 이는 지역 내 민간단체와 대학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업한 최초 사례로 향후 민관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음
 - 상호부조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은 홀로 사는 고령자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계 재무상담을 통한 가용소득 증대와 채무 해결, 생활상담을 통해 발견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연계활동을 기본으로 함. 이와 함께 식사모임과 공동취미노동 프로그램 개발, 주민 상호 간 병원

36)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함께 해결 실험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강릉원주대학교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함. 예산 제안, 프로젝트 선정,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함

동행과 말벗, 집수리 가사활동지원 등 생활응원 사업도 진행함

-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에는 원주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원주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이 담겨 있음. 세부적으로는 ‘고령자 친화마을 및 테마형 고령자 주거단지 조성’, ‘원주형 커뮤니티 주택 지원’, ‘원주시 커뮤니티 케어 지원센터 설치’, ‘주민주도형 아이돌봄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이는 원주 지역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지역공동체를 통해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원주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라는 정부정책에 발을 맞추은 동시에 지역 내 협동조합, 대학 등 민관협력을 모색하며 복지안전망을 꾸준히 다져오고 있는 만큼, 2040년 미래 비전을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달성을 위해 원주시는 ‘취약계층과 빈곤층의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절대빈곤 해소, 상대빈곤의 최소화를 핵심 방향으로 가져가야 함. 그간 지역사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절대빈곤 종식에 대한 공감대는 물론 비급여 빈곤층, 노동빈곤층과 같은 상대빈곤 문제 역시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보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이에 원주시는 중장기적으로 빈곤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가칭 ‘원주희망기금’을 마련, 안전망을 만들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 관련조례 제정 및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내 빈곤층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절대빈곤을 즉시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상대빈곤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망 마련에 집중하고자 함

□ 추진전략

- 취약계층 즉시 포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선제 발굴 및 초기 발굴을 통해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적시에 보장
-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경제·사회적 안전망 마련
 - 빈곤이 사회적 고립으로, 사회적 고립이 빈곤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빈곤층 포함)간 소통활성화 사업 마련
- 민·관 거버넌스 기반 복지자원 연계
 -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다양한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 확대
- 천사운동 활성화 통해 지역 내 빈곤층 발굴 및 복지안전망 확대 도모
 - 지역 대표 풀뿌리 나눔운동 안착

□ 추진계획

- ① 취약계층 상호지지·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사업 확대
 - 기획조사 확대를 통해 신 빈곤계층 진입 가정 즉시 발굴 및 지원
 - 빈곤 위기가정 선제 발굴 및 지원
 -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지원
 - 의료 장례 돌봄 등 긴급생활지원 확대
 - 빈곤 지역 주민 소통 플랫폼 운영
 - 생활권 내 지역 기반 플랫폼(온마을쉼터 등) 통한 안정적 관계망 구축
 - 천사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복지정책과]
 - 천사운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나눔 인식 확산 및 실천 활성화
- ② 빈곤층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저소득층 자립지원 운영 [생활보장과]
 - 자립·자활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 저소득층 마음건강 및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생활보장과]
 - 심리상담, 운동 등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고립감 예방 및 해소
 - 가사·간병·말벗 등 가정방문을 통한 빈곤층 일상생활 안정 도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횟수 및 지원 건수	횟수 및 건수	조사횟수 3 지원건수 106	조사횟수 3 지원건수 160	조사횟수 3 지원건수 160	조사횟수 3 지원건수 160	조사횟수 3 지원건수 160	1~2차 조사완료 3차 조사중	
긴급생활지원 건수	건수	2,500	2,500	3,000	3,000	3,200		
빈곤지역 주민 소통플랫폼 (온마을컴터) 이용 및 참여 건수	건	주민주도교육 2건 방송국 및 컴퓨터 이용 33건 통합돌봄사비 스제공35건	-	-	-	-	공모사업 으로 2023년 종료	
천사 후원 수혜자 지원 건수 및 금액	천사 후원 수혜자 지원 건수	건수	2,757	2,895	3,040	3,192	3,351	매년 5%씩 증가
	천사 후원 수혜자 금액	천원	411,698	432,283	453,897	476,592	500,421	
자활참여자 성공률 (탈수급자수+취업자수/자활참여자수)	%	25	25	27	27	30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명	4,000	4,000	4,000	4,100	4,10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사업 확대																					
취약계층 경제적 안정 지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천사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저소득층 자립지원 운영																					
저소득층 마음건강 및 일상 생활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1,231,182	10,862,310	11,190,771	11,407,799	11,641,633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사업 확대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취약계층 경제적 안정 지원	국도비		2,183,750	2,292,937	2,407,583	2,407,583	2,407,583	
	시비		242,750	254,887	267,631	267,631	267,631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국도비		200,000	-	-	-	-	2023년 종료
	시비		-	-	-	-	-	
천사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국도비		-	-	-	-	-	
	시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저소득층 자립지원 운영	국도비		4,041,330	4,122,000	4,204,000	4,288,000	4,373,000	
	시비		306,190	312,000	318,000	324,000	330,000	
저소득층 마음건강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	국도비	3,325,750	2,880,714	2,883,595	2,886,479	2,889,365	
		시비	591,412	677,491	769,050	873,333	992,109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국도비	255,000	219,646	234,143	249,597	266,071	
		시비	45,000	62,635	66,769	71,176	75,874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협업부서: 경로장애인과 위원회: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상호부조 사업(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복지관, 요양원 등) 중간지원조직 관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 기대효과

- (경제) 빈곤층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감소 및 경제활력 제고
- (사회) 복지사각지대최소화에 따른 사회 갈등 및 불안 요인 감소
- (환경) 잠재적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서 빈곤층 증가 최소화
- (거버넌스) 민관 자원 연계 및 협업 기반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추진 부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737-2610) / 지역복지팀장 백옥경(☎2621) / 담당자 함은아(☎2622) 담당자 이윤선(☎2623) 희망복지팀장 운영애(☎2601) / 담당자 박혜진(☎2602) 담당자 심성은(☎2604)
	생활보장과장 김영열(☎737-2660) / 자립지원팀장 장연희(☎2671) / 담당자 신춘희(☎2673) 담당자 반승희(☎2672)

U N 목 표	Goal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원 주 목 표	시민참여로 원주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목 표 지 표	지역먹거리지수	2022	2025	2030	2040
		B	B	A	S

2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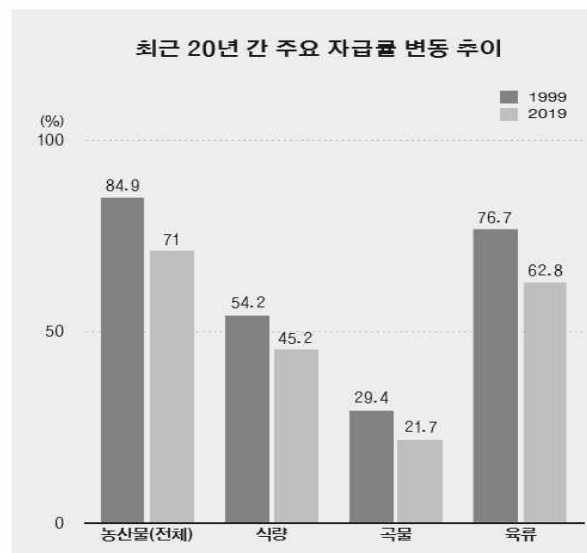
- 농업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며, 농업 활동 과정에서 식량안보,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및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지님. 최근에는 농업 활동으로 함께 치유하고 서로 돌보는 사회적 농업의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짐
- 이처럼 농업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여러 위기 상황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56만 5000ha로 1975년 224만ha 대비 65만 9000ha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43년 동안 연평균 0.8%가 감소한 것임
 - 농가 인구는 2020년 기준 231만 4000명으로 1970년 1442만 2000명 대비 84%가 감소했는데, 이는 농민이 전체 인구 중 절반가량에서 4.3%로 줄어든 것임. 농가 수는 100만 7가구로 1970년 248만 3000가구 대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함
 - 농가 고령화³⁷⁾ 인구는 1970년 4.9%에서 2020년 42.3%로 증가하였고,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는 1970년 11.4명에서 2019년 1073.3명으로 증가함
 - 농가소득은 2019년 기준 과거 50년간 8.4% 증가했으나 겸업 소득이나 사업 외 소득이 주로 증가하여 여전히 농업소득은 큰 변화 없이 1,000만 원대에 머무름
-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이 위협 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37) 65세 이상 인구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UN)

식량자급률은 45.2%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9년 54.2% 대비 연평균 -0.4%의 낙폭을 보이며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 쌀의 경우 2018년 기준 자급률은 97.3%로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나 밀의 경우 1.2%로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식습관 변화로 1인당 연간 밀 소비량(32.2kg)이 쌀(61kg)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것을 생각할 때 위험 요소임

최근 20년 간 주요 자급률 변동 추이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 원주시 통계연보(2021)에 따르면, 원주시의 인구는 2007년 30만 명을 넘은 이후 2020년에는 35만7천 명을 넘어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였음. 농가 인구는 2019년 17,659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21,336명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경지면적은 2015년 8,671ha 대비 2020년 7,652ha로 지속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보이는 여러 위기 상황을 비롯하여 도심의 확장과 농촌의 축소로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기준, 경지면적은 7,652ha로 경지면적이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원주시 경지면적 현황

단위 : ha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850	8,671	8,367	8,133	7,912	7,833	7,652

출처 : 원주시 통계연보(2021)

- 2020년 기준, 농가 수는 전업 4,368가구, 겸업 4,567가구로 총 8,935가구로 나타났고, 농가 인구는 남성 10,697명, 여성 10,639명으로 총 21,336명이며 감소 추세에 있음

원주시 농가 및 농가 인구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가	8,515	8,606	8,322	7,810	7,624	7,383	8,935
농가인구	22,234	22,175	20,465	19,788	18,540	17,659	21,336

출처 : 원주시 통계연보(2021)

- 2019년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원주 농업경영체(경작지 1천㎡ 이상이거나 연중 농사일이 90일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는 1만2천994명으로 50대 이상(93.5%)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농업인은 11명에 불과하였음

원주시 농업경영체 등록인구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대	13	11	11	7	6	11
30대	136	161	168	160	147	130
40대	1,039	1,134	1,080	997	910	701
50대	3,627	3,878	3,777	3,706	3,460	2,843
60대 이상	7,169	7,291	7,735	8,139	8,392	9,309
합계	11,984	12,475	12,771	13,009	12,915	12,994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원주투데이(2021) 재구성

- 원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2014년 1만 7천326톤, 2018년에는 1만 4천501톤으로 4년 동안 2천825톤(16.3%)이 감소함. 재배면적도 3천525ha에서 2천794ha로 20.7%가 감소했는데,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개발 면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임

- 원주시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전체 식량자급률은 2014년 51%에서 2018년 47.7%로 낮아졌음. 식량 작물은 2014년 56.7%에서 2018년 50.4%로 감소했고, 채소 및 과채 자급률 또한 38.4%에서 30.1%로 낮아짐. 과수 자급률은 33.2%에서 37.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50% 이하임
- 원주시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살고 싶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원주시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를 제정하여 일찍이 푸드플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현재(2021.10.)는 ‘식량산업 종합계획 및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 중임
 - 친환경농업종합센터(2017.12. 완공)는 친환경·GAP 인증 등을 위해 종합 검정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쌀품질 관리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잔류농약, 토양과 농업용수 등을 분석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 (2018)을 시작으로 농업인, 사회적경제, 소비자 단체 등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하는 신활력 플러스를 운영함.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커뮤니티센터 등의 하드웨어 사업과 원주푸드 인증, 액션그룹 사업제안,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음
 - 원주푸드종합센터는 학교 등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원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단위 : 명

매장명	개장일자	운영주체
1 원주원예농협 로컬푸드(본점)	20.1	원주원예농협
2 원주원예농협 로컬푸드(혁신점)		
3 원주축협 로컬푸드	16.6	원주축산농업협동조합
4 산림조합	18.3	산림조합
5 생기를 담아	18.11	(주)생명농업
6 판부농협	16.5	판부농협
7 남원주농협 로컬푸드	21.6	남원주농협
8 원주행복장터(대도시형 직매장)	20.9	원주원예농협

출처 : 원주시청(2021), 재구성

- 원주시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 만족 향상을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새벽시장을 운영해오고 있고, 원주교~봉평교 사이 원주천 둔치에 8천800여㎡를 조성하여 매일 오전 4~9시 사이에 시장을 열며 2021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함
 - 사회적기업 원주생명농업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및 지역사회단체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노인생협,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의료사협, 플라워림프, 원주생협, 지인누리 등)와 함께 농촌 지역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 청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협업농장, 돌봄, 교육, 워크숍, 네트워킹 등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함(2021)
 - 최근 개최한 지속가능한 원주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공론장(원주시민속의위원회, 2021.9.)에서는 원주시의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이 농민만을 위하기보다 시민을 위한 농업으로, 도농이 함께 하는 농업정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농업정책 추진’을 주요 우선순위로 정했음
- 원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을 위해 도시 농촌이 함께 소통하는 로컬푸드 토대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이 원주시민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담론을 확산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공론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해야 함.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에게 농촌이 시민참여형 농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돌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원주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을 주는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담보, 로컬푸드 확산 및 식량문제 해결, 사회경제적 역할 등을 구현하여 원주시민의 삶을 돕는 생명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추진전략

- 로컬푸드, 친환경, 공공급식 등 농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농업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등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있어 도시와 농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신규 판로확보, 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 농촌과 도시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상호교류 플랫폼 구축 추진
 - 농촌과 도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직매장 및 교육이나 농업·농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
 - 온라인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관련한 이슈를 상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통로 마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책접근 및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 공익성 인식 제고
 - 기존의 농업의 역할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농업정책(사회적농업 등)을 확산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외에도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원주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농장, 체험 등)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농업 인식 구축

□ 이행(추진)계획

①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을 위한 기반 마련 [로컬푸드과]

- 로컬푸드-사회적경제 연계 자원조사
 - 신규 판로 확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자원조사
- 농촌·도시 상호교류 플랫폼 구축 활성화
 - 온라인 쇼핑몰(원주몰) 운영 [기업지원일자리과]
 - 오프라인 직매장 및 직거래 공간 확대
 - 원주새벽시장 개선을 통한 농업인 직거래장터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일자리 창출 교육프로그램, 시민참여형 농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②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농업 확산 [농정과]

-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 원주시 내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 운영단체 지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원주시 내 사회적농업 운영단체 지정 및 도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민참여 사회적농업 프로그램(교육, 농장, 체험 등) 운영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로컬푸드-사회적경제 연계 자원수	개수	1	1	1	2	2	
오프라인 직매장 및 직거래 공간 운영 횟수	횟수	10	10	10	10	10	
온라인 소평몰(원주몰) 매출액	백만원	2,000	2,500	3,000	3,500	4,000	
원주새벽시장 매출액	백만원	7,000	7,100	7,200	7,300	7,400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횟수	1	1	1	2	2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횟수	횟수	1	1	1	1	1	2024년 보조 사업 종료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모임 횟수	횟수	6	6	3	3	3	
사회적농업 운영단체 수	개수	1	1	1	1	1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과정 수	개수	5	5	3	3	3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수	개수	5	5	3	3	3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로컬푸드-사회적경제 연계 자원조사																				
농촌·도심 상호교류 플랫폼 구축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운영단체 지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301,000	312,000	270,000	270,000	270,000	
로컬푸드-사회적경제 연계 자원조사	국·도비	-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	
농촌·도심 상호교류 플랫폼 구축 활성화	국·도비	-	-	-	-	-	-	
	시비	115,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국·도비							
	시비	14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사회적농업 자원조사	국·도비	-	-	-	-	-	-	비예산
	시비	-	-	-	-	-	-	
운영단체 지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국·도비	2,100	2,100	-	-	-	-	국·도비 24년 보조사업 종료
	시비	900	900	-	-	-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도비	27,300	27,300	-	-	-	-	국·도비 24년 보조사업 종료
	시비	11,700	11,700	-	-	-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p>주무부서: 로컬푸드과, 기업지원일자리과, 농정과</p> <p>협업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학습관</p> <p>위원회: 원주푸드종합센터운영위원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농기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사회적농업, 공공급식 관련 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업 관련 농민단체,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업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과 연계 협력을 통한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 ▪ 농촌-도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책임 이행 ▪ 기업 개발자 연계를 통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 관내 공공기관 및 대학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사회적경제 연계 로컬푸드 확대로 도농상생 기반 구축
- (사회) 도농공동체 확산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역할 인식 증진
- (환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추진을 계기로 생명농업으로 전환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로컬푸드 선순환 구축 및 시민참여 정책에 기반하여 다양한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 부서	로컬푸드과장 박인철(☎737-4120) / 마케팅팀장 남도윤(☎4601) / 담당자 박선영(☎4603) / 원주푸드팀장 김광섭(☎4414) / 담당자 최지인(☎4146)
	기업지원일자리과 이태영(☎737-2970) / 기업육성팀장 김강순(☎2981) / 담당자 이지원(☎2982)
	농정과장 허관선(☎737-4110) / 농촌개발팀장 황인선(☎4115) / 담당자 서홍범(☎4117)

U N 목 표	Goa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원 주 목 표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목 표 지 표	시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점수	2022	2025	2030	2040
		3.30	3.50	3.75	4.25

3 시민 건강 돌봄 인프라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노인진료비 증가 및 건강불평등 심화 양상을 보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장 및 건강관리는 가족 단위 책임 범위를 넘어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함
-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임. 보건의료 정책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재활 등을 모두 다뤄야 함
-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6.5%로 2025년(20.3%)에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35.1%가 1인가구이며, 고령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해 2037년에는 현재의 2배, 2047년에는 현재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2021 고령자 통계)
 - 노인진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1인당 진료비(479만6천원), 본인부담의료비(111만7천원)는 각각 전년보다 30만9천원, 7만1천원 증가함(2021 고령자 통계).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41.6% 차지함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한 진료·처치·처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거동 불편, 보호자 부재, 의료기관 취약지역 거주 환자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의료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의

료인의 환자 접근성'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보호자 없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소외지역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 및 건강권 확보 기여 차원에서 방문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제시함.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진행, 2025년까지 주거·건강·요양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 4대 핵심요소 기반을 구축해 노인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도농복합도시 원주는 강원도 타 시군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편이나, 건강 수준은 강원도 타 시군이나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2020년 원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전국 대비 31%, 강원 대비 3% 높음), 현재흡연율(전국 대비 26%, 강원 대비 13% 높음), 스트레스 인지율(전국 대비 26%, 강원 대비 20% 높음), 연간 사고 및 중독 경험률(전국 대비 25%, 강원 대비 41% 높음), 연간미충족의료율(병의원)(전국 대비 24%, 강원 대비 9% 높음), 월간음주율(전국 대비 8%, 강원 대비 5% 높음)이 전국 수준보다 높음
 - 또 연간 주관적 건강인지율(전국 대비 90%, 강원 대비 92% 수준), 걷기 실천(전국 대비 78%, 강원 대비 83% 수준), 건강생활실천율(전국 대비 76%, 강원 대비 83% 수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전국 대비 51%, 강원 대비 54% 수준)이 전국 수준보다 낮음
- 특히, 원주시 읍면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은 매우 낮음. 2006년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2018년 원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88개 건강 권역으로 분류해 종합순위를 매긴 결과, 원주시는 1~4분위 중 3분위 하위권으로 나타남. 건강 행위, 보건의료자원과 서비스 등 3개 영역 조사에서 건강 행위는 가장 낮은 4분위로 나타남
 - 원주시 읍면지역 종합순위는 1~10분위 중 8분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등 건강행위 순위는 9분위로 나타나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12월 기준 원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56,771명)는 전체인구(357,757명)의 15.9%를 차지하고, 전국평균 17.1%보다 낮음. 읍면동별 고령인구 분포(2020년 기준)를 살펴보면, 원주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론면(42.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림면(38.8%), 귀래면(38.5%), 호저면(34.5%), 중앙동(34.3%) 순으로 나타남

원주시 읍면동별 65세 이상 고령자 (2020)

읍면동	전체인구	고령자	고령자 비율	읍면동	전체인구	고령자	고령자 비율	읍면동	전체인구	고령자	고령자 비율
합계	357,710	53,390	14.9					학성동	4,880	1,309	26.8
문막읍	18,399	3,360	18.3	신림면	3,618	1,403	38.8	단계동	28,700	3,605	12.6
소초면	8,758	2,233	25.5	중앙동	2,806	962	34.3	우산동	13,914	2,118	15.2
호저면	3,819	1,316	34.5	원인동	5,215	1,173	22.5	태장1동	10,239	1,766	17.2
지정면	28,110	1,995	7.1	개운동	12,865	2,628	20.4	태장2동	25,166	3,824	15.2
부론면	2,292	983	42.9	명륜1동	8,701	1,773	20.4	봉산동	8,283	2,104	25.4
귀래면	2,203	847	38.5	명륜2동	15,701	2,720	17.3	행구동	7,620	1,265	16.6
흥업면	9,148	1,773	19.4	단구동	44,166	4,913	11.1	무실동	32,854	3,146	9.6
판부면	7,318	1,171	16.0	일산동	8,770	1,814	20.7	반곡관설동	44,165	3,189	7.2

(출처: 2021 원주시 통계연보, 재가공)

- 2020년 읍면지역의 우울감 경험률은 부론면(9.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막읍(9.4%), 귀래면(6.2%) 순으로(2020 원주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음을 알 수 있음
- 원주시 의료기관은 2011년 359개에서 2020년 439개로 증가세임. 지역거점 공공병원(원주의료원)이 있고, 종합병원은 일산동, 개운동에 각 1개소 분포. 의료인력은 총 5,312명이고, 의료인 1인당 인구수가 67명임

원주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 (2020)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439	4,922	2	1,106	15	1,677	205	601	3	439	7	948	103	-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	141	102	10	-	-	-	-	-	1	9	8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의무 기록사	보건소 인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상근	비상근												
5,312	177	153	38	-	1,715	1,370	1,011	37	892	23	156	32		

(출처: 2021 원주시통 계연보) ※ 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군인병원 제외,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포함

○ 원주시의 의료취약지는 읍면지역과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음

- 호저면(의원1), 귀래면(한의원1), 판부면(요양병원1), 부론면(의원1, 한의원1), 신림면(의원1, 요양병원1, 한의원1), 소초면(병원1, 한의원3), 흥업면(의원2, 치과1, 한의원1), 봉산동(의원1, 치과2, 한의원2)의 의료기관은 5개 미만임 (출처: 2021 원주시 통계연보)

○ 원주시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9.1%로 강원도(76.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주 이용 의료기관은 의원(50.4%), 병원(29.8%), 치과병의원(11.0%) 순임. 연령별로는 70세 이상(93.9%)이 가장 높고, 60~69세(89.0%), 50~59세(82.9%) 순임(2020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중요한데, 원주시는 9개 보건지소(문막,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흥업, 판부, 신림)와 8개 보건진료소(학곡-소초, 고산-호저, 산현-호저, 사제-흥업, 단강-부론, 비두-문막, 황둔-신림, 판대-지정)가 있음

- 2018년 보건소 만족도·주민요구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70%가 보건소 이용 경험이 있었고, 이용자의 56.2%가 예방접종과 질병진료(물리치료)를 위해 방문함
- 57.2%는 보건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함(제7기('19~'22) 원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
- 보건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생애주기별 대상순위는 노인 > 영유아 > 성인 > 임산부 > 청소년 순으로 나타남
- 의료취약계층별 보건사업 대상순위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실직가정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기타 순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 건강생활실천 > 건강검진 > 치매예방관리 > 감염병 > 의료비 지원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모자보건 > 진료 > 구강보건 > 정신보건 > 한의약, 의약무관리 순으로 나타남. 방문건강관리는 19.17%를 차지함
- 기타 의견으로도 노인 대상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고령사회 진행에 따라 노인 대상 보건사업 요구가 높아진 것을 시사함

○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사회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통한 의료-돌봄-주거-복지 등 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강화가 필요함
- 신체활동과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사망률,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대장암 발병 등이 낮고, 정신건강과 삶의 질(QOL)의 개선을 도우므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가 필요함

- 지역사회 논의(원주-MGoS)³⁸⁾ 과정에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은 건강데이터를 알고 있어 언제든지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문 돌봄과 진료, 커뮤니티케어, 데이터 인프라 등으로 건강도시 원주 실현을 제시함
 - 원주는 PHR(개인건강기록)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심평원, 건보공단)가 있어 기존의료전달체계를 활용하고, 민간에서의 유인책을 마련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의료왕진서비스 체계와 커뮤니티케어(예방부터 퇴원 이후까지) 체계의 연계·통합을 통해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 강조
 - 또 시민의 능동적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건강연차 도입을 고려하고, 건강의 날 시민캠페인을 통한 건강인식 전환 및 참여 유도 필요 강조
 - 주치의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발달한 가운데 등록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의사 관계와 명확한 의뢰제도 정착이 수반되고 법제도 마련 필요
- 방문 진료는 기존 재가복지서비스와 비교해도 월등한 만족도를 나타냄. 일반 재가복지서비스는 영양보호사·생활활동보호사가 자신의 전문영역에서만 지원활동이 이뤄지는데, 방문 진료는 보건 의료인이 환자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생활습관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어 종합적인 치료가 가능함. 또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방문 진료도 필요함
 - 방문 진료는 의사, 간호사 이외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원주의료사협은 예비의료인 연계강화사업으로 보건의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건강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조합원 건강리더(지역의 어르신 건강반장)와 팀을 이뤄 가가호호 방문, 의학 공부, 건강잔치를 함께 수행함
- 방문 진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주거환경 개선, 영양상태 개선, 이동제약 개선, 생활양식 개선, 정신건강 증진, 생활건강 증진 등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상설적 의료복지 통합돌봄 추진이 필요함
 - 동네에서 연결해줄 수 있는 건강리더(중장년일자리·노인일자리 연계 등)를 양성해 지역의 건강자치력 증진 및 건강관리체계 형성 필요

3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자문을 위한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을 의미. 원주시 주요 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 평상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행정, 복지,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보급해 궁극적으로 웰빙문화 형성 모색

○ 국내 방문진료·지역통합돌봄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6,648세대 조합원 규모로 성장(2021.03.기준). 조합원 대상 방문진료, 전조합원주치의제도
- 2012년 마을 중심 의료를 지향, 서울시 은평구에 설립한 비영리의료복지협동조합 살림의원은 현재 3,200명이 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 주 1일 왕진제도 추진 중
- 군산시는 2019년 의료소외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³⁹⁾. 보건소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타 보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로당 63개 선정, 담당 주치의가 찾아가 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지역은 매월 순회
- 서울시 은평구는 2020년 6월 은평통합돌봄네트워크 출범, 사회적경제·비영리조직들과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주민기술학교인 은평통합돌봄학교 운영

- 통합돌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돌봄(요양) 등에서 나오는 1·2·3차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EMR) 보급을 확대해 전자건강기록(EHR)을 정비하고 이후 해당 정보를 환자가 열람할 수 있는 구조를 개인건강기록(PHR)으로 도입을 확산하는 등 첨단기술을 통한 건강관리 데이터 활용이 필요함

○ 원주시는 2020년 ‘강원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 (노인 분야)에 선정, 2020년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함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8개 읍면동(문막읍, 원인동, 흥업면, 명륜1동, 신림면, 봉산동, 학성동, 태장2동)을 중심으로 맞춤형복지팀(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케어담당인력 배치⁴⁰⁾
- 이 외에도 원주시에는 왕진과 장애인 주치의사업의 방문의료, 방문간호 활동을 하는 곳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도 있음⁴¹⁾.

○ 원주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에서 ‘건강하게 땀흘리는 원주’, ‘누구나 평등한 원주’ 를 강조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원주

39)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행정복지센터(3,509개)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급여 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가 설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한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40) 주거환경개선사업,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사업, 케어안심주택지원,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서비스),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재활 사업 수행

41) 의료사협연합회는 ‘예비의료인 연계강화사업’ 으로 8개 회원조합에서 보건의료 학생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건강활동을 진행 중, 전국 17개 조합 의료기관에서 140명(의사 23명, 한의사 16명, 치과의사 8명)의 ‘팀주치의’ 가 방문의료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조합원 ‘건강 리더’ 는 2019년 기준 전국 501명 활동 중

시민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또 기존의 방문 진료 정책을 계속 추진 및 확대 중임. 이를 통해 고비용이 발생하는 사후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패러다임 전환 등 원주시민 삶의 질 향상도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2026년 보편적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원주시는 2020년에 마련된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 기반한 사업의 지속 추진 및 보완작업 등으로 상설적 의료복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2040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원주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1단계 기반 구축기 (2020~2022)	2단계 확대기 (2023~2025)	3단계 완성기 (2026~)
대상자	노인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전 시민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 실시 및 인프라 확충단계 ▪ 시민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 대상자 확대로 돌봄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 원주형 커뮤니티케어 이론적 정립

(출처: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고서, 2021)

- 원주시는 방문 건강관리 정책으로 간호사 방문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생활체육에 기반한 건강관리,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문 진료 활성화, 생활체육 복지를 통한 생활습관병 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등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함

□ 추진전략

-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민관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문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환자 접근성 패러다임 전환 기반 마련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와 연계
- 지역 시민사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와 연계
 - 원주사협 왕진·장애인 방문 진료, 방문간호 활동과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돌봄망 구축
 -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기획
 - 생활체육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첨단기술 활용 건강관리 데이터 활성화
 - 민간-공공 등 협력 통한 고령친화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연계
 - 건강자립을 위한 시니어 사회활동 개발 및 독려
 -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연계로 돌봄경제 구축
-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협동 예방·건강증진 활동 강화

□ 이행(추진)계획

- ①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건강증진과]
 - 읍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도입
 - 보건소 등록장애인 대상자 발굴
 - 간호사·물리치료사 협업 방문간호
- ② 첨단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건강증진과]
 -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AI·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모바일 헬스케어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및 스마트밴드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건강리더 양성 과정 운영
 - 건강리더 모집 및 교육
 - 건강리더 중심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건강실천모임)
 - 건강리더와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 <원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건강반장사업>(2021.10~) 연계 확대

③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과]

- 공공체육시설 확충
 - 공공, 생활, 동네 체육시설 확충
 - 체육회관 건립
- 생활체육 참여 및 활성화 지원
 - 공공 스포츠 클럽 활성화(신규발굴 및 사용료 감면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횟수	횟수	20,000	20,100	20,200	20,300	20,400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자 수	명	1,500	1,500	1,500	1,500	1,500	
AI-IO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수	명	150	200	250	300	35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 수	명	200	200	200	200	200	
건강리더 양성자 수	명	30	30	30	30	30	통합건강 증진사업 연계
공공체육시설 확충 건수 (2023 대비)	개	1	1	1	1	1	연도별 확보 목표
체육회관 건립 추진율	%	준비	5	50	100	-	2024년 사업 추진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록 클럽 수)	건수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컨설팅	10	10	10	1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읍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도입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건강리더 양성 과정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2023년 대비)																				
생활체육 참여 및 활성화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5,345,818	5,848,356	7,750,196	7,852,016	5,353,856	
읍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국도비		39,192	39,300	39,400	39,500	39,600	
	시비		26,128	26,200	26,270	26,330	26,400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도입	국도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시비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국도비		43,945	45,000	46,000	47,000	48,000	
	시비		29,297	30,000	30,670	31,330	32,00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국도비		50,914	50,914	50,914	50,914	50,914	
	시비		33,942	33,942	33,942	33,942	33,942	
건강리더 양성 과정 운영	국도비		840	1,200	1,200	1,200	1,200	
	시비		560	800	800	800	800	
공공체육시설 확충 (2023 대비)	국도비		1,750,000	1,750,000	1,750,000	1,750,000	1,750,000	연도별 50억 목표
	시비		3,250,000	3,250,000	3,250,000	3,250,000	3,250,000	
생활체육 참여 및 활성화 지원	국도비		-	-	-	-	-	총사업비 54억 원
	시비		-	500,000	2,400,000	2,500,000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체육과 협업부서: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 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케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참여 ▪ 건강리더 활동 참여 ▪ 케어코디네이터 참여 ▪ 체육시설 및 강사, 체육대회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병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원주시체육회 ▪ 대학,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민자치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 가정형 디지털 의료기기 지원 ▪ AI,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 첨단의료복합단지 ▪ 디지털헬스케어특구 ▪ 협동조합, 마을기업

□ 기대효과

- (경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대처, 불필요한 검사 감소로 의료비 절감, 사회적경제를 통한 돌봄경제 구축
- (사회) 환자 만족도 증대, 돌봄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의료사각지대 해소,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로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관계망 강화
- (환경) 기후위기 적응 실현
- (거버넌스) 민관산학 협력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강화

추진 부서	건강증진과장 유선(☎737-4050) / 방문보건팀장 김기훈(☎4061) / 담당자 김나형(☎4052) / 담당자 정혜임(☎4056) / 구강보건팀장 전희순(☎4085) / 담당자 원영신(☎4053)
	체육과장 김명래(☎737-2850) / 체육지원팀장 홍설화(☎2861) / 담당자 하승만(☎2863) / 체육시설팀장 김영일(☎2871) / 담당자 홍창범(☎2872)

U N 목 표	Goa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원 주 목 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목 표 지 표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도	2020	2025	2030	2040
		-	60%	70%	80%

4 모두가 참여하는 ESD 시스템 확산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유네스코)’을 뜻함

-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다양한 연계와 교류에 기반한 전문성과 통합적 사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을 거쳐 평생교육까지 단계별 체계성을 기초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환경교육을 비롯하여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연계하여 사고와 행동 양식을 확장하는 목표를 가짐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을 위한 ESD



인지 학습 측면 :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도전 과제와 이들의 복잡한 연계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적 발상과 대안적 해결 탐색

사회-정서 학습 측면 :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고, 타인과 지구에 대한 공감 및 연민을 함양하며 변화를 주도할 동기 부여

행동 학습 측면 : 개인, 사회 및 정치 영역 내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 이행

출처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년 채택(2005~2014년)을 선포하며 유네스코를 선도기관으로 지정, 이후 ESD를 위한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제시하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에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 을 채택함
- 세계 여러 국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역사회 내 교육과 연계하여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핀란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ESD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1999년에는 교육발전계획안에 지속가능발전을 중요 원칙으로 정하여 유아교육 등에 ESD를 반영하도록 개편하였음. 국가 핵심교육과정에도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하여 교사들에게도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스웨덴도 국가적 차원에서 ESD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하고 있음. 20세기 초반부터 초등학교계획에 환경교육을 시작하였고,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경교육에서 ESD로의 전환이 이뤄짐. 총리, 의회 등에서 ESD를 요구하였고 2006년부터 스웨덴의 모든 대학은 지속가능발전 촉진 의무를 지님. 동시에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ESD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
 - 독일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계기로 ESD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 확산함. 지속가능성 원칙이 독일 기본법에 국가목표로 명시(1994)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ESD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ESD에 중점을 둔 전 세계발전 혹은 전 세계 책임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2007). 독일 대다수 주정부의 교과과정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합하였거나 통합 중임(2015)
 - 이탈리아는 새로운 기후변화 의무 교과과정으로 ‘기후변화’ 와 ‘지속가능개발’ 내용을 포함하였고, 미국은 환경교육 시행 학교를 지원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환경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시행함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ESD 추진 논의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고민하고 추진해오고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2021.10. 기준, 전국 592개 학교 가입)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및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촉진하고 있음
 - UN총회 산하 고등교육기관인 UN대학은 UN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세계 179개 도시를 거점도시로 지정하였음. 우리나라는 6개의 자치단체(통영시, 인천시, 울주군, 인제군, 창원시, 서울도봉구, 2021)가 지정되어 지역사회에서 ESD를 원활히 촉진함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경제 성장 위주의 산업문명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환경과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위한 공동선언’ (2019.9.)을 함
- 원주시는 이러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흐름 안에서 2009년부터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9~2018)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계획 마련, 사단법인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립(2009.6.)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ESD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에서 실험적으로 추진하였음
- 원주시는 협동조합운동 시초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한 협동교육연구소(1969.10.)가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역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행정 차원에서는 「환경 기본 조례」(2013)로 환경교육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고,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8)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음
 - 지역사회에서 시도한 다양한 사업이 여러 성과를 도출하였음. 협력 기관 발굴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 및 운영하였고, 운영한 여러 프로그램에는 원주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효과성과 영향력을 검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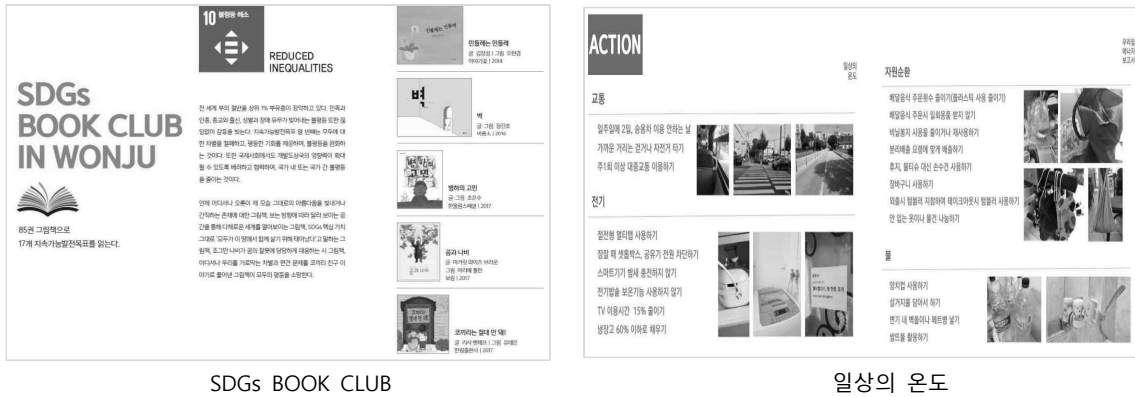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9~2018)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파트너십	교육참여 시민
54종 (지속가능발전목표 13개 연계)	41곳	124,413명

출처 : 제20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2018), 재구성

-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북클럽(85권 그림책으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읽기), 우리집 에너지 보고서 만들기 일상의 온도(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일상의 변화, 그 실천에 대한 기록과 공유를 각 가정이 함께 리빙랩 방식으로 실험) 등 문제 중심(참여자 중심) 교육(PBL, Problem-Based Learning) 방법론을 적용하여 ESD를 실행하고 시도하고 있음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출처 : 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2021)

○ 원주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오랜 기간 꾸준히 실천하고 다양한 협력에 기반하여 지역 내 체계를 만드는 국내 ESD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원주시는 지속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ESD를 원주시 모든 지역과 시민에게 확대할 필요 있음. 이에 해당 연구 결과로 도출되는 W-SDGs을 계기로 원주지역 전반에 ESD 시스템 확산 및 운영을 도모하여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지속가능발전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여 원활히 운영하는 ESD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도 ESD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결합점을 모색하며, 원주 ESD 인증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여 원주시 전체에 ESD의 양적 확장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방식의 ESD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및 모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마을마다 ESD 시민강사를 양성하여 참여자 중심(PBL, problem-based learning)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함
- 원주시 내 공무원, 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대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 여부 조사에 따르면 ‘알고 있음’ 이 40.9%로 조사되었음(2021). 일반 시민 대상일 경우 인식 여부가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후 W-SDGs 인식도 조사가 필요함

□ 추진전략

-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지역으로 검증된 모델 활용
 - 오랜 기간 실행을 통해 검증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원주시 전 지역으로 양적 확산
- 지속가능발전교육 자원지도 구축 및 효율적 정책 기획
 - ESD 현황조사 및 새로운 자원의 발굴을 통해 ESD 자원지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ESD 자원발굴로 현장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 지역사회 ESD 협력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추진
 - 지역사회의 풍부한 ESD 관련 기관(교육청,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 점검 및 활동 강화로 지속적인 협력 추진
- 시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시민참여형 ESD 공간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ESD 체계 구축

□ 이행(추진)계획

- 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 및 양적 확산 [기후에너지과]
 - 지역사회 ESD 교육 자원을 활용한 ESD 활성화 지원
 - 시, 교육기관(교육청,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등 ESD 거버넌스 운영지원 및 신규 네트워크 발굴 지원
 - 초중고, 대학교, 평생교육, 공무원 대상 ESD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생애주기별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 개발 지원
- ②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과]
 - 지역 ESD 시민 배움터 확산지원
 - 오프라인 교육공간 조성 및 공유 활성화 지원
 - ESD 시민 배움터 프로그램(지역 동아리, 학습조직 등) 개설 지원

○ 지역 평생교육 체계 내 ESD 연계 지원

- 시민 강사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ESD 연계 컨설팅
-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실무자 ESD 연계 방안 교육
- 찾아가는 ESD 프로그램 운영 지원
- ESD 성과공유회 개최 및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ESD 거버넌스 참여 기관 수	곳	20	30	40	50	60	원주 지속협 연계
생애주기별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개발 수	개수	1	2	3	3	3	
지역ESD 시민배움터 프로그램수	개수	3	5	5	6	7	
평생교육 내 ESD 연계 컨설팅 및 교육 횟수	횟수	-	3	5	7	7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지역사회 ESD 교육 자원을 활용한 ESD 활성화 지원																				
지역 ESD 시민 배움터 확산지원																				
지역 평생교육 체계 내 ESD 연계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4	2025	비고
총예산액			5,000	5,000	5,000	5,000	5,000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활용한 ESD 활성화 지원	국·도비		-	-	-	-	-	
	시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지역 ESD 시민 배움터 확산 지원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지역 평생교육 체계 내 ESD 연계 지원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업부서: 환경과, 학습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SDGs 기반 초중고 ESD 교과과정, 대학교 SD 수업, ESD 반영 평생교육 등 지역 사회 전반에 SD, SDGs, ESD 확산 및 실행 강원인재개발원, 교육청, 대학,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 사회적가치 내재화 등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교육 지원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식 증진 관내 공공기관 및 대학 관내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지속가능발전교육 통한 선순환적 경제 인식 제고
- (사회) 지속가능한 도시,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강화
- (환경) 지속가능발전 인식 및 환경보전 인식 증진
- (거버넌스) 시민참여 ESD 활성화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강화

추진 부서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737-3170) / 지속가능발전TF팀장 박정화(☎2451) / 담당자 김명식(☎2452)
------------------	---

U N 목 표	Goal 5. 성평등 보장				
원 주 목 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목 표 지 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원주시 사회조사	2020	2025	2030	2040
		3.16	3.50	3.75	4.0

5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UN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젠더 관점에서 진단하고, 재난이 여성에게 초래한 피해의 회복과 성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UN(2020), 팬데믹 상황이 기존에 젠더 불평등이 존재했던 영역의 성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어,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정책에도 젠더 관점을 반영할 필요
 - OECD(2020),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모든 정책 대응은 젠더 렌즈를 포함해야 하며, 여성 특유의 욕구, 책임, 관점을 반영할 필요
-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는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를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젠더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강조함
- 정부는 K-SDGs를 통해 성평등 보장을 목표로 여성 대상 차별 철폐, 여성 대상 폭력 철폐, 가사노동의 존중 및 가치 부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공평한 기회 보장,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 접근 보편성 보장,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접근 확대 등 7개의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고,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함
 -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2018년~2022)」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수립·시행해

음

- 한편 강원도는 지역성평등지수⁴²⁾ 평가에서 2019년 종합순위 중하위권이 며,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일 자	추진내용
2011. 11. 1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2013. 5. 3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2013~2017)
2013. 12. 2.	여성친화도시 선정(여성가족부 협약: 2014. 1. 17)
2015. 11. 18.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120명)
2014~2017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3대 목표, 8대 정책과제) 추진(부서별)
2017. 11. 15.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기 구성(75명)
2017. 12.	원주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2018~2022)
2018. 5. 18.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5대 목표, 9개 중점과제) 추진(부서별)
2018. 12.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여성가족부 협약 : 2019. 1. 31.)
2019. 5.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5대 목표, 9개 중점과제) 추진(부서별)
2020. 3. 27.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 4.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기 구성(30명)
2020. 5. 7.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5대 목표, 9개 중점과제) 추진(부서별)
2020. 7. 10.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

- 원주시 양성평등정책은 5대 목표 및 17개 중점과제(2023~2027 중장기계획)로 비전은 ‘삶의 변화를 만드는 생활 속 성평등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생활문화로 커 가는 원주’ 임

42)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발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중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 지역 성평등지표 및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 확대’ 계획을 근거로 2011년 첫 발표된 후 시도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종합지수로 작성되기 시작함. 2015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지표 구성은 2016년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확정된 이래 변화 없이 운영 중임

- 5대 목표별 17개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목표	성평등 인식 강화로 생활 문화 변화	반젠더 폭력 문화활동으로 안전한 공동체 형성	지역특화 여성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강화	함께 만드는 마을 건강돌봄 문화구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중점 과제	지역생활문화 양성평등 인식 확산	성인지적 공간 환경 구축	취·창업 지속가능성 증대	마을 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양성평등 정책 책무성 증진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십 활동 강화	반젠더 폭력 문화 확산	일·생활 양립 기반 정착	성인지적 돌봄 공간 운영	다양한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공간 및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안전 역량 강화	여성 농업인 전문성 강화 직주 근접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사업 지원 가족 돌봄자 지원정책 마련	지역사회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세부추진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사업 추진 및 관리 내실화, 여성커뮤니티센터,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센터,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음

○ 원주시는 이러한 정책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대상 : 5대 목표 11개 중점과제(부서별 과제추진)
- 사업내용 :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원주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현황은 총 357,757명 중 여성 180,361명, 남성 177,396명으로 여성 인구비율이 50.4%를 차지하고 있음. 총 세대수는 164,895세대(2021년 12월 31일 기준)
- 2020년 기준 여성가구주 비율은 33.7%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50

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수의 비율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원주시 여성가구주 현황(2020년 기준)

일반 가구수 (A) (가구)	연령별 여성가구주 가구수(B)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소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 79세	80세 이상	
150,242	50,689	526	6,468	7,002	9,333	10,628	7,954	4,827	3,588	33.7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년)

- 성별 경제활동인구(2017년 기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0.7%, 남성 72.6%이며, 고용률은 여성 48.6%, 남성 70.8%임
- 총 사업체수 30,729중 여성대표자 사업체수는 12,481개이며, 여성 종사자수는 71,823명임. 산업별로 살펴보면, 여성대표자 사업체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많으며, 여성 종사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원주시 사업체총괄(2019년 기준)

산업대분류별	합계				
	사업체수(개)	여성대표자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남자 종사자수(명)	여자 종사자수(명)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30,729	12,481	156,395	84,572	71,823
농업, 임업 및 어업	39	8	279	214	65
광업	13	1	686	516	170
제조업	2,030	472	19,739	13,783	5,9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4	10	396	336	6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89	22	952	823	129
건설업	1,531	353	13,277	11,658	1,619

도매 및 소매업	7,373	3,158	21,749	11,719	10,030
운수 및 창고업	2,922	223	6,588	5,880	708
숙박 및 음식점업	6,600	4,131	18,232	6,755	11,477
정보통신업	174	36	2,033	1,452	581
금융 및 보험업	361	58	9,815	3,753	6,062
부동산업	1,206	405	3,832	2,459	1,3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7	113	4,650	3,192	1,4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31	183	7,693	3,884	3,8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8	13	5,308	3,487	1,821
교육서비스업	1,401	785	13,361	5,184	8,1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70	492	17,115	3,738	13,3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45	354	3,449	1,838	1,6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495	1,664	7,241	3,901	3,340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 공무원수는 1,929명(여성 925명 · 47.9%, 남성 1004명)이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수는 31명(26%)를 차지함

최근 5년 간 5급(상당)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6%	17.6%	20.2%	26.9%	25.5%	26.2%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21년)

- 여성.가족지원시설은 6개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를 운영 중임
- 2017년~2020년 여성폭력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여성폭력상담별현황⁴³⁾

여성폭력상담현황별	여성폭력상담현황별(2)	2017	2018	2019	2020
합계	상담소 (개)	1	1	1	2
	상담건수 (건)	676	829	912	1,075
통합상담	상담소	1	1	1	1
	상담건수	676	829	912	1,002
가정폭력	상담소 (개)	-	-	-	-
	상담건수 (건)	-	-	-	-
성폭력	상담소 (개)	-	-	-	1
	상담건수 (건)	-	-	-	73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 아동시설은 45개소로 지역아동센터 31개, 양육시설 4개, 그룹-홈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다함께돌봄센터 5개가 있음
- 여성커뮤니티센터 1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가 있음
- 2020년 기준 원주시여성폭력피해자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574건으로 심리.정서적지원(345건), 수사.법적지원(124건), 의료지원(12건), 시설입소연계(11건), 기타(82건) 임
- 원주시가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선 ‘성평등 적책 추진 기반 구축’ 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에 힘을 써야 함. 성평등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마을이 중요한 이유는 성평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임
-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로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진 만큼, 성평등 없이 로컬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음. 성평등이 위계에 도전하고 다양성을 체득해 가는 실천 활동이라면 마을은 ‘성평등 공유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이에 중장기적으로 마을 단위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고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정착이 필요함.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 단위로 행정과 시민들의 연계와 소통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해 가는 실천 역시 활성화해야 함

43) 통합상담 : 한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 등 업무가 통합되어 상담하는 경우에 해당
 성매매피해 : 성매매피해의 상담소 없는 상담건수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통합운영한 실적임

□ 추진전략

- 시정 전반에 성평등 개념 반영을 위한 제도화 및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추진되는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증대
 - 성평등 논의 확산 및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플랫폼 운영
- 시민참여 기반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대내외 확산
 - 성평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마을 단위 주민과 적극 협력
 - 생활 속 실천 거점으로서 여성친화마을 적극 활용

□ 추진계획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성별영향평가 실시

- 시정 및 주요 사업 추진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및 균등기회 부여 도모
- 일·생활균형, 성평등 인식 확산 등 문화 개선 기반 마련

○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 여성 및 시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
- 지역 내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실천 활동
- 여성 공동체 기반 조성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
- 성매매여성 상담 및 자립 지원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마을 조성

- 여성 주도 마을 단위 공동체 지원 사업
- 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5대 목표(‘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지역사회 안전 증진’·‘가족친화 환경 조성’·‘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민·관 실천 독려 위한 캠페인 추진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 정기회의 및 전체회의, 간담회, 교육, 모니터링, 여성안심보안관 등 활동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수	개수	28	28	28	28	28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24	24	24	24	24	
여성 커뮤니티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	개수	-	2	2	2	2	2024년 이후 추진사업
여성친화마을 조성 및 운영 수	개수	3	3	3	3	3	
여성친화도시 시민 홍보 횟수	횟수	1	1	1	1	1	홍보 캠페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횟수	횟수	12	12	12	12	12	월 1회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성별영향평가 실시	[Progress bars]																			
여성 커뮤니티센터 운영	[Progress bars]																			
여성친화마을 조성	[Progress bars]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	[Progress bars]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Progress bars]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세부과제							
총예산액		22,000	32,000	32,000	32,000	32,000	
성별영향평가 실시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여성 커뮤니티센터 운영	국도비	-	-	-	-	-	
	시비	-	10,000	10,000	10,000	10,000	
여성친화마을 조성	국도비	-	-	-	-	-	
	시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	국도비	-	-	-	-	-	
	시비	3,000	3,000	3,000	3,000	3,000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국도비	-	-	-	-	-	
	시비	4,000	4,000	4,000	4,000	4,000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여성가족과 협업부서: 전 부서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 캠페인 공동기획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 캠페인 참여 성평등 문화 확산 연계 사회분야 ESG경영 추진 불평등 해소 사회적책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문화 관련 중간지원조직 지역내 여성단체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문화 관련 지역내 단체, 사회적경제 단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공공기관, 공단협의체 여성친화기업, 여성경영인협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성별격차 완화
- (사회) 마을과 일상속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
- (환경) 성평등문화의 정착으로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마을) 조성
- (거버넌스)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산으로 성평등 마을공동체 실현

추진 부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737-2730) / 여성정책팀장 김은하(☎2731) / 담당자 윤석인(☎2733)
-------	--

U N 목 표	Goal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원 주 목 표	도시와 농촌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갖춘다				
목 표 지 표	상수도 보급률	2021	2025	2030	2040
		95.6%	97%	99%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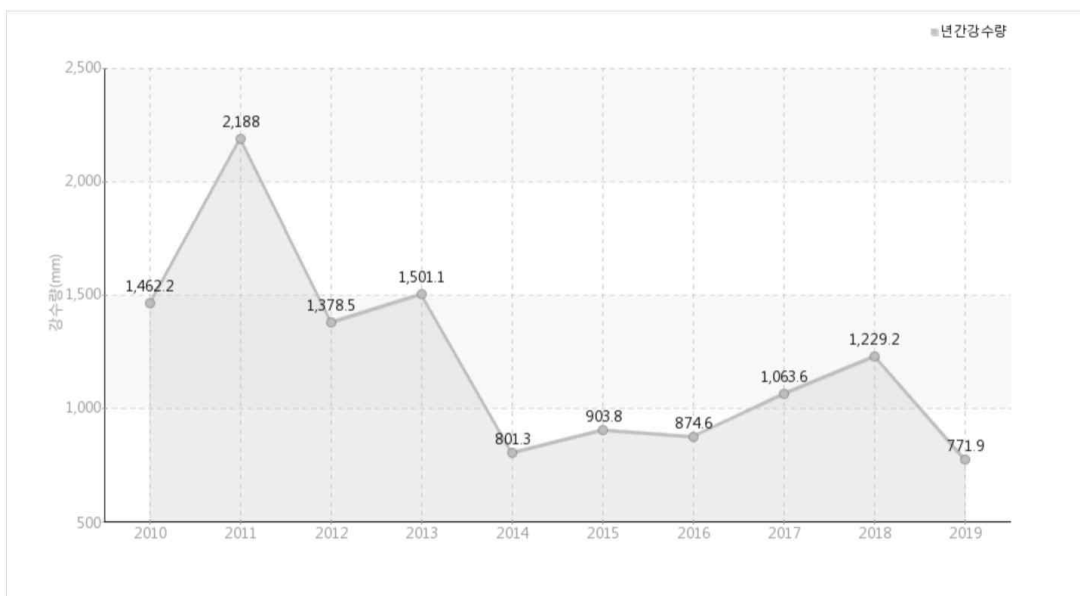
6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1992년 1월 31일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에서 개최된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and the Environment)」에서는 “물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더블린 4원칙” 이 선언됨
 - 첫째, 물은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으로 생명과 개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임
 - 둘째, 물의 개발과 관리는 사용자와 계획주체, 정책 입안자 등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참여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야 함
 - 셋째, 여성은 물의 공급과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 넷째, 물은 모든 경쟁적인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경제적 재화로 인식되어야 함
- 2012년 Rio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인 “The Future We Want” 는 물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에 있음을 강조함
- UN 17개 SDGs중 목표 6인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는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이며, 목표 2, 7, 8, 9, 11, 13, 15 등 7개 목표는 물과는 간접적이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목표들이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음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수자원의 확보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물-에너지-식량 연관관계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급격히 이슈화됨. 이와 같이 물-에너지-식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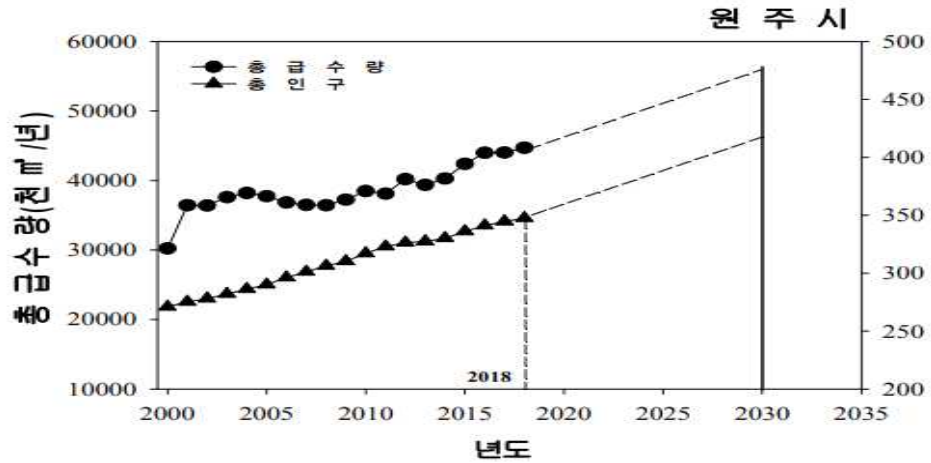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물 확보(water security) 문제를 재해석하고 물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법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Food-Energy Nexus)’ 임

- 또한 201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물 확보(water security)와 관련하여 기후, 인구, 교역 등의 다양한 주제와 각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Water- Food- Energy- Climate Nexus’ 로 제시됨
- 우리나라 강수량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최근 30년(1991~2020년)은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연 강수량이 135.4mm 증가하였고,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함
 - 109년간 연강수량은 매 10년당 +17.71mm로 증가하는 경향이나,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로 최근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임
 - 원주시 연간강수량은 감소 추세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수자원 이용에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음. 수자원 총량 중 증발, 토양침투 등 손실이 되고, 나머지는 유역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만 홍수기(6~8월)에 장마 및 태풍에 따라서 일시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림] 원주시 강수량 차트(원주시, 통계정보)

-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인권보장 측면에서 보면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WASH)의 확보에 내재하는 불공평성과 불균형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물관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으며, 물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수량과 수질 및 생태계 사이의 통합관리의 형태(수량 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 수자원관리체계 등)로 전환되고 있음. 원주시에서도 통합적 물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물순환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함
- 2020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K-SDGs 6번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임
-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199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를 통해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물순환 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은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은 13~15% 부근에서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자원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상수도 누수율(%)’과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상수도 누수율(%)’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목표치 9.2%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은 지속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전국 수질목표기준 평가 중 ‘BOD기준에서의 수질 등급 달성률(%)’을 2030년까지 85%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임. 한편,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2030년까지 수질 ‘ 좋음 ’ 등급 비율을 8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목표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강원연구원(2020)

- 원주시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35만 명을 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강원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증가에 따라 물수요량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며, 2030년에는 5,500만㎥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주에는 3개의 정수장이 있으며, 원주정수장에서 연간 2,209만㎥을 생산하여 총 급수량의 약 49.0%를 공급함
 - 수자원공사(송전정수장)는 연간 2,929만㎥의 광역상수도를 생산하여 원주 2,292만㎥(79.0%)를 공급함
- 향후 기후변화라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섬강권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수자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가뭄이 발생했던 2014~2015년 횡성댐의 평균 저수량은 29백만㎥로 예년에 비해 60%까지 감소하여 물 부족 위기가 있었음
- 최근 10년 간 횡성댐 저수량은 25.3~65.2백만㎥ 범위로 가뭄에 취약한 상황
 - 평균저수량 2011~2013년 51.3백 만㎥ → 2014~2015년 29.2백 만㎥로 감소
 - 횡성댐의 저수위용량 13.5백 만㎥을 고려한다면 가뭄 시기에는 이용 가능한 수량은 제한적임
 - 횡성댐의 용수공급 안전성 평가결과(환경부, 2019년), 평상시에는 댐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뭄 시에는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원주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급수량(m^3 /일)은 증가하고 1인당 1일 급수량은 감소하고 있음. 향후 인구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수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요관리, 안전한 먹는물 공급, 물의 사회적형평성 고려 등의 정책 이행이 필요함
- 강원도 상수도보급률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원주시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 기준 95.5%로 나타남. 농촌 읍면지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충하여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강원도 시군별 상수도보급률 현황

단위:%

행정구역별	2017	2018	2019
강원도	91.0	92.1	92.4
원주시	93.2	95.4	95.5
춘천시	96.5	97.2	97.3
강릉시	94.7	95.1	95.8
동해시	99.2	99.2	99.6
태백시	98.0	98.0	98.0
속초시	99.7	99.6	99.6
삼척시	92.0	91.4	91.2
홍천군	72.5	73.7	75.1
횡성군	76.4	80.5	81.8
영월군	78.2	78.1	77.3
평창군	80.4	82.2	81.9
정선군	80.2	80.6	81.4
철원군	90.1	90.3	89.0
화천군	61.9	64.2	68.3
양구군	83.1	81.9	81.3
인제군	81.8	82.6	85.4
고성군	84.2	85.1	86.1
양양군	89.8	91.7	92.1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2020)

강원도 시군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군별	2019년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일1인당 급수량 (ℓ)	급수전수 (개)
전체	1,560,571	1,442,558	92.4	842,150	653,506	453	358,057
원주시	352,860	336,987	95.5	86,500	125,348	372	61,429
춘천시	285,585	278,011	97.3	186,000	103,893	374	43,911
강릉시	215,911	206,869	95.8	116,800	94,096	455	56,462
동해시	91,453	91,061	99.6	75,000	46,128	507	18,461
태백시	44,124	43,220	98.0	15,000	17,753	411	14,916
속초시	82,824	82,479	99.6	52,000	35,017	425	19,317
삼척시	68,001	62,040	91.2	50,000	33,434	539	20,649
홍천군	70,065	52,617	75.1	37,850	22,584	429	13,249
횡성군	47,257	38,671	81.8	-	17,246	446	14,549
영월군	39,408	30,479	77.3	19,400	12,874	422	12,354
평창군	42,577	34,869	81.9	38,900	17,806	511	12,172
정선군	37,573	30,595	81.4	16,400	21,306	696	12,428
철원군	46,295	41,191	89.0	32,000	23,480	570	15,789
화천군	25,181	17,189	68.3	8,800	12,274	714	4,502
양구군	23,052	18,734	81.3	15,400	14,545	776	5,746
인제군	31,981	27,305	85.4	33,100	21,357	782	10,365
고성군	28,392	24,433	86.1	29,500	15,092	618	11,478
양양군	28,032	25,808	92.1	29,500	19,272	747	10,280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원주시 상수도 급수현황

년도	급수인구(명)	시설용량 (m ³ /일/톤)		급수량 (m ³ /일)	1인당1일 급수량 (ℓ)	급수전수 (천)	보급률 (%)
		지방 상수도	광역 상수도				
2020	341,792	86,500	60,627	124,361	364.0	62,957	95.6
2019	336,987	86,500	50,000	125,347	372.0	61,429	95.5
2018	331,477	86,500	50,000	122,461	369.4	59,080	95.4
2017	321,112	86,500	50,000	120,720	375.9	56,654	93.1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 특히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지표인 미급수인구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며, 도.농간 상수도 보급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분석됨
 - 미급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가 많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등 환경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이 낮은 물을 음용하고 있고, 또한 고령으로 기후변화,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임
 -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환경 질과 환경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계층간 불균등을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원주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농촌지역에도 안정적인 맑은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정주기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확대 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함
- 원주시 업종별 급수 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 을 줄이고, ‘상수도 누수율(%)’ 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원주시 업종별 급수 사용량

단위:천m³

년도	계	가정용	일반용	육탕용	전용공업용
2020	35,629	25,884	8,976	124	645
2019	34,751	24,325	9,655	156	615
2018	34,419	23,669	9,849	170	731
2017	33,328	23,012	9,369	190	734

출처 : 원주시, 일반현황

- 원주시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질분야 환경체감도는 2020년도 원주시 사회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시민중심 먹는물 관리 혁신이 중요함

2020년도 원주시 시민 환경체감도(수질)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5점 평균(점)
2.5	15.2	44.9	31.0	6.4	3.24

출처 :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사회조사」

- 원주시 상수도관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아래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며, 누수방지 및 중장기적으로 노후배관 발생에 따른 교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원주시 상수도관

단위:m

도수관									
소계	에나멜코팅 도복장 강관					주철관			
5,512	-					5,512			
송수관									
소계	에나멜코팅 도복장 강관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주철관		
3,140	2,764			-			376		
배수관									
소계	에나멜코팅 도복장 강관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		기타
611,211	148,095		29,931		94,491		145,907		192,787
급수관									
소계	에나멜코팅 도복장 강관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	PVC관	내충격수도관	PE관	스텐레스관	기타
561,346	151,156	64,685	2,053	452	44,723	26,492	102	55	271,628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 원주시 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 기준 90.6%이며, 총인구 357,710명 중 미처리 인구는 33,753명에 해당함. 하수처리시설은 원주, 문막, 흥업, 기업도시에 위치함

원주시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2020년 기준)

총인구 (명)	미처리 인구(명)	처리대상 인구(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인구(명)				하수도보급률 (%)
			소계	물리적 (1차)	생물학적(2차)	고도 (3차)	
357,710	33,753	323,957	323,957	-	2,549	321,408	90.6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원주시 하수처리시설(2020년 기준)

처리장	처리방식	처리장 부지면적 (m ²)	고도 시설용량 (천톤/일)	고도처리량 (천톤/일)
원주	NPR고도 처리공법	129,000	156	156
문막	KSNBR	12,649	7.0	7.0
흥업	Bio-SAC	18,720	6.5	6.5
기업도시	KSMBR	12,810	12.6	12.6

출처 : 원주시 일반현황

-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함

원주시 마을상수도 현황(2020년 기준)

시설수	취수원		평균급수량 (톤/일)	급수인구	
	지하수	계곡수,용천수		가구수	인구수
24	24	0	787	947	2,309

출처 : 원주시(2020년)

- 원주시 마을상수도는 다음과 같음. 문막읍 비두리 사흥, 소초면 교항리 독점, 소초면 교항리 백배미, 소초면 학곡리 백교, 소초면 흥양리 상초구, 소초면 흥양리 상황골, 호저면 고산리 본동2, 호저면 광격리 영산, 호저면 무장리 장포, 호저면 산현리 산현마을, 호저면 옥산리 지촌, 지정면 신평리 누산동, 지정면 월송리 월호, 부론면 단강리 작실, 부론면 단강리 조귀농, 부론면 정산리 중간말, 귀래면 귀래1리 평촌, 귀래면 귀래리 탑동, 흥업면 대안리 대송, 흥업면 대안리 상하해삼, 판부면 금대리 양금대, 판부면 금대리 한여동, 신림면 송계리 계야, 신림면 송계리 송계, 신림면 황둔리 청용, 무실동 송삼부락의 마을상수도가 있음
- 원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송계리와 귀래리 마을상수도에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도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필요함
- 원주지역 마을상수도(24곳) 및 소규모 급수시설(70곳)은 총 94곳으로 모두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음. 하루 평균 급수량은 1,951t,이용자는 5,800여명으로 농촌지역 인구의 7%가 사용하고 있음. 원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선해야 함
- 하지만 이들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마을 대표가 관리하고 있음. 예산은 지난 2017년 25억원에서 올해 현재 11억원으로 약 44% 감소했음. 이중 마을상수도 개보수 예산은 14억원에서 5억원으로 36% 줄어들었음. 원주시 읍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공급 확충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함
- 지하수는 지표에 내린 빗물이나 눈이 땅속으로 침투하여 고여 있거나 흐르는 상태의 물을 말함. 지하수는 하천수 등의 지표수와 함께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또는 대체수자원으로서의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이 필요함

- 원주시는 기후위기 시대, 중장기적으로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물-에너지-식량 연관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피고, 물 확보(water security) 문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물관리정책은 수량과 수질 및 생태계 사이의 통합관리의 형태(수량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 수자원관리체계 등)로 전환되고 있음
- 원주시에서도 물관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장(場)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농촌지역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적형평성 실현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함

□ 추진전략

- 물순환 거버넌스 구축
 - 시민중심 먹는물 관리 혁신
 -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필요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
 - 안정적 수량과 안전한 수질 및 생태계 사이의 통합관리
(수량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 수자원관리체계 등)
 - 물공급과 이용의 불공평성과 불균형 감소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지방상수도(급.배수관) 확충
 - 누수율 방지 및 노후 급.배수관 교체
- 안정적인 물생산 및 수질개선
 - 정수처리 고도화(마을상수도 포함) 및 먹는물 수질 관리
 -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 농촌지역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및 하수처리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 하수처리시설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 이행(추진)계획

① 시민중심 먹는물 관리 혁신

- 물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수도시설과]
 - 물복지사각지대해소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신설사업 추진
 - 소규모수도시설 관로 유지관리 활성화
-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수도운영과]
 -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및 수질관련 민원 신속처리
 - 수돗물 안심확인제 전담반 운영
 - 수도 및 음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 정수처리 고도화 [수도운영과]
 - 고도처리시설 운영

② 농촌지역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

-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 관망 확장 [수도시설과]
 - 농촌생활용수 상수도 보급 및 상수도관 확충
 -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수도시설 확충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수도시설과]
 - 노후 상수도시설의 교체
 - 관망관리체계 구축
 - 싱크홀 발생 안전사고 예방 대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 [수도운영과]
 -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련 사업 홍보
 - 지하수 실태조사 및 관리
 - 지하수 수질 검사 관리 및 비용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실적	km	6	6	6	6	6	
수질안심도	%	100%	100%	100%	100%	100%	
고도처리시설 운영 여부	여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설치 실적	km	10	12	12	14	12	
노후 상수도시설의 교체 정비실적	km	5	5.5	6	6	6	
관망관리체계 구축 공정률	%	81	100	100	100	100	소블록 구축계획 (71블록)
지하수 오염방지 관련사업 홍보 횟수	횟수	2	2	2	2	2	연 2회
지하수 실태조사 실시 여부	건수	5	5	5	5	5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및 비용지원 가구수	가구	20	20	20	20	20	도비지원 따라 변동 가능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물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정수처리 고도화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 관망 확장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29,650,114	8,963,070	7,404,070	7,404,070	7,404,070	
물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국·도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시비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정수처리 고도화	고도처리 시설 운영	국·도비	-	500,000	-	-	-	
		시비	1,000,000	1,100,000	600,000	600,000	600,000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 관망 확장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설치	국·도비	-	-	-	-	-	
		시비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노후 상수도 시설의 교체	국·도비	8,609,150	-	-	-	-	
		시비	7,193,85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관망관리체계 구축	국·도비	4,423,100	583,000				
		시비	3,618,900	476,000	500,000	500,000	500,000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이용		국·도비	1,057	535	535	535	535	
		시비	4,057	3,535	3,535	3,535	3,535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p>주무부서: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p> <p>협업부서: 하수와,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기후에너지과, 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p> <p>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형평성 물순환 거버넌스 참여 ▪ 물절약 및 수돗물 모니터링 참여 ▪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방안 협력 ▪ 환경, 기후변화 관련 중간지원조직 ▪ 지역내 농업, 에너지, 환경단체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 단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절약, 수자원 확보, 오염방지 등 환경 분야 ESG경영 추진 ▪ 기술 협력 ▪ 환경보호 및 수자원 확보, 불평등 해소 사회적책임 이행 ▪ 관내 공공기관 ▪ 공단협의체 ▪ 수처리 관련 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확보를 통한 소중한 지역자산화 기여
- (사회) 농촌지역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로 사회적형평성 제고
- (환경)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오염 방지
- (거버넌스) 민관산학 협력으로 물-에너지-식량 연관관계(Water- Food- Energy- Climate Nexus) 강화

추진 부서	수도시설과장 정형택(☎737-4230) / 수도팀장 김기락(☎4231) / 담당자 신영근(☎4234) 수도개량팀장 김수웅(☎3781) / 담당자 김창완(☎3782) 담당자 안동혁(☎3784) 마을상수도팀장 이상덕(☎4251) / 담당자 이재우(☎4254)
	수도운영과장 김치연(☎737-4300) / 시설운영팀장 원길재(☎4235) / 담당자 은상빈(☎4430) 정수관리팀장 박근숙(☎4245) / 담당자 정예진(☎4208) 지하수팀장 손미자(☎4275) / 담당자 최소라(☎4276) 담당자 정찬희(☎4292)

U N 목 표	Goal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원 주 목 표	원주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목 표 지 표	온실가스총배출량 감축률	2018	2025	2030	2040
		기준점	15%	45%	100%

7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고 경고
 -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현재 2011~2020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
 - 산업화 이전 대비 2081~210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일 때 1.0~1.8℃,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일 때 3.3~5.7℃ 상승
 - 산업화 이전 시기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수준의 극한고온(폭염 등)은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에 빈도는 8.6배 증가 전망
- 국제사회는 탄소감축을 위한 국경 조정세 도입, 국가별 탄소감축 의무 강화 등의 움직임을 일으켜 청정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생태계로의 전환에 미칠 영향이 크게 작용할 전망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 기업들이 RE100(신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하면서 산업계도 점점 확대하고 있음
 - 애플, GM, BMW 등 세계적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들의 가입 및 구체적 행동 촉구(국내 협력업체 - 애플 200여개, BMW 30여개, GM 30여개)하여 원주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

-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28.)에 이행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7.), 범부처 TF 구성·운영('20.12.15.)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유엔 제출('20.12.30.)
-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1.9.)하여 대폭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본격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
- 2050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한 40% 감축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21.10.)
 -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
 -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
 -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 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극 추진
- 강원도는 정부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순배출량 3천4백4십만톤CO₂-eq 이상의 온실가스를 0(ZERO)으로 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전략 12대 과제추진('21.2.)
 - 그린·액화수소 등 에너지 대전환(그린·액화수소 경제 실현, 그린 Mobility 확산, 신재생·미래 에너지 지속 확대)
 - 주요 배출 산업의 저탄소 및 자원화(화력발전 연료전환 및 탄소광물화, 시멘트산업 NET-ZERO 및 자원화, 자원 재활용 종합 콤비나트 조성)
 - 건강한 산림관리와 관광자원 탄소중립(젊은 산림 흡수원 관리와 자원화, 대형리조트 등 관광시설 친환경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 디지털 탄소중립 및 기후 안심인프라 확대(디지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거버넌스, 이상기후 정보화 및 먹거리 안전 확보, 탄소중립 남북 협력사업)
- 원주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05년 대비 5% 감축 목표를 수립해놓고 있으나 탄소중립에 맞춰 전면 상향 설정이 필요함

원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on co2eq)

총배출량(2005년)	총배출예상량(2020년)	감축정책시행시예상배출량	예상감축량
1,272,591	1,644,079	1,208,870	435,209

자료: 원주시 기후변화대책

-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정밀수집,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분야별 대응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적응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원주시 부문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단위: 천톤 CO2eq.)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1299	1192	1526	2030	2682	3159	3769	1048	1085	1010	1275	1197	1193
에너지	1241	1199	1637	2273	3002	3391	3916	1195	1233	1169	1420	1338	1343
산업공정	51	50	59	60	56	62	64	67	71	59	58	65	64
AFOLU	1) 토지포함	-180	-239	-349	-469	-535	-448	-357	-351	-354	-349	-328	-326
	2) 토지제외	63	58	65	64	60	61	57	62	58	57	57	57
폐기물	187	182	178	167	160	153	147	138	134	131	126	120	106

- 1) AFOLU(토지포함) : 토지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배출/흡수량
 2) AFOLU(토지제외) : 토지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출처 : 한국환경공단(2019)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 2018년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하지 않아 원주시의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함
- 원주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감축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함

- 원주시 에너지 수급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수송부문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정부문, 산업부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원별로 나누어 본다면 석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력, 가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주시 에너지 수급 통계(2019년 기준)

구분	부문별					에너지원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	석유	가스	전력	열	신재생 및 기타	
(단위: 천toe)	742	132	299	161	118	31	351	165	212	-	14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2021.5)

- 원주시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에너지수급 통계를 바탕으로 배출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직접 배출량 1,604천톤, 간접 배출량 1,131천톤으로 산정되어 총 2,375천톤CO₂ 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이 총 1,053천톤CO₂ eq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부문에서 952천톤, 상업부문이 552천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배출량은 가정부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배출량은 상업부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원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2019년기준)

원주시 GHG Emissions	단위 : tCO ₂ eq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합계
최종에너지	1,603,820	1,130,954	2,734,774
산업부문	714,060	338,736	1,052,795
수송부문	62,007	-	62,007
가정부문	720,639	231,654	952,293
상업부문	89,933	462,358	552,291
공공부문	17,182	98,207	115,389

출처: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2021.5)의 원주시 에너지 수급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배출계수를 통해 환산 추정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탄소중심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강원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에서 원주시는 18개 시군 평균(5.4%)에도 미치지 못하는 3.29%임
- 원주시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강원도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합계 및 공급비중(2019년 기준)

구 분	신·재생에너지 합계(toe)	재생에너지 (toe)	신에너지 (toe)	지역별공급비중 (%)
강원(전체)	1,287,702	1,287,500	202	100.00
춘천시	143,591	143,556	35	11.15
원주시	42,417	42,417	-	3.29
강릉시	299,634	299,634	-	23.27
동해시	199,386	199,386	-	15.48
태백시	31,549	31,549	-	2.45
속초시	3,825	3,825	-	0.30
삼척시	110,844	110,844	-	8.61
홍천군	21,911	21,911	-	1.70
횡성군	33,695	33,692	4	2.62
영월군	160,457	160,457	-	12.46
평창군	78,630	78,473	157	6.11
정선군	27,323	27,323	-	2.12
철원군	24,378	24,378	-	1.89
화천군	35,743	35,743	-	2.78
양구군	16,802	16,802	-	1.30
인제군	24,378	24,378	-	1.89
고성군	22,500	22,500	-	1.75
양양군	6,760	6,760	-	0.52
기타	3,880	3,875	6	0.30

자료: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1), 한국에너지공단

- 원주시 신재생에너지 총보급량은 89,384kW이며, 일부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태양광과 폐기물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주시 신재생에너지 총보급용량(발전)(2019년)

구 분		단위: kW	
신·재생에너지 총보급용량(발전)		총계	89,384
		사업용	79,878
		자가용	9,506
재생에너지	태양광	계	77,514
		사업용	68,008
		자가용	9,506
	바이오	계	1,870
		사업용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890 980
		자가용	-
	폐기물	계	10,000
		사업용	SRF 10,000
		자가용	-

자료: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0), 한국에너지공단

- 원주시의 용도별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40.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산업용 29.4%, 가정용 22%, 공공용 8.3%로 나타남. 산업용 중에서는 제조업이 2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원주시 용도별 전력사용량 (2020년)

단위(MWh)

연도	합계 (%)	가정용 (%)	공공용 (%)	서비스업 (%)	산업용			
					소계	농림수산업 (%)	광업 (%)	제조업 (%)
2015	2269938 (100)	421919 (18.6)	174410 (7.7)	962461 (42.4)	711148 (31.3)	51089 (2.3)	11236 (0.5)	648823 (28.6)
2016	2390863 (100)	440019 (18.4)	176238 (7.4)	1022498 (42.8)	752117 (31.5)	54422 (2.3)	15051 (0.6)	682644 (28.6)
2017	2412272 (100)	449212 (18.6)	178612 (7.4)	1038026 (43.0)	746422 (30.9)	57819 (2.4)	16700 (0.7)	671903 (27.9)
2018	2477891 (100)	490216 (19.8)	214804 (8.7)	1040739 (42.0)	732132 (29.5)	61685 (2.5)	0	670447 (27.1)
2019	2461738 (100)	504254 (20.5)	211572 (8.6)	1006409 (40.9)	739503 (30.0)	66608 (2.7)	0	672895 (27.3)
2020	2432503 (100)	534186 (22.0)	201250 (8.3)	982025 (40.4)	715042 (29.4)	60975 (2.5)	-	654067 (26.9)

자료: 2021 원주시통계연보

- 국가와 강원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로드맵 추진 필요
 - 국가가 2050년, 강원도가 2040년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는 2040년 이전에 달성하겠다는 노력이 절실함
 - 원주는 직접배출량은 가정과 산업부문, 간접배출량은 상업과 산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원주의 204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민관산학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담대하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 수립과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시민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원주시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

□ 추진전략

-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원주시의 인벤토리는 2017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집계하였으나 이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구축 권고
- 탄소중립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은 원주시민들의 생활행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모든 부문의 변화와 혁신 필요
- 탈탄소에너지자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적극적 추진
 - 가정, 상업, 제조 부분의 에너지자립을 추진하는 조례 제정
 -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획기적 노력 추진
- 산업계의 협력과 행정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추진
 - 원주 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단지의 RE100 지원 등을 통한 ESG 확산
- 장기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기후기금 등 검토
- 민관산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2040 탄소중립 기구의 설치로 탄소중립 추진과 점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및 확대
 -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이행(추진)계획

① 시민참여형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추진 [기후에너지과]

○ 원주시 탄소배출량조사(인벤토리)

- 수송, 가정, 산업, 상업, 공공부문 인벤토리 구축
- 인벤토리 DB 구축

○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배출 목표 도출
- 2030년 목표 이행경로 도출

○ 탄소중립추진거버넌스 운영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및 확대 방안
-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 로드맵 이행에 대한 세부사업별·종합적 이행점검

② 탈탄소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과]

○ 기업 ESG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원주 RE100 민관산협의체 구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시민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융·복합 설치 지원
- 에너지자립 시범마을 지원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원주시 탄소배출량 조사(인벤토리) 실시	실시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이행률	%	90	100	100	100	100	
탄소중립추진거버넌스 운영 횟수	횟수	2	2	2	2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준비	준비	제정	운영	운영	운영	
신재생에너지 지원 개소	개소	97	100	110	110	110	
신재생에너지설비 용·복합 설치 지원 개소 수	개소	155	150	200	200	20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원주시 탄소배출량조사 (인벤토리)		■	■	■	■	■	■	■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	■	■	■	■	■	■	■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운영		■	■	■	■	■	■	■	■	■	■	■	■	■	■	■	■	■	■	■
기업 ESG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	■	■	■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	■	■	■	■	■	■	■	■	■	■	■	■	■	■	■	■	■	■
시민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3,600,000	3,650,000	3,800,000	3,850,000	3,900,000	
원주시 탄소배출량조사 (인벤토리)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국·도비		70,000	-	-	-	-	
	시비		30,000	-	-	-	-	
탄소중립추진 거버넌스 운영	국·도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시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기업 ESG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국·도비		2,100,000	2,2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시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시민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국·도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시비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업부서: 환경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위원회: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탄소중립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2040 선언 ▪ 탄소중립거버넌스 참여 ▪ 탄소중립 실천 선언 ▪ 시민사회단체 ▪ 중간지원조직 ▪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선언 및 협의회 참여 ▪ ESG 경영 추진 ▪ 정의로운 전환 지원 ▪ 공공기관협의회 ▪ 공단협의회 ▪ 소상공인연합회, 협동조합

□ 기대효과

- (경제) 탄소중심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 전환으로 성장동력 확보
- (사회) 탈탄소사회로 이행을 통한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 보장
- (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생태계 보전
- (거버넌스) 민관산학의 협력과 협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참여

추진 부서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737-3170) / 기후정책팀장 박성명(☎3171) 신재생에너지팀장 원정희(☎3191) / 담당자 남재권(☎3192)
------------------	--

U N 목 표	Goal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원 주 목 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목 표 지 표	시민의 일자리 충분도 ※원주시 사회조사	2021	2025	2030	2040
		2.46	2.7	3.2	4.2

8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기반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유엔(UN)은 2023년 4월 18일 개최한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함
 - 2022년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같은 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잡힌 발전을 고려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정의 및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에게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지역별 정책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당부함⁴⁴⁾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 중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 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육성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옴. 이 과정에서 과거 출범했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광역선도 산업육성사업’ 등이 몇 차례 정책변화를 거치며 2015년 ‘협력사업’, ‘주력사업’, ‘전통사업’ 3개의 구조로 개편됨

44) 회원국들에게 당부한 사항은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법체계 개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 포함’, ‘사회연대경제 재정 및 공공구매 인센티브 제공’, ‘교과과정에 사회연대경제 내용 반영’, ‘역량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강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정책개발 과정 참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금융서비스 및 펀딩 접근성 향상 지원’ 등이 있음

- 이런 가운데 2022년 출범한 현 정부는 경제분야 국정목표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를 내걸고, 120대 국정과제 중 26개를 경제분야로 구성함. 이 가운데 지역경제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관련 과제들을 주요 항목에 포함시킴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중소기업정책을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현 정부 국정 비전 및 경제분야 국정과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	(정치·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과제 (2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 추진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계 지원 강화 · 거시경제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주력산업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구현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7.6.)

- 지난해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역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내걸고 4대 정책방향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제시함. 이 가운데 민간중심 역동경제는 중소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 강원도는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e)모빌리티’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 흐름이 전기자동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 외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이 한결 수월해진 만큼,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임
 - 대표적으로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소형전기자동차와 전기바이크 등 퍼스널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도내외 자동차부품 기업과 연계를 통해 생산·수출 거점 생태계를 조성함
 - 또한 원주시를 중심으로 부품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철원과 강릉은 나노소재와 해수리튬 생산거점, 동해는 향후 전기선박 생산단지와 이모빌리티 제품의 수출 거점향으로 육성할 계획임. 춘천권을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한 이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단지 구축, 도내 시·군이 협력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세움
- 원주시의 산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많이 포진돼 있는 구조로, 제조업 비중이 높음.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체 비중을 보면 ‘의료정밀기기’ 및 ‘식료품’, ‘기타기계’, ‘금속가공’, ‘전기 장비’ 순으로 나타남.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 ‘의료정밀기기’, ‘기타기계’ 순을 기록함

원주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단위: 개소, 명)

연도별	합계		식료품		음료		섬유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2018	1,464	29,352	160	4,629	14	124	21	154
2017	891	16,390	95	2,875	13	113	15	100
2016	1,011	18,202	125	3,025	13	113	15	104
2015	978	17,096	121	2,710	13	113	15	102
2014	925	16,774	120	2,802	13	113	13	94

연도 별	의복 및 모피		목재 및 나무		펄프, 종이		인쇄 및 기록매체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2018	11	422	40	261	31	327	19	165
2017	10	345	39	210	20	201	12	125
2016	11	419	39	217	23	216	16	142
2015	12	344	39	207	24	224	12	128
2014	11	344	38	193	22	205	9	119

연도 별	코르크 연탄 석유정제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고무 및 플라스틱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2018	6	58	59	488	28	1,422	92	1,413
2017	5	45	42	258	15	508	54	954
2016	5	50	47	325	16	723	64	958
2015	5	61	46	322	16	660	63	986
2014	5	87	44	311	15	566	60	982

연도 별	비금속 광물		제1차금속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부품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2018	89	1,122	11	152	129	1,102	60	1,403
2017	60	622	8	100	80	468	40	832
2016	72	844	8	102	90	675	40	839
2015	72	828	7	109	81	557	43	851
2014	65	771	6	105	79	607	43	847

연도 별	의료, 정밀, 기기		전기 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2018	263	4,096	122	1,634	150	3,129	82	6,580
2017	121	1,728	62	921	88	1,659	52	3,821
2016	146	2,189	66	956	101	1,810	53	3,963
2015	146	2,046	57	909	98	1,792	50	3,636
2014	134	1,833	53	914	91	1,725	50	3,693

자료: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 하지만 원주시는 2022년 기준 지역활력지수⁴⁵⁾가 27.94로 전국 상위 30위 밖에 위치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과 생산인구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 세부적으로는 인구활력도 29.3, 소비활력도 26.8, 생산활력도 27.97을 각각 기록해 강원도 지자체 중 가장 높았지만, 전국 1위인 수원시의 지역활력지수(82.21)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임
- 민선 8기 원주시정은 6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를 경제·산업 분야 핵심으로 삼음.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대기업 유치

45)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생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인구’, ‘소비’, ‘생산’ 등 부문별 활력도를 종합해 도출함

를 통한 중심도시로 성장, ‘원주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 정책’ 을 잡았으며, 택지개발 조성과 산업단지 완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민선 8기 원주시 경제분야 공약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핵심 공약	세부 공약명
	대기업 유치를 통한 중심도시로 성장	
부론 IC 개통 추진		
원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정책		부론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완성
		택지 개발·조성
		①문막읍내 택지 개발 ②반도체 배후도시 추진 ③대학타운 조성
		시작 직속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전통시장 클린하우스 설치
		남부시장 문화관광시장 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에 원주푸드 우선공급제 실시
		지역업체 우대 적극 시행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상지대 후문 원상복구 추진		

- 원주시는 2023년 현재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 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역경제회복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제장벽을 낮추고 지리적 이점과 산업성장을 기반으로한 경제분야 전환을 추진중임
 - 핵심 정책으로 ‘중·대규모 우량기업 3개사 이상 유치’ 를 내걸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며, 정부 지원과 관련된 업종(반도체, UAM⁴⁶), 2차 전지, 바이오, K-방산)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움. 이를 위해 ‘유치대상 기업 분석·입지 마련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 ‘전방위 홍보 및 기업유치 활동 추진’ 등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임⁴⁷
 - 이와 함께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준공하고 가칭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과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음
 - 연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속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10개 분야 84개 사업에 총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46)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교통체계인 ‘도시항공교통’을 말함. 항공기 기체 뿐만 아니라 항공관계, 이착륙 시설, 교통서비스 플랫폼 등을 포함함

47) 세부 전략으로 ‘기업 DB 구축 및 분석’, ‘유치대상 입지 마련’, ‘투자유치 가능성 타진 위한 사전 설문조사’, ‘투자유치 조례·규칙개정 추진’, ‘투자유치 홍보 추진체계 구축’,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 활동’ 등이 있음

: 대표사업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유통량 확대’, ‘청소년 꿈이룸 지원사업 선불카드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배달앱 할인쿠폰 조기발행 및 발행량 확대’ 등이 있음

- 더불어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3년 6월 상지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과 4자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도모함

○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지역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할 사회적경제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활성화 작업을 추진 중임. 이미 「원주비전 2045 장기종합발전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및 문화산업 육성’을 세우고, 2030년까지 달성할 세부과제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인프라 구축’을 포함시킨 바 있음

- 과제의 핵심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을 위한 제도 개선’, ‘전략사업(마을 프랜차이즈·협동비즈니스·돌봄서비스 등) 개발’임.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통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주체 발굴 및 교육, 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 홍보·마케팅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의 핵심 기지로 조성할 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인프라 구축 예산(단위:억원)

구분	합계 (국·도·시비)	단계별		
		단기 (20~22년)	중기 (23~30년)	장기 (31~45년)
총계	300	192	108	-
원주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제도 개선	220	176	44	-
전략사업 개발 및 지원	80	16	64	-

자료: 원주비전2045장기발전종합계획(2020)

- 더불어 민·관 주체들도 사회연대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22년 3월 개소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와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는 관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산제품을 한 곳에 집적하는 기능을 함

- 이에 원주시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시정 방침과 관내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표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양극화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주로운 포용도시를 만드는 것임. 지역사회 역시 주민 주도로 선도해온 원주의 사회연대 경제를 기반으로 ‘인간중심 경제’, ‘모두를 위한 산업’으로 잡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보태고 있음(시민속의위원회 논의 사항)
 - 특히 주요 시정방침인 기업유치의 경우, 지역경제 과급효과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립 도시 전환을 함께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⁴⁸⁾에 맞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지역경제 생태계 전환을 적극 도모해야 함
 - 2040년 원주의 미래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선 앞으로 20년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정목표인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함

□ 추진전략

- 관내기업 투자 지원 강화로 탈지역 유출 방지 및 향토기업 육성
 - 중·대규모 우량기업 및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 조성
- 입지 확보를 통한 원활한 기업유치 기반 마련
 - 면적별 개별입지 리스트 확보로 적극 대응
- 지역 중소기업 우대 및 자금지원 통한 기초체력 증진
 - 장기적 경기침체 속 재정적 안전망 마련

48) 택소노미(Taxonomy)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위해 제정한 녹색분류체계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우리나라는 1)온실가스 감축, 2)기후변화 적응, 3)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순환경제로의 전환, 5)오염방지 및 관리, 6)생물다양성 보전 등 여섯 개 목표를 명시하고, 2개 부문(녹색부문/전환부문) 74개 경제활동을 규정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업 및 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제공
 - 온누리 상품권 확대 통한 이용객 증가
- 사회적기업 경영안정 기반 조성
 - 지자체 관련 보조사업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 민·관 거버넌스 통한 정책 내실화
 - 사회적경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통 및 협의체계 상설 운영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주체들의 소통 활성화
 - 신규 주체 진입, 기존 주체들의 자원 및 전략 공유를 위한 후방 지원

□ 추진계획

- 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투자유치과]
 - 기업유치 확대
 - 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 통한 유치기업 수 증대
 - 기업유치 기반조성 강화
 - 유희부지 파악, 산업단지 조기 착공 등 기반조성 면적 확대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지원 일자리과]
 -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재정지원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제진흥과]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관련 재정지원 확대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경제진흥과]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제진흥과]
 -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보조

사업 등 핵심사업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

○ 민·민 주체 간 소통기구 활성화(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 사회적경제기업 자원 협업 및 자발적 혁신 동력 마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도시재생센터, 대학 등 유관 조직과 협력 확대

○ 청년세대 등 신규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청년세대 등 사회적경제 활동 및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유치기업 수	개수	6	6	6	6	6	
기업유치 기반조성 면적	m ²	-	-	600,000	100,000	10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백만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억원	-	100	100	120	120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억원	68	69	70	71	7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금액	백만원	원주시 총구매액 (물품,용역) 의 1.25%	원주시 총구매액 (물품,용역) 의 1.25%	원주시 총구매액 (물품,용역) 의 1.25%	원주시 총구매액 (물품,용역) 의 1.26%	원주시 총구매액 (물품,용역) 의 1.26%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횟수	10	10	10	10	10	
청년세대 등 신규 주체 역량강화 교육(또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	횟수	5	5	5	6	6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기업유치 확대																					
기업유치 기반조성 강화	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																					
민·민 주체 간 소통기구 활성화																					
청년세대 등 신규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21,303,795	21,328,000	22,705,000	23,748,000	26,909,000	
기업유치 확대	국도비		11,246,370	11,300,000	11,305,000	11,306,000	11,307,000	
	시비		3,887,725	3,888,000	3,890,000	3,900,000	4,000,000	
기업유치 기반 조성 강화	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도비	-	-	-	-	-	
		시비	200,000	-	-	-	-	
	산업단지 조성	국도비	-	-	-	-	-	
		시비	-	500,000	1,000,000	2,000,000	5,00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국도비	-	-	-	-	-		
	시비	2,027,000	2,9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도비	-	-	-	-	-		
	시비	742,700	1,060,000	1,330,000	1,350,000	1,410,000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국도비	-	-	-	-	-		
	시비	-	-	-	-	-	부서별 예산	

사회적기업 육성	국도비	2,900,000	1,500,000	1,500,000	1,510,000	1,510,000	
	시비	280,000	160,000	160,000	161,000	161,000	
민·민 주체 간 소통기구 활성화	국도비	-	-	-	-	-	
	시비	-	-	-	-	-	비예산
청년세대 등 신규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국도비	-	-	-	-	-	원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시비	20,000	20,000	20,000	21,000	21,000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협업부서: 복지정책과 등 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 시장 이용 사회적경제 가치 내재화 및 실천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 시장과 협력 다각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 조직 무위당사람들 관내 대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 기대효과

- (경제) 지역 순환경제 구축 및 돌봄 등 포용적 일자리 마련
- (사회) 소득양극화 완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환경) 지역 순환경제 구축 기반 탄소발자국 최소화
-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추진 부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737-2910) / 소상공인지원팀장 신일곤(☎2935) / 담당자 조순형(☎2936) 시장활성화팀장 이미영(☎2935) / 담당자 손준영(☎2953) 사회적경제팀장 김미경(☎2951) / 담당자 차세미(☎2952)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737-2910) / 기업지원팀장 김주희(☎2971) / 담당자 문지혜(☎2975)
	투자유치과장 김홍배(☎737-3970) / 기업유치팀장 엄병국(☎3941) / 담당자 정가영(☎3943) / 산단조성팀장 이규완(☎3951) / 담당자 오명석(☎3952)

U N 목 표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원 주 목 표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목 표 지 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2020	2025	2030	2040
	종사자 비중 *원주통계정보	2.3%	2.5%	3.5%	5%

9 문화예술산업 인프라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유네스코는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문학, 미디어아트, 영화, 음식, 음악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도시를 심사해 2004년 10월부터 창의도시로 선정하고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를 조직함
 -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장려해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추구함
 - 2021년 현재 전 세계 90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7개 전 분야에 창의도시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임
 - : 원주(문학), 서울(디자인), 이천(공예와 민속예술), 전주(음식),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 통영(음악), 대구(음악), 부천(문학), 진주(공예와 민속예술), 김해(공예와 민속예술)
-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 네트워크 도시 간 교류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도시브랜드⁴⁹⁾ 가치를 높여 문화·관광 등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또한 창의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현대미술, 패션, 공예,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

49)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 미래비전 등의 이미지를 활용해 도시행정에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도입한 것.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지역특성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업 및 인재유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도시 차별화 전략의 일환임(서울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방향, 2015, 서울연구원)

- 에든버러 국제도서 축제, 맨부커 국제상 등 국제 문학출판도시로서 명성을 쌓은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컨퍼런스,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연간 약 220만 파운드(35억원)의 수익을 냄⁵⁰⁾
 -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 등 다문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로 유명한 미국 산타페의 경우, 인구 당 문화사업체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고 창의산업분야는 연간 11억 달러(1조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 북미 최초로 시 정부 단위에서 디자인 담당부서를 만들었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쇼’ 를 개최하는 몬트리올은 시 문화산업 전체가 창출한 경제적 효과 중 34%를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냄
- 원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201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 준비에 돌입한 뒤 6년이 지난 2019년 창의도시로 지정됨
- 2014년 2월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4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관련 관계자 토론회 개최
7월 원주시 내 ‘창의도시팀’ 신설
 - 2016년 2월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년 7월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2018년 2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원주시를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국내 추천도시’ 로 선정
 - 2019년 10월 원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도시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2018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 2019년부터 선정을 시작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부사업은 ‘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브랜딩’ 같은 인재양성 및 도시정체성 구축 분야와 함께,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분야도 포함함

5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도시 사업추진 및 지원 주요내용 기본(안)

목표	사업분야	세부지원사업(예시안)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 문화도시 운영·관리(조직 및 거버넌스) - 문화도시 R&D(연구개발/평가/모니터링/사업기록) - 도시문화총괄기획자 제도 도입지원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 문화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전문기획·매개)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도시가치 발굴·활용사업	- 문화도시 포럼, 도시문화 아카이브 -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개발/홍보/마케팅)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도시문화학교 운영사업(참여·시작) - 시민 문화클럽 지원사업(문화공동체 육성) - 문화기획지원사업(창작/향유/교육/복지 등) - 문화도시 성과공유회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창의성 인큐베이팅) -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사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사업 (문화도시 여행/도시교류 프로그램 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사업 - 원도심 문화재생사업(도시재생연계 가능)
지역 정체성 획득	지역제안형 도시문화사업	- 지정도시 특성화 제안사업 (지역 스스로 문화사업 자율 제안)

자료: 20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2021),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는 향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비롯해 글로벌 도시 협의체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럽문화수도’ 등과 교류를 통해 문화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임
-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된 국내 12곳 중 강원도에는 원주시, 강릉시, 춘천시 3곳이 있으며, 원주시는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발판 삼아 같은 해 연말엔 문화도시에 선정, 정부의 공식 지원⁵¹⁾을 기반으로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51)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법적으로 ‘문화도시 원주’라는 공식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5년간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됨

- 강원도의 2019년 기준 문화콘텐츠산업⁵²⁾ 매출액은 6,162억 2천만원으로 국내 전체 문화콘텐츠사업 매출 대비 0.5%에 그칠 정도로 미약함⁵³⁾.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체 가운데 세종(0.1%), 전남(0.4%)에 이어 하위 세 번째임
- 관련 사업체수는 2,650개로 전국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 수의 2.5%를 차지하며, 세종(0.3%), 제주(1.1%), 전남(2.3%)에 이어 하위 네 번째임. 또한 강원도 전체 사업체수(14만 6,814개⁵⁴⁾)의 1.8%로 도내 비중 역시 미미함

2019년 문화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지역	업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⁴⁶⁾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비중 (%)
7개시	서울	12,143,400	718,905	4,706,908	3,565,341	6,166,509	376,075	18,019,526	14,908,183	5,623,182	10,893,596	4,004,318	81,125,945	64.1
	부산	512,774	12,273	206,017	315,400	220,299	14,471	254,045	587,648	330,200	239,291	96,215	2,788,633	2.2
	대구	453,853	16,812	214,852	158,762	171,745	299	152,697	349,064	260,914	198,727	93,614	2,071,339	1.6
	인천	449,399	19,594	146,132	139,796	165,493	11,066	111,540	93,342	396,173	153,813	63,650	1,749,997	1.4
	광주	323,653	24,652	28,911	124,750	110,874	25,161	95,095	170,091	96,405	81,391	61,497	1,142,480	0.9
	대전	270,960	11,621	43,145	85,642	54,754	4,140	104,111	207,724	122,184	548,659	58,882	1,511,823	1.2
	울산	146,446	3,598	42,300	49,998	52,950	90	81,660	47,299	9,691	148,310	8,743	591,086	0.5
	세종	31,956	324	9,445	11,845	-	1,832	21,611	10,388	2,036	2,687	-	92,123	0.1
	소계	2,189,041	88,874	690,803	886,193	776,115	57,058	820,760	1,465,555	1,217,602	1,372,878	382,601	9,947,481	7.9
	9개도	경기	5,881,778	456,441	944,502	1,237,118	7,001,763	65,956	1,097,858	1,268,226	4,405,421	4,528,546	864,381	27,751,991
강원		73,540	18,467	74,213	74,332	55,213	3,741	125,427	31,971	56,487	82,100	20,728	616,220	0.5
충북		104,547	2,623	35,756	74,456	34,237	823	97,272	61,228	347,353	74,064	47,072	879,431	0.7
충남		191,162	1,693	47,043	89,296	72,019	3,322	78,137	43,826	229,057	95,274	7,660	858,489	0.7
전북		116,984	11,474	47,323	85,707	74,496	1,474	98,555	81,107	114,943	73,468	15,610	721,140	0.6
전남		60,121	1,557	58,405	60,420	54,812	1,639	100,546	28,657	60,910	54,888	157	482,114	0.4
경북		271,605	23,093	80,106	166,020	92,057	75	145,569	70,630	79,898	206,962	2,397	1,138,412	0.9
경남		263,947	7,712	111,713	166,897	157,027	1,515	187,147	144,314	365,376	269,869	11,813	1,687,330	1.3
제주		45,049	6,409	15,045	26,613	1,090,786	1,329	72,215	30,148	66,656	17,637	4,252	1,376,139	1.1
소계		7,008,734	529,469	1,414,107	1,980,859	8,632,410	79,874	2,002,726	1,760,107	5,726,100	5,402,808	974,071	35,511,265	28.1
합계	21,341,176	1,337,248	6,811,818	6,432,393	15,575,034	513,007	20,843,012	18,133,845	12,566,885	17,669,282	5,360,990	126,584,691	100.0	

자료: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20), 문화체육관광부

-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2011~2016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전국 (3.0%·연평균)과 비슷한 2.9%로 양호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특수가 끝난 2018년 이후 주택시장 부진,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이 겹쳐 하락세를 보임

52)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산업 등을 포함함

53)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20, 문화체육관광부)

54)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2019, KOSIS)

- 원주, 춘천, 강릉 등 거점도시의 성장률이 도내 평균을 상회했으나 도내 낙후지역인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의 부진은 지속됨
 - 도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21.4%(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2차산업의 경우, 관내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갈수록 활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전체 산업단지 73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는 39.7%인 29개소). 이에 따라 제조업 등 기반산업의 성장률 정체로 문화산업 등 여타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콘텐츠가 부족해 지역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은 정체에 머물고 있음
- 강원도는 2020년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을 통해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비전을 세우고, 6대 추진전략⁵⁵⁾ 중 하나로서 ‘지역 산업혁신과 융복합 문화관광으로 지역성장판 육성’을 꼽음
- 해당 전략의 하위 항목인 ‘매력 있는 문화공간 창출과 강원문화 정체성 제고’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도내 육성하기 위해 문화·창의도시를 지향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거점 등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원주를 비롯해 춘천, 강릉 등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창의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짐
- 문화도시로서 원주의 토대는 2003년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마련됨. 이후 그림책을 통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문화도시’ 지정을 거치며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잡게 됨
- 문화도시 원주의 비전은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이며, 3단계 추진목표는 ‘지속가능한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1단계),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실현’ (2단계), ‘도시문화 구축’ (3단계)임
 - 시민과 함께 도출한 81개의 실천과제⁵⁶⁾는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단위인 원주테이블⁵⁷⁾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함

55) ‘포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 산업혁신과 융복합 문화관광으로 지역성장판 육성’,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디지털 행복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관리와 자원 가치 제고’, ‘다극 분산형 국토대응 광역물류 교통망 확충’, ‘북방·평화경제 선도와 한반도 중심지대 구축’

56)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한 100인 원탁회의, 도시문화 아카데미, 시민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창의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 자리를 통해 발굴한 도시 의제

57) 중간지원조직, 시민, 대학, 행정, 예술가, 각 분야 전문가 등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주체들로 구성되며,

문화도시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2021~2025년)

연도	주요 사업계획	주요 사업목표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형 문화지표 개발 및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 그림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문화도시브랜드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시민공유플랫폼(온·오프)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 및 시민중심 공유문화 확산 - 문화연대를 통해 지역창의인재 육성 통합전략 마련 및 운영 - 문화도시 원주형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 문화도시 거점 공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형 문화지표 개발 - 원주스타일 성장지원체계 도출 - 문화도시81 실천과제 실행점검 및 개선안 도출 - 문화도시브랜드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시민공유플랫폼 운영 성장 시스템 구축 - 거점 및 연계 공간(누적 10곳)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창조산업 육성방안 마련 - 일상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동체 시스템 구축 - 원주 문화예술콘텐츠의 브랜딩을 통한 문화 창업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유플랫폼 운영 안정화 - 문화창업 기반 구축 - 문화도시81 실천과제 실행점검 및 개선안 도출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원주형 문화예술교육 시행 - 지속가능한 도시문화경영시스템 효율성을 위한 (가칭)도시혁신센터 확장 검토 - 생명사상과 디지털커뮤니티케어 산업을 결합한 실버산업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81실천과제 실행점검 및 개선안 도출 - 지속가능한 도시문화경영시스템 구축 - 거점공간 및 연계공간 네트워크 20곳 이상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81 실천과제 성과 종합점검 및 문화도시 후기 사업계획 수립 - 시민주도형 협동조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후기 사업계획 도출 - 문화도시 브랜드 안착 -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안착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후기 사업계획에 따름('24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후기 사업계획에 따름('24년 수립)

자료: 2021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2021, 원주시)

- ‘문화도시81 실천과제’ 이행점검을 위해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정부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를 연동한 문화지표를 개발, 시민모니터링단 적용 및 검토를 거쳐 과제이행에 적합한 PDCA⁵⁸⁾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 원주시는 2020년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문화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중장기 고도화 전략을 마련함. 이를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 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을 토대로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사업비 : 440억원(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국비 50% 이내)

모임의 성격, 목적, 사업연계 등에 따라 학습공동체, 전략실행TF, 포럼, 연대사업 등의 형태로 활동함
58)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ion(개선)

문화도시 고도화 전략 단계별 소요예산(단위:억원)

구분	합계	단계별			
		단기('20~'22년)	중기('23~'30년)	장기('21~'45년)	
총계	440	80	160	200	
문화도시 구성 및 고도화 전략	소계	440	80	160	200
	국비	220	40	80	100
	도비	-	-	-	-
	시비	220	40	80	100
	민자	-	-	-	-

자료: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2020)

- 이와 함께 치악산 국립공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황둔 자연휴양림, 소금산 그랜드밸리 등 주요 관광지들이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됨. 기본 생태자원으로는 총 127개의 공원(1,866,494㎡)과 87개소의 녹지(509,888㎡)가 조성돼 있고, 219개소의 하천(연장 664.53km)이 있음⁵⁹⁾. 이는 주민들의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자원이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시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임
 - 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다양한 생태자원은 고유의 어메니티(amenity)⁶⁰⁾는 물론 마을의 역사, 주민들의 이야기, 문화예술인의 상상력 등과 결합해 특색있는 창의문화자원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큼
- 여기에 원주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문화를 즐기는 원주’를 강조하며 지역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음. 이 가운데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이 대표적임⁶¹⁾
- 따라서 원주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다져온 경험을 토대로 창의문화 산업을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
 - 지역사회도 20년 뒤 시민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요건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이를 위해 ‘산업의 중심이 창의문화로 이동하는 담대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시됨(시민숙의위원회)

59)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2020, 원주시)

60) 어떤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가 주는 쾌적성. 아름다운 경관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포함하는 미(美), 감(感), 쾌(快), 청(靑)으로 표현될 수 있음 (네이버 국어사전)

61) 민선 8기 주요 문화예술정책으로는 ‘지역 공연업체, 예술인 계약 우대’, ‘지역문화 예술 경연대회 활성화’, ‘문화예술 전시회 대폭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육성’ 등이 있음

- 원주시는 이 같은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산업 인프라’를 중장기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첫 시작으로 원주 고유의 인적·물적 창의문화 자원 발굴과 함께, 문화예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예술시설) 확충 및 이야기(콘텐츠) 다각화를 적극 도모해야 함

□ 추진전략

- 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
 - 지역 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 확대 통해 문화산업 주체 확보
 - 공간, 재원 등 물적자원을 확보해 추후 자원 간 연계 모색
 - 지역 내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 확충
- 문화를 통한 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 및 도시혁신
 - 시민실천 거버넌스(‘원주테이블’)와 공유플랫폼(‘원주롭다’) 기반 주민 주도성 고양 및 민간 영역 네트워크 확대
- 문화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업 지속성 확보
 - 국내, 해외 문화도시 간 교류 협력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 창의문화를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및 노하우 교류
 -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2024년) 이후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문화예술자원 콘텐츠화 추진
 - 기존 문화자원 재해석 및 스토리화를 통한 가치 재발견

□ 추진계획

① 문화산업 기반 강화 [문화예술과]

○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 문화예술인, 관련 종사자, 공간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연구용역)
-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연계 또는 통합 추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 문학 사료집 발간, 작가에게 듣는 창작법, 도서읽기 프로그램, 원주시 문학의 달 개최
- 문학 창의도시 국제포럼, ‘원주 공공외교 서포터즈’, 문학 창의도시 해외작가 초청 레지던시 사업

○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 사업 추진

- **문화도시 글로벌 브랜드 구축** : 브랜드 캠페인,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 안정화, 도시 간 네트워크, 지역 리서치 및 보고서 발간, 그림책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도시 아카이브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거점공간 조성, 문화도시 연계공간 개발·협력,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시험사업
- **사회적 문화연대 사업 등** : 원주형 문화지표 및 PDCA 모델 운영, ‘원주 테이블’ 활성화 및 테이블 결과 기반 신규사업 실행, 원주문화박람회(가칭) 개최,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② 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 생활예술지원, 원주매지농악브랜드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원주문화재단 기반 추진

○ 문화예술시설 확충

-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연장,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그림책도서관, 시립미술관 등 기 건립 또는 신규 건립 추진

○ 문화예술자원 콘텐츠사업화 지원

- 발굴된 자원별 스토리 정립 및 연계, 각종 콘텐츠사업화 통해 부가가치 향상 도모
- 원주문화재단 기반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여부	여부	-	(준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2024년 이후 추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여부	여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 사업 추진 여부	여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문화예술인 육성 예산 규모 증감율(전년 대비)	%	-	준비	2	2	2	
시민 1인당 문화예술시설 면적	m ²	0.12	0.13	0.14	0.15	0.16	
문화예술자원 콘텐츠사업화 개수	개수	(준비)	24	25	26	27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 사업 추진	■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															
문화예술시설 확충	■																			
문화예술자원 콘텐츠사업화 지원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총예산액			8,224,060	6,131,060	3,193,681	3,257,554	3,322,705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국도비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시비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국도비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시비		1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 사업 추진	국도비		1,500,000	1,500,000	(미정)	(미정)	(미정)	
	시비		1,500,000	1,500,000	(미정)	(미정)	(미정)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국도비		-	-	-	-	-	
	시비		3,131,060	3,131,060	3,193,681	3,257,554	3,322,705	
문화예술시설 확충	국도비		1,20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시비		883,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문화예술자원 콘텐츠사업화 지원	국도비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시비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예정된 국비 보조사업임. 202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될 예정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문화예술과 협업부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위원회: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관광진흥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테이블 참여 및 실천 창의&생태문화자원 발굴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시민사회단체, 대학 중간지원조직(창의문화도시지원 센터 등) 문화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 문화예술기관(원주영상미디어 센터, 원주한지테마파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창의&생태문화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문화예술 기업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 (경제) 문화예술 기반 도시브랜드 확립을 통한 지역 부가가치 확대
- (사회) 문화적 관점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및 도시 혁신 실천
- (환경) 문화예술자원 발굴을 통한 보전가치 확인, 실천
- (거버넌스) 창의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 소통 및 협업 활성화

추진 부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737-2780) / 문화행정팀장 전정용(☎2781) / 담당자 안중호(☎2784) 창의도시팀장 박정일(☎2821) / 담당자 이보람(☎2822) 담당자 황일근(☎2823)
------------------	--

U N 목 표	Goal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원 주 목 표	디지털 불평등과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목 표 지 표	일반시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0	2025	2030	2040
		73%	80%	85%	100%

10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유발함.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⁶²⁾
 - 코로나19로 전 세계 취약 아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6300만명의 학생이 원격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음(UNICEF)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역량은 향후 모든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 생애 전반에 걸쳐 디지털 역량 함양이 필요하고, 디지털 기기의 접근·활용은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OECD기술전망 2019)
 -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2021 글로벌 10대 리스크에 디지털 권력집중(6위), 디지털 불평등(7위) 요소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⁶³⁾의 정보화 수준은 7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9년 69.9%)
 - 부문별로 살펴보면, 접근 93.7%, 활용 74.8%, 역량 60.3% 순으로 나타나, 정보 접근 수준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활용 수준이 저조함
-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고령층의 ICT 활용역량은 현저히 낮은

62)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1970년 지식격차이론(Tichenor, Donohue, Olien)에서 시작됨.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이 열악한 계층보다 미디어를 더 많이 더 쉽게 이용하며 정보습득의 양도 더 많고 정보습득량 또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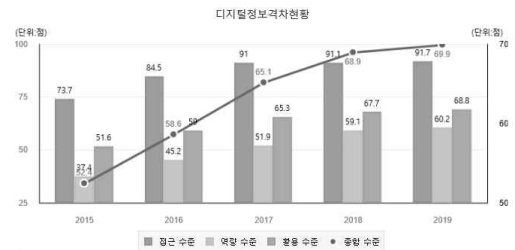
63)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수준으로 디지털 소외문제는 더욱 심각함. 동 조사의 계층별 결과를 살펴 보면, 농어민 77.3%, 장애인 81.3%, 저소득층 95.1%, 고령층 68.6%로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디지털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장애인	62.5	65.4	70.0	74.6	75.2	81.3
저소득층	74.5	77.3	81.4	86.8	87.8	95.1
농어민	55.2	61.1	64.8	69.8	70.6	77.3
고령층	45.6	54.0	58.3	63.1	64.3	68.6
평균	52.4	58.6	65.1	68.9	71.3	80.6

(출처: 국가통계포털)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전환 측정⁶⁴⁾에 의하면 한국의 16~74세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디지털 활용역량은 55~65세 4%, 16~24세 63%로 세대 간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OECD 평균 55~65세 10%, 16~24세 46%)
-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디지털에 관한 논의와 대안 없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개인의 경제 수준에 상관 없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과 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고 디지털 약자의 역량강화가 시급

- 소통, 사회관계망서비스, 키오스크, 모바일 신청·주문·예매·결제·금융·행정서비스 등 비대면·무인화 시스템 보편화로 디지털 장벽과 마주하던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드러난 계기: 2020년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
-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출된 고령층의 디지털 취약성은 실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 생명과도 직결됨을 시사

- 디지털 격차는 아동에도 영향을 미침.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전환되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들은 가정돌봄이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정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비롯, 사회관계·정서적 측면에서 계층별 격차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노출됨
- 이렇듯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변혁이 훨씬 앞당겨졌고, 디지털 전환의 리스크로 예측되어온 디지털 격차는 기본권과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됨. 디지털 불평등⁶⁵⁾ 해소를 위한 공공의 정책 마련이 절실함

64)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2019

65) 사회계층 간 디지털 기술능력에 차이가 있어 서비스 이용과 정보 획득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 2021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차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SDG Moment)’ 에서도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 해소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조함(2021.9.20. 개최세션 문재인 대통령 발표)
-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한 분야로 2020년 6월 ‘디지털 포용⁶⁶⁾ 추진계획’ 을 발표, ①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②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③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④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을 강화하기로 함
 -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디지털 포용은 국민 모두 디지털사회에 대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디지털 혜택을 찾아 누리는 적극적 정책임

정부의 디지털 포용 핵심정책요소

역량 강화	디지털사회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활용역량을 갖추는 것
환경 조성	누구든지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
활용 촉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
기반 조성	시민사회·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디지털 포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출처: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 정부는 2020년부터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제도를 도입함.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생활SOC 공간을 활용해 배움터를 조성, 연간 1,000개소 운영을 목표로 함
 - 2020년 12월말 기준 약 21만명 교육, 4,000명의 지역일자리 창출
 - 2021년에는 평상시 역량교육 외에 비상시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 생존을 지원하는 디지털 안전망(디지털119, 디지털예비군) 역할을 추가
 - 예산은 국비 78%, 지방비 22% 비율 구성, 교육장소 임대료 현물로 인정
 - 총괄거점센터, 거점센터, 일반 교육장으로 구분되어 설치
 - 일반교육 3개(기초, 생활, 심화) 과정, 특별교육 과정 운영
 - 전 국민 대상, 고령자·농어업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우선(20% 내외)
 - 센터별 강사 고용 필수(디지털강사, 서포터즈 센터당 각 2명)
 - 서울(224개), 부산(241개), 대구(20개), 인천(51개), 광주(32개), 대전(33개), 울산(27개), 세종(12개), 경기(132개), 강원(70개), 충북(50개), 충남(52개),

66) (정의)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

전북(64개), 전남(121개), 경북(111개), 경남(98개), 제주(28개)

- 원주의 디지털배움터는 2021년 10월 현재 총 17개소에서 운영 중임
 -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연간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단구동배움터, 명륜작은도서관,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문막읍 주민자치센터, 미리내도서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시립중앙도서관, 영재도서관, 원주메이커스나래, 원주청소년수련관, 원주건강문화센터, 원주상공회의소, 원주시자작나무도서관, 원주시립충천철학도서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강원지부
- 원주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관내 초중고 돌봄교실 등에서 SW 코딩, 스크래치 인공지능(AI) 교육 등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연간 1,000명) 및 관련 SW교육 전문강사(연 20명)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원주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해 2020년 9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308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함. 2021년 7개 마을에 구축 진행 중
- 원주시학습관은 2021년 7월 강원도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함. 은행 ATM, 음식주문, 무인계산대, 무인민원발급기, 영화관 티켓발권, 도어락, 대중교통 승차권 발권(KTX, 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생활밀착형 맞춤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음. 2021년 9월 ‘디지털 문해교육사 양성 전문과정’을 통하여 역량 있는 디지털 문해교육사 11명을 배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였음
- 또한, 원주시학습관은 2022년부터 키오스크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임

- 지역사회 논의(원주-MGoS)⁶⁷⁾ 과정에서 원주시 SDG 10은 모두를 위한 포용도

67)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의견수렴·자문을 위한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 시적 관점의 시설, 공간,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통합적 접근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된 가상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우선 각종 민원 신청 등 디지털 불평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기
 -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불평등 해소는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원주시의 불평등 관리는 공공성 강화와 직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원주시의 불평등 해소는 결과의 평등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곤란하고, 기회의 공정성, 공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기
 - 원주의 공공성 강화는 고령화·노인빈곤 문제 현실을 반영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는 디지털 접근·활용 문제 해결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 따라서 원주시는 디지털 포용도시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낙오자나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보듬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시민역량 확충, 성숙한 디지털문화 확립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원주시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예방은 물론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마련이 되도록 추진 필요
- 이에 다양한 시스템이나 설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문화적 성숙도 담보되어야 함
-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농업인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원주시는 디지털 포용 종합정책을 수립해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Stakeholders)을 의미. 원주시 주요 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 각 읍면동은 시민과의 접점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 디지털뉴딜사업(과기부)과 연계해 통합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 협조
-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 필요 : 일상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일대일 멘토 형식 도입 필요(※ 서울시 어디나 지원단 사업 성공사례 참고)

□ 추진전략

- 인권의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초연결사회 진입을 앞두고 누구나 언제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디지털 포용 정책 기반
- 디지털 사각지대 발굴
 - 원주시 통계 설계 및 실태조사 필요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 이후 활성화 방안
 - 원주시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방안
- 디지털 포용 추진 거버넌스 운영
 - 민·관·산 협력적 거버넌스 통한 디지털 포용 추진과 점검
- 디지털 포용도시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원주시 책임을 규정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복지 제도 안으로 편입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디지털배움터,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 연계를 통한 확대
 - 고령화지역, 농촌지역, 노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기반 구축
- 디지털 사각지대 추가 발굴
 - 디지털 정보화 수준 조사 통한 사각지대 발굴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공공데이터/데이터행정 디지털 정보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
 - 디지털배움터 확대(생활SOC 디지털 역량교육)
 - 찾아가는 디지털 맞춤형 교육(농촌, 고령자, 장애인, 전통시장 등)
 - 낙후된 인터넷 인프라 개선

②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시행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2023.4.) 이후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

○ 디지털 포용 추진 기관 협의

- 디지털 포용을 위한 업무추진 관련 기관 워크숍 및 협의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고민

○ 시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

- 65세 이상 어르신 등 정보화 소외계층 디지털 문해교육 상시 운영
- 청년·중장년 디지털강사 양성 및 교육 매칭
- 청년·중장년 디지털서포터즈 양성 및 교육 매칭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장소 수	개수	11	12	12	13	13	
디지털 배움터 교육인원 수	명	5,000	5,100	5,200	5,300	5,400	
SW미래채움교육 참여자 수	명	1,800	1,850	1,900	1,950	2,000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연차별 시행율	%	100	100	100	100	100	
디지털 포용 추진기관 협의 횟수	횟수	4	4	4	4	4	
디지털 배움터 서포터즈 인원	명	20	20	20	20	2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디지털 사각지대 추가 발굴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시행	■					■					■				■				■	
디지털 포용 추진기관 협의	■																			
시민주도 디지털사회혁신 (디지털 서포터즈)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총예산액			4,780,000	4,880,000	4,880,000	4,880,000	4,880,000	
디지털 사각지대 추가 발굴	전체	국도비	4,530,000	4,530,000	4,530,000	4,530,000	4,530,000	디지털 역량강화 및 SW미래 채용사업 전체 사업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시행		시비	2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시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서포터즈)								
디지털 포용 추진기관 협의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정보통신과 협업부서: 복지정책과, 평생교육원 위원회: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및 시민강사 참여 ▪ 시민서포터즈 참여 ▪ 평생학습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자원, 노하우 공유 ▪ 지역거점 인프라 공유 ▪ 디지털사각지대전담센터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평생학습 관련 중간지원조직 ▪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 마을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소셜캠퍼스온 ▪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이동통신 3사

□ 기대효과

- (경제) 디지털 불평등 해소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 예방, 경제활동 유도, 디지털 일자리 창출
- (사회) 디지털 불평등 해소로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 (환경) 생활SOC 공간 활용과 디지털 적용으로 자원절약과 순환 기여
- (거버넌스) 민관산 협력체계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활동 촉진

**추진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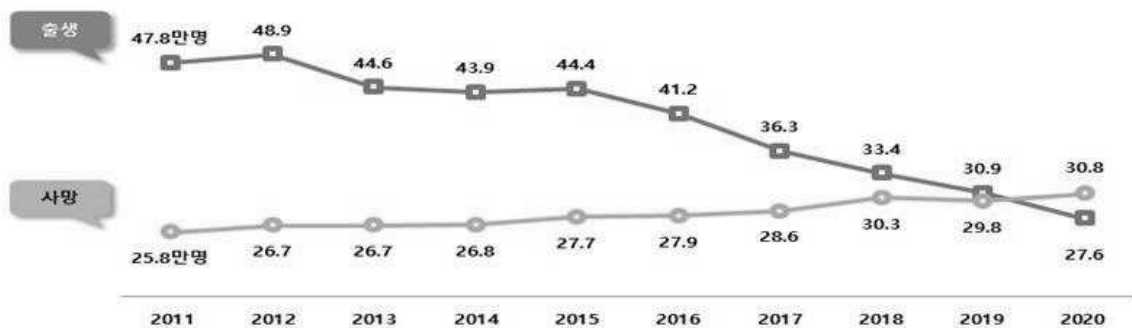
정보통신과장 홍창희(☎737-2530) / 정보기획팀장 김현정(☎2531)

U N 목 표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원 주 목 표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해 일-삶-놀이가 연결된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목 표 지 표	지역생활만족도	2022	2025	2030	2040
		6.28점	7점	8점	10점

11 일터-삶터-놀이터 포용마을 정착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출생·사망통계(통계청)에 따르면 33,000명 자연감소를 기록, 사상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되었음



최근 10년 출생·사망자 수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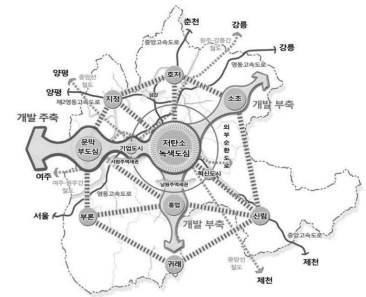
-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수도권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이 대두, 각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 살리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 특히 강원도는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83.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집계됨(지방소멸위험지수조사, 2020, 한국고용정보원)
 - 그러나 원주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2020년에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⁶⁸⁾

6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인구가 증가한 전국 시 단위 지역은 12곳임. 이중 인구증가율 1%를 넘긴 곳은 원주시(1.57%)와 천안시(1.25%) 2곳임

- 2021년 기준 통계청 원주시 장래인구 추계⁶⁹⁾ 결과, 2021년 9월 현재 355,767명에서 2037년 371,176명으로 16년간 15,409명 증가 전망
- 원주 인구증가 추세는 혁신·기업도시 동시 조성⁷⁰⁾과 귀촌인구 증가⁷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신도심 5곳(반곡관설동, 지정면,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의 인구가 49.7%를 차지
 -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혁신·기업도시는 원도심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함. 구도심과 읍면동 20곳은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보여 행정구역의 30% 이상이 소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은 199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이 같은 원도심 인구유출에 따른 신도시-원도심·읍면지역 간 불균형 심화 현상, 지역 내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갈등과 양극화는 원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됨
- 원주시 공간구조는 중심지 집중형 체계로 생활권은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5개로 분류됨. 중심지 체계는 1도심, 1부도심, 7생활거점으로 나뉨

원주시 중심지 체계

구분	해당지역	주요기능
1도심	원주 (혁신도시, 판부, 남원주역세권)	행정, 상업, 업무, 주거의 중추기능
1부도심	문막 (서원주역세권, 기업도시)	산업, 물류 기능
7생활거점	흥업	생활권 중심 기능 (교육문화예술 기능)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신림	생활권 중심 기능 (농업전원주거 기능)



원주시 주요 개발축

출처: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2014, 원주시)

- 원도심 쇠퇴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5개 읍면동 중 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호저면, 중앙동, 소초면, 학성동, 봉산동 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남(2020년 5월 기준). 2018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은 47.4%이지만 원도심은 80%가 넘는 실정임⁷²⁾

69) 국가통계포털, 강원도, 강원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2017~2037), (2021.10월 검색)

70) 혁신도시가 조성된 반곡관설동은 25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며,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은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신도심

71) 2015~2019년 강원도로 귀촌한 15만명 중 원주 귀촌인구는 29,000명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강원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 2021, 한국은행 강원본부)

72) 원인동 87.4%, 중앙동 86.4%, 명륜1동 83.2%, 학성동 82% 등 노후건축물 밀집(출처: 2020,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⁷³⁾ 중 3개 조건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명륜1동, 우산동,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 6개 지역이며, 2개 조건(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을 충족하는 지역은 태장2동, 봉산동 2개 지역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총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중심시가지형 2개소, 일반근린형 3개소, 주거재생형 6개소임
 -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변시설 및 용도를 알맞게 활용한 사례로 평가받음
 - 그러나 지역의 산업을 재생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발굴 부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의 통합추진 부족,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부족, 가시적 사업효과 부재, 빈집정비 난관 등 한계가 지적됨(국토연구원, 2020)
- 이렇듯 원주의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 현상을 보이고 있음. 강원지역 SDGs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원주시' (2021,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하면, 가장 시급히 다뤄져야 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SDG 11이 다수 선정됨. Goal 11⁷⁴⁾의 세부 목표로는 문화가 있는 삶 조성, 지역 재생 및 활력 증진이 다수 선정됨
- 지역사회 (원주-MGoS)⁷⁵⁾ 및 행정 논의 과정에서 원주시 SDG 11은 원주의 자생적 인구는 줄어들고 외부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정착을 희망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거점생활권, 도심 연결, 인구소멸 대응 등의 키워드 이슈를 도출함
- 원주시 차원의 기준과 예방법을 가지고 공간 안에서의 연결과 체감이 앞서는 구조의 거점생활권 마련과 공공교통수단 혹은 도보로 접근이 쉬운 오픈스페이스의 유기적 연결(그린웨이 네트워크)을 강조
 -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SOC계획⁷⁶⁾의 마을 단위 15분·지역 거점 30분

73) ①인구감소 지역(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비교 20% 이상 인구감소,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 ②총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 발생,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지역(출처: 국토교통부)

74) (UN)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조성한다 (국가)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강원도)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7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자문을 위한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을 의미. 원주시 주요 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76)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을 수립, 추진 중. 2020년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개 선정, 2021년에는 149개 선정. 원주시는 2021년도 복합화사업으로 2개 선정됨(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

이내 생활SOC 구축 기준을 원주 원도심 특성에 맞춘 특화된 재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기함

- 특히 주민 삶과 연계되는 생활기반시설을 원도심 특성에 맞춰 공원·텃밭·정원, 문화·교육·체육·의료·돌봄·복지시설 등 구체화해 마을 단위에서 15분 이내에 최소 1곳씩 슬세권⁷⁷⁾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
 - 이를 위해 삶터인 마을이 일터이자 놀이터가 되고 배움터가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기반한 원주시민 삶터 기준을 도출하고, 주민합의에 기반한 주민주도 지역재생을 통해 공동체 붕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 도심 연결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 필요
 - 인구소멸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청년적 유입 정책을 더욱 활성화 필요
- 종합하면, 원주시는 생활권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한 저밀도사회 준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 생활 편리성과 지역 매력 저하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유입 및 도심 연결 인프라 구축으로 균형 잡힌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도시개발방식 혁신을 통한 일터,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포용도시⁷⁸⁾를 비전으로 삼고, 인구감소에 ‘적응’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도시구조로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네트워크형 콤팩트시티⁷⁹⁾ 구조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이는 기후위기 적응 적합도시로의 전환 과정이기도 함
- 원주시민의 생활과 정주성을 위한 제반 조건인 일-삶-놀이-문화를 지역 내 연결하기 위해 15분 거점생활권 사업과 도심 연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시켜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여들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다양한 청년 정책 활성화로 청년층 유입 필요

설(SOC)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공원 등)을 의미함

77) 슬리퍼와 같이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함

78) 포용도시란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물리적·정치적·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도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의미함. 불평등과 양극화를 포용도시의 가치와 이념으로 해소

79) 콤팩트시티는 고밀·근접 개발, 대중교통과 보행 활성화를 통한 도시공간 연계, 지역 공공서비스와 일자리 접근성이 강화된 도시 형태임. 도시공간과 삶의 질 개선 기회

□ 추진전략

- 일터-삶터-놀이터가 어우러진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빈집 활용,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관리회사 운영, 공유사업 도입 등
 - 세대통합 커뮤니티 조성,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주민참여 디자인 등
- 원도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등 선행연구 기반 원도심 생활권 현황조사를 통한 재편안 도출
- 도심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도시연결 인프라 구축
 - 기업도시·본도심·혁신도시의 연결망 확보
- 도심 연계 교통망 구축
 - 주요구조물(터널, 교량) 설치를 통한 교통흐름 원활화
-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 라이프스타일 혁신, 교통체계 등 인프라 혁신 통합추진
- 청년 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강화
 - 청년 정책 분야 전문직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지역전문가 자문단 구성
 - 교육 및 공모사업을 통한 청년 주체 발굴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활성화

□ 이행(추진)계획

① 생활권 중심의 15분 거점생활권 사업 [도시계획과]

○ 15분 거점생활권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 필수 기반시설 지표 및 분석
-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검토를 통한 기초생활권 설정

○ 15분 거점생활권 공간구조 재편 관련 민·관거버넌스 운영

-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재편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 15분 거점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단 및 15분 생활권별 실태조사 결과 검토·반영한 15분거점생활권계획 수립

② 도심 연결 인프라 구축 [건설과]

○ 도심 간 접근성 개선

-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
- 흥업~지정(기업도시), 지정(기업도시)~소초 구간 개통 추진

○ 도심 연계 교통망 구축

- 동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추진
- 봉산~화실, 화실~번재소류지, 번재소류지~백호정사 구간 도로개설

③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과]

○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운영

- 창업아카데미,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 취업 및 커뮤니티 지원, 청년네트워크 구축지원, 심리 돌봄 지원(우울증 치료비), 주거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거점생활권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	착수	추진	완료			용역 (변동가능)
거점생활권 설정 및 기능 부여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횟수	횟수	1	1	1			
거점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여부	여부		착수	추진	완료	-	용역 (변동가능)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율	%				10	20	국도건설계획 따라 국토교통부 추진
동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추진율	%	5	30	60	90	100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이용자 수	명	2,500	2,550	2,600	2,650	2,70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5분 거점생활권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																			
15분 거점생활권 공간구조 재편 관련 민·관거버넌스 운영	■																			
15분 거점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				■				■							
도심 간 접근성 개선													■				■			
도심 연계 교통망 구축	■				■				■				■				■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운영	■				■				■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630,000	17,236,000	26,328,000	21,654,000	2,082,000	
15분 거점생활권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국·도비	-	-	-	-	-	변동 가능
	시비	3,000	3,000	3,000	-	-	
15분 거점생활권 공간구조 재편 관련 민·관거버넌스 운영	국·도비	-	-	-	-	-	
	시비	3,000	3,000	3,000	-	-	
15분 거점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국·도비	-	-	-	-	-	변동 가능
	시비	-	40,000	40,000	40,000	-	
도심 간 접근성 개선	국·도비	-	-	-	-	-	비예산 (국가사업)
	시비	-	-	-	-	-	
도심 연계 교통망 구축	국·도비	-	-	-	-	-	
	시비	624,000	17,190,000	26,282,000	21,614,000	2,082,000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운영	국도비	1,237,956	-	-	-	-	
	시비	1,005,892	-	-	-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도시계획과, 건설과, 복지정책과 협업부서: 건축과, 주택과, 균형개발과 등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마을공동 체만들기위원회, 원도심개 발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생활권 설정.기능 부여 거버넌스 참여 원주도시재생지원센터,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원주문화재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생활권 조성 추진 서비스디자인 추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관내 대학들 연계 협업

□ 기대효과

- (경제) 도심연결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시민 편의 향상
- (사회) 공동체 강화, 매력적인 주거지 재탄생, 정주성 강화, 삶의 질 향상
- (환경) 마을·골목 단위 일터-삶터-놀이터 조성으로 이동거리 증가 방지 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소비 감소, 오픈스페이스 보전
- (거버넌스) 소외되기 쉬웠던 원도심 주민 의견수렴·민관협력, 읍면동 간 연대, 시민참여 프로세스, 공동체 비전 공동 수립, 어린이·청소년 참여

추진 부서	도시계획과장 주준환(☎737-3270) / 도시계획팀장 엄주호(☎3281) / 담당자 김성수(☎3282)
	건설과장 이형진(☎737-3210) / 도로시설팀장 이규호(☎3321) / 담당자 강육현(☎3322)
	복지정책과장 전제천(☎737-2610) / 인구정책팀장 황인정(☎2305) / 담당자 김경민(☎2306)

U N 목 표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원 주 목 표	총폐기물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				
목 표 지 표	폐기물총발생량 (kg/일·인) <small>*기준년도대비 50% 감량</small>	2019	2025	2030	2040
		6.2kg	5.58kg (10%감량)	4.96kg (20%감량)	3.1kg (50%감량)

12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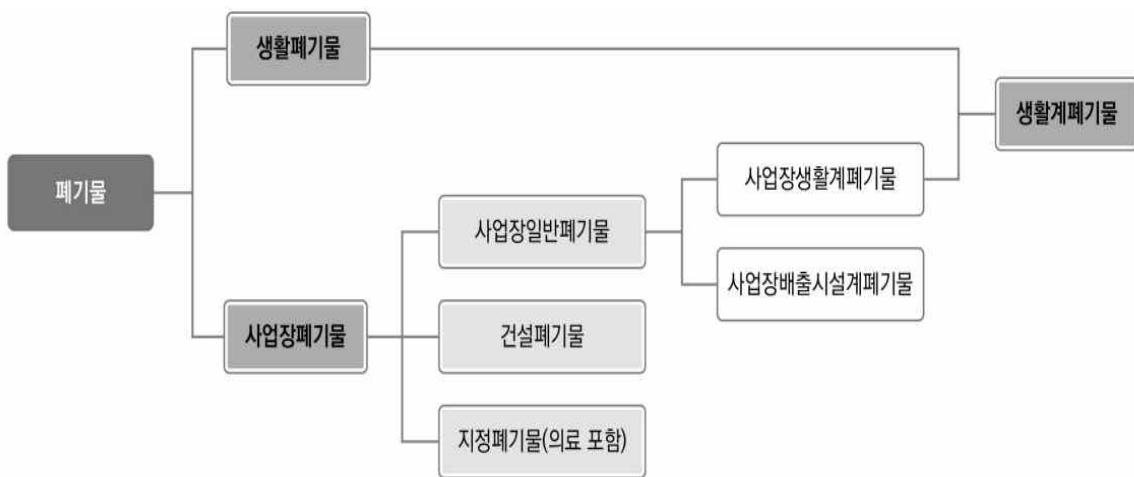
- 자원위기와 기후위기는 생태계, 사회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각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환경·에너지·자원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부각 되어 왔으며,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을 통해서도 강화되고 있음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자원고갈, 매립시설 부족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사회·경제시스템을 단순선형경제에서 자원 순환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임
-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

*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

-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 폐기물 처리 중심 정책의 한계성에 따라 생산-소비-관리-재생에 이르는 물질 순환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16.5.29. 공포)을 제정한 바 있음
 -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제도 등이 도입됨

-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인 ‘자원순환 기본계획’ 이 수립 추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 포함(‘15.9.’)
 -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의 구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임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2번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임
 -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국가지속가능 소비·생산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2020년 평가결과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은 2030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2030 목표 83.8%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추세로 나타났고, ‘식품 폐기물 지표’ 는 뚜렷한 추세 없는 정체 상태로 나타남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각별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발생량이 급증한 상태임.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함. 이와 함께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대책의 별도 마련이 필요함

- 폐기물의 분류는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이 1986년에 제정되어 1991년, 1993년, 1995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건설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지정폐기물(사업장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그림]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 체계

- 원주시 쓰레기 수거 현황을 2015년부터 연차별로 살펴보면, 배출량은 증가 추세였다가 2020년 다소 감소함. 건설물폐기물의 경우 2017년 발생량 408.8톤/일에서 2018년 834.7톤/일, 2019년 821.7톤/일으로 큰 폭으로 증가 후 2020년에는 444.5톤/일으로 감소함. 건설물폐기물의 경우 99%가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물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원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은 2016년도 233.4톤/일에서 2020년 466.2톤/일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발생량도 2016년도 517.3톤/일에서 2020년 689.3톤/일으로 역시 증가함
- 원주시 2040년 지속가능발전목표로는 총폐기물발생량을 2019년 대비 50%를 줄인다는 설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원주시 쓰레기 수거 현황 (2015년~2020년)

연별	행정구역		청소구역		수거지 인구율 (B/A)	배출량 (C) (톤/일)	처리량 (D) (톤/일)	수거율 (D) (D/C) (%)
	면적(km ²)	인구(A)	면적(km ²)	인구 (B)				
2015	867.82	336,029	867.82	336,029	100	1,880	1,880	100
2016	868.28	341,130	868.28	341,130	100	1,552	1,552	100
2017	868.27	344,614	868.27	344,614	100	1,455	1,455	100
2018	868.27	347,421	868.27	347,421	100	1,925	1,925	100
2019	868.24	352,860	868.24	352,860	100	1,884	1,884	100
2020	868.2	357,710	868.2	357,710	100	1,607	1,607	100

연별	처리방법									
	계 (톤/일)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2015	1,880.1	78.5	17.8	1,783.4	0.4	243.3	61.9	0	181.4	0
2016	1,551.6	67.1	14.4	1,469.8	0.3	233.4	29.2	0	204.2	0
2017	1,454.7	126.1	11.9	1,316.7	0	415.1	28.8	0	386.3	0
2018	1,924.9	120.3	9.6	1,794.0	1	434.4	47.6	0	386.8	0
2019	1,883.9	120.9	8.8	1,753.8	0.4	419.9	64.8	0.8	354.3	0
2020	1,606.6	151.2	10.7	1,434.4	10.2	466.2	94.0	0.4	371.7	0

연별	처리방법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2015	384	10	13	361	0	1228	0	0.5	1227.5	24.8
2016	517.3	35.3	9.9	472.1	0	790.2	0	3.6	786.6	10.7
2017	620.9	94.4	9.6	516.9	0	408.8	0.4	1.6	406.8	9.9
2018	634.9	69.5	6.7	558.7	0	834.7	0.2	0.3	834.2	20.9
2019	622.7	53.1	6.6	563	0	821.7	0.7	0.3	820.7	19.7
2020	689.3	54.5	7.2	620.7	6.9	444.5	0.2	3.1	441.2	3.3

연별	처리방법				
	폐기물				
	지정 폐기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2015	6.6	4.3	13.5	0.4	0
2016	2.6	0.9	6.9	0.3	0
2017	2.5	0.7	6.7	0.03	0
2018	3.0	2.6	14.3	1	0
2019	2.3	1.2	15.8	0.4	0
2020	2.5	0.02	0.8	0.02	0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 원주시 2015년부터 2019년 폐기물재활용률을 살펴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차 증가추세였다가 2020년 89%로 크게 하락함.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증가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폐기물 재활용 현황

연별	재활용률 (B)/(A)*100 (%)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A)	재활용 (B)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2015	95	686,310	650,941	88,805	66,211	140,160	131,765
2016	95	579,143	548,962	97,893	86,614	188,814	172,316
2017	91	564,063	513,215	165,637	154,650	226,628	188,668
2018	93	702,587	654,814	158,556	141,182	231,738	203,925
2019	94	802,914	755,371	160,523	137,292	227,290	205,495
2020	89	585,431	523,583	170,362	135,669	251,580	226,572

연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계	전년도 이월량	당해년도 발생량	
2015	448,220	448,037	9,125	136	8,989	4,920
2016	288,533	287,474	3,903	-	3,903	2,558
2017	168,192	167,462	3,606	-	3,606	2,435
2018	304,665	304,483	7,672	14	7,658	5,224
2019	299,925	299,575	7,190	-	7,190	5,767
2020	162,267	161,055	1,222	-	1,222	287

출처 : 원주시통계연보(2021)

-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량(톤)은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폐비닐이 차지함.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 및 처리함

영농폐기물 수거량 현황

구 분	영농폐기물 수거량 (톤)				수거장려금 지급(백만원)			공동집하장 지원(백만원)			
	계	폐비닐	농약용기류		계	시비	국비 (폐비닐)	설 치		보 수	
			플라스틱	봉지				개 소	보조금	개 소	보조금
2019	1,387.90	1,375.66	10.90	1.34	174.54	161.05	13.49	3	15	5	20
2020	1,432.77	1,423.42	7.61	1.74	206.76	192.53	14.23	3	15	5	16
2021 상반기	1,036.88	1,024.32	10.97	1.59	152.79	142.55	10.24	3	15	5	20

출처 : 원주시, 내부자료(202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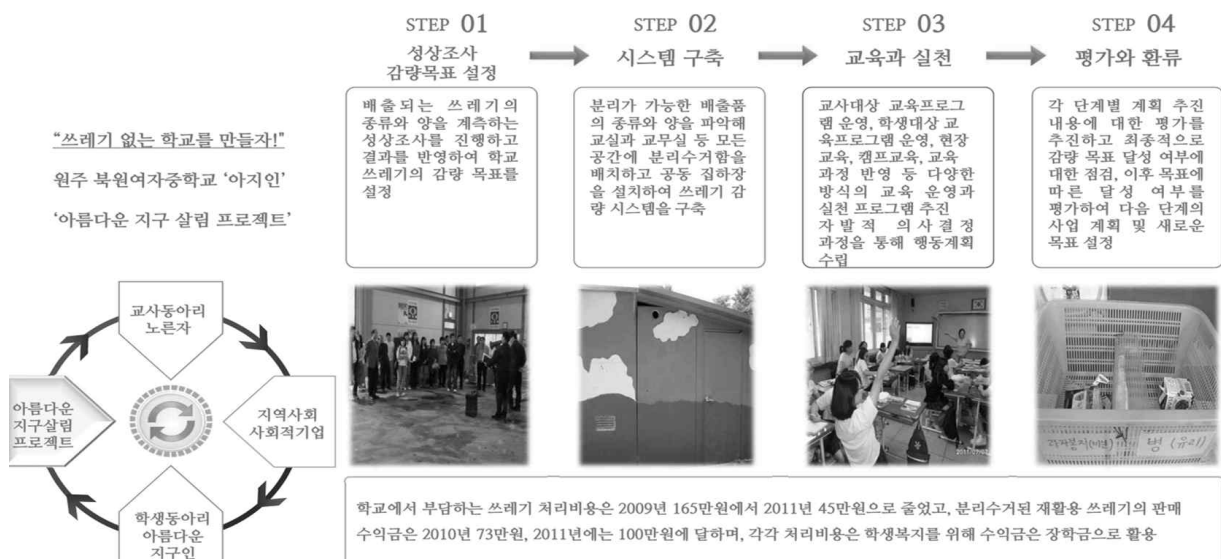
구 분	처리량(톤)		수거 및 처리업체	비 고
폐농약	2018	0	- 수집운반:중부신대한정유산업 - 처리:신대한정유산업	지역농협농자재판매소 (13개소)
	2019	2.9		
	2020	2.3		
	2021.6	1.4		
폐의약품	2018	1.8	- 수집운반:윤그린 - 처리:(주)이에스지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의료지원과)
	2019	2.1		
	2020	2.6		
	2021.6	1.1		
수은함유 (폐형광등, 폐건전지)	2018	97	- 수집운반:신원주환경('21~'23: 권역별 5개 수거업체) - 처리:(주)오토엑스포트(폐형광등) - 처리:(주)프리솔(폐건전지)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2019	74.1		
	2020	91		
	2021.6	48.6		

출처 : 원주시, 내부자료(2021)

- 원주시는 1996년 「폐기물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 신고포상금, 종량제봉투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원주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12년~2021년)을 수립 추진해왔으며,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시책 추진으로 발생의 최소화, 자원절약,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또한 ‘Zero-Waste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원주시민의 참여 확대 등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노력해왔음

-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해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립주택 단지의 클린하우스, 재활용 수거망 등을 보급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음
- 원주시는 ‘Zero-Waste 추진계획’ 수립으로 폐기물 감량화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양의 증가와 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으로 폐기물 원천감량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 쓰레기의 무단투기, 무단소각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필요

[그림] 원주 복원여자중학교 ‘아지인’ 사례



출처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2021년)

- 원주시 복원여자중학교 ‘아름다운 지구 살림 프로젝트’ 사례와 같이 쓰레기 분리배출-성상분석-배출량 계측 등을 통한 감축목표 설정을 하는 운동 모델이 필요함
- 인구증가와 다양한 쓰레기 발생과 양의 증가로 인해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여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방법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 증대의 필요
-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며,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 시민의식 개선,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주시의 폐기물 처리방식의 통합적 접근 필요

- 원주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으로 통합적 폐기물 원천 감량제도 강화 및 실천확산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시민에게만 감량과 재활용을 강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여 자원순환 운동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야 함. 특히, 지역 내 유통업체 등 사업체들의 참여와 실행이 매우 중요함
- 여기에 원주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민원인이 웃는 원주’를 강조하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음. 이 가운데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업’을 통해 폐기물의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단계에 걸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추진전략

- 중장기 폐기물배출량 감량 로드맵 작성
 - 기준년도 대비 원천 감량 목표 설정
-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기반구축 : 조례 제정,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자원순환 교육, 운동 확산
 - 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 관리 규제 강화
-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 폐기물 재활용 교육 및 자원순환체험 현장교육의 장 마련
 - (시정목표 반영)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 사업 실시
 - 업사이클링문화 확대 및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 추진계획

① 폐기물 원천 감량 제도 강화 및 실천 확산

○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5.1.1. 시행 예정) 근거

○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행정 등 이해관계자 참여
- 위원 모집 및 위원회 운영(공동학습회 실시, 자문회의 운영)

○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

- 전담 단속반 편성 운영
- CCTV(27대) 및 스마트 경고판(174대) 무단투기 연중 감시
- 신고자 포상금 지급으로 시민의 환경지킴이 유도
- 상습투기지역 주기적 야간단속 실시

○ 영농폐기물처리 지원(공동집하장 확충)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

② 자원순환교육장 운영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자원순환교육장 설치

-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플랫폼 역할 수행
-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 대한 홍보 및 재활용 제품 전시 실시
- 시민 현장 체험교육의 장 제공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

- 주민과 다양한 민·관 기관(단체) 대상 인식 개선 및 실천 도모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거점수거시설)

- 재활용동네마당(거점수거시설) 10개소 설치

○ 자원순환 문화 확대 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교육 연계 교육 실시

○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연계
(어르신 일자리, 청년 업사이클러 등 발굴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추진율	%	-	-	50% (준비)	100% (제정)	-	
민관산학 거버넌스 자문회의 개최수	횟수	-	2	4	4	4	
무단투기 단속 건수	건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수	개소	3	3	3	3	3	
자원순환교육장 설치 여부	여부	-	(준비)	(준비)	설치	(운영)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횟수	횟수	8	8	8	8	8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개소수	개소	10	5	5	5	5	
자원순환 교육실시 횟수	횟수	106	106	106	106	106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 건수	건수	5	3	3	3	3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	■	■	■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쓰레기무단투기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	■	■	■	■	■	■	■	■	■	■	■	■	■	■	■	■	■	■	■
자원순환교육장 설치									■	■	■	■	■	■	■	■	■	■	■	■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거점수거시설)									■	■	■	■	■	■	■	■	■	■	■	■
자원순환 문화 확대 교육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총예산액	422,144	302,400	304,400	304,400	304,400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정	국도비	-	-	-	-	-	비예산
	시비	-	-	-	-	-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국도비	-	-	-	-	-	
	시비	-	3,000	5,000	5,000	5,000	
쓰레기무단투기 관리 강화	국도비	-	-	-	-	-	
	시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영농폐기물처리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국도비	7,650	10,710	10,710	10,710	10,710	
	시비	7,350	10,290	10,290	10,290	10,290	
자원순환교육장 설치	국도비	-	25,000	25,000	25,000	25,000	
	시비	-	25,000	25,000	25,000	25,000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	국도비	-	-	-	-	-	
	시비	6,400	6,400	6,400	6,400	6,400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거점수거시설)	국도비	97,500	48,750	48,750	48,750	48,750	
	시비	102,500	26,250	26,250	26,250	26,250	
자원순환 문화 확대 교육	국도비	-	-	-	-	-	
	시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	국도비	15,000	12,500	12,500	12,500	12,500	
	시비	150,744	99,500	99,500	99,500	99,500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p>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협업부서: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환경정책위원, 에너지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참여, 자원순환 캠페인 공동기획 및 캠페인 참여 ▪ 쓰레기무단투기 환경지킴이 활동 참여 ▪ 자원순환교육장 체험교육 실시 ▪ 재활용동네마당 활성화 협력 ▪ 자원순환문화확대 교육 참여 ▪ 재활용상생모델 발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자원순환 관련 중간 지원조직 ▪ 지역내 자원순환, 농업, 에너지, 환경단체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 단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기업, 공공기관,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MOU체결 ▪ 재활용상생모델발굴 공동진행 등 ESG 경영 연계 ▪ 사업장 폐기물배출 원천감량으로 사회적책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유통관련 기업 ▪ 관내 공공기관 ▪ 공단협의체 ▪ 폐기물처리관련 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폐기물관리,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
- (사회) 지역사회 자원순환상생모델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 (환경)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 (거버넌스) 자원순환 실천 공동이행 및 민관산학 거버넌스 증진

<p>추진 부서</p>	<p>자원순환과장 이호석(☎3080) / 청소행정팀장 박윤아(☎3081) / 담당자 전은향(☎3084) 담당자 김은정(☎3083) / 폐기물관리팀장 김우수(☎3121) / 담당자 이승호(☎3124) / 자원재활용팀장 윤은주(☎3091) / 담당자 조성민(☎3095) 담당자 함소람(☎3094) 담당자 이가영(☎3096)</p>
-------------------------	---

U N 목 표	Goal 13. 기후변화 대응				
원 주 목 표	기후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목 표 지 표	자연재해 안전 인식 ※원주시 사회조사	2022	2025	2030	2040
		3.65	3.80	4.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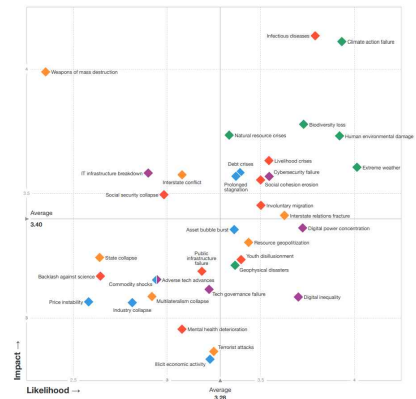
13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세계위험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 에 의하면 35개 위험요소 중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와 달리 사건 발생가능성 (likelihood, 확률)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기후위기(4.01점/5점)가 도출됨. 사고 시 발생하는 영향(damage impact, 비용) 측면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감염병 확산(4.13점/5점)이 꼽힘
- 보고서는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 기후 관련 문제가 인류에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함

2021 세계위험 순위

순위	위험 발생가능성	위험 영향도
1	극심한 기상이변	감염병 확산
2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후변화 대응 실패
3	인간활동의 환경피해	대량살상무기
4	감염병 확산	생물다양성 감소
5	생물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위기
6	디지털권력 집중	인간활동의 환경피해
7	디지털 불평등	고용 및 생계 위기
8	국가 간 관계 균열	극심한 기상이변
9	사이버보안 실패	부채 위기
10	고용 및 생계 위기	정보기술 인프라 붕괴



※ 경제적 위기 환경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 사회적 위기 기술적 위기 (출처: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 기후위기 비상사태는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능력이 기후위기 증가에 압도 당하는 상황임. 기후위기는 점진적이고 누적되며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위협으로 임계 수준을 넘게 되면 재난 결과는 파멸적임. 가뭄으로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가 물에 잠기면서 인류생존 근거가 무너져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됨

-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할 경우 위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초과하는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
-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30일 2030 NDC와 2050 LEDE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함.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1년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국내 순배출량 목표치를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를 최종안으로 확정, 정부에 제안함.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로 확정됨
- 2021년 공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불과 3년 만에 기존 전망(2030~2052년)보다 10년여 단축(2021~2040년)되었음을 발표함. 이는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대응할 시간은 그만큼 줄었다는 경고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가속화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 문제의 시급성을 시사함
- 본 보고서는 적응을 위한 행동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험평가·적응·적응대책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 등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
-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논의는 2001년 IPCC 제3차 보고서 이후 본격 시작되었고,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함
- 적응은 지역의 물리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영향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적응 조치로 인한 편익이 지역에 즉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적인 접근이 강조됨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자극과 기후 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을 포괄함
- UNDP(유엔개발계획) : 기후변화 현상에 수반된 결과를 완화, 대처하고 이용하는 전략을 강화, 개발, 실행하는 과정
- UNFCCC(기후변화협약) :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하는 모든 행동
- UKCIP(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 : 기후변화에 관련된 손해와 그 손해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파악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온 미래 기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

(출처: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

- 정부는 2020년 12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을 수립 발표함. 기후안심국가 구현을 목표로, 물관리·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산업 및 에너지 분야 등 6개 부문의 적응력을 높이고, 감시·예측 및 평가를 강화하며 사회 전 부문에 적응 주류화 구현 추진전략이 제시됨
 - 핵심전략 : 기후탄력성 제고, 취약계층 보호, 시민참여 활성화, 신기후체제 대응
 - 8대 분야 대표과제 : 홍수, 가뭄, 생물대발생, 산림재해, 식량안보, 감염병·질환, 취약계층, 거버넌스 + 41개 세부추진과제, 평가체계
 - 취약계층 과제 : 우선순위 단계별 지원, 야외노동자 보호 강화
 - 거버넌스 과제 : 전문가 중심 → 국민체감 전환(리빙랩, 국민평가단 등)
- 정부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2021.5.)으로 2022년도 시범 실시 후 2023년도 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를 본격 시행중임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감축효과 산정방법론, 예·결산서 항목과 작성방법 등을 설계하고 환경공단 안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과 평가 전달기구를 설치함
 - 유럽연합,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시 등에서도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다년도 재정계획에 기후위기 지출예산 비중을 지정
- 프랑스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유리 또는 불리로 구분하고 이를 예산서 부록으로 작성하는 녹색예산제 시행
- 노르웨이 오슬로는 기후예산제라는 정책 아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사업을 편성

- 강원도는 2017년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2017~2021)’ 을 수립, 건강·재난/재해·농업·산림/생태·해양/수산·물관리·생태계·적용산업/에너지 9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함
- 원주시는 2014년 ‘제1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2014~2018)’ 을 수립했고, 2019년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을 수립, 건강·재난/재해·농축산·산림/생태계·물관리 5개 부문 55개 세부사업 제시
 - 원주시 연평균기온은 2000년에 비해 2040년대에는 2.2도, 2090년대에는 5.4도 상승이 예측(2019)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기후위기로 예상되는

피해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의 문제는 바로 원주시의 도시회복력에 관한 문제로 귀결됨. IPCC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정하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 가운데 원주시는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와 촘촘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임⁸⁰⁾

- 지역사회 논의(원주-MGoS)⁸¹⁾ 과정에서 원주시 SDG 13은 원주가 어떻게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후문제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 만들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위기가 존재하지만 시민일상에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 충격에 대한 보호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또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모니터링체계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근무환경, 주거환경, 소득, 디지털, 젠더, 교육, 건강, 돌봄, 장애, 녹지접근성 등)의 심각성과 피해를 극명하게 드러내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재난재해구호, 긴급복지 지원, 건강관리, 사각 지대 발굴 등 기후재난 관리와 리질리언스(회복력 혹은 회복탄력성)의 필요성이 가속화됨
-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가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지만 기후위기 취약성은 개인·사회·집단·국가·세대마다 다르고 영향은 차별적임. 사회경제적,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집단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개인적·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특별히 취약한 인구집단으로서 특히 아동, 노인, 여성, 빈곤층, 장애인, 농어민, 좌초위기산업·야외·건설·청소·플랫폼 노동자, 쪽방촌·비닐 하우스 거주자, 의료기관 부족 지역의 주민, 만성질환자, 불투명한 미래로 기후우울증을 겪는 미래세대 등의 존엄과 생존을 위협함

80) 2021년 9월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기후변화 경제영향 분석을 게재, 기후변화 피해의 장기적 피해를 변수에 넣어 계산했을 때 2100년까지 세계GDP의 37%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추산 제시(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 최악의 경우 51%까지 격감할 수 있다고 밝힘

81) 2022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자문을 위한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을 의미. 원주시 주요 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 원주시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 및 고령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밀도가 높은 수준임.⁸²⁾ 관내 읍면동별 지역 간 온도 및 강수량 편차가 크며 치악산 등 지역 간 표고 및 경사도 편차도 큼. 또한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전문의료시설이 부족함
- 원주의 2021년 상반기 직업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기능·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의 63.3%를 차지함.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업무 종사자들이 많음

2021년 상반기 원주시 직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전체 취업자	1위 취업자	2위 취업자	3위 취업자	4위 취업자	5위 취업자	6위 취업자
1,713	서비스·판매 47.3	관리자, 전문가 34.3	사무 32.0	기능·기계 조작·조립 31.6	단순노무 24.7	농림어업 11.4

(출처: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직업별 취업자)

- 또한 원주시는 2001~2010년 강원도 18개 시군 중 기후환경(2.5)이 가장 취약하고 특히 폭염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⁸³⁾.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 열지수(28.2)와 폭염일수(6.0)가 가장 높아 취약성이 높게 나타남. 다만 전국평균의 취약성과 같은 2.5등급임

강원도 18개 시군의 기후환경 취약성평가 결과

지역	2001~2010 기후환경					2021~2030 기후환경					상승정도 기후환경
	열지수		폭염일수		종합	열지수		폭염일수		종합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춘천시	27.38	2	5.31	2	2	30.11	3	8.75	2	2.5	0.5
원주시	28.16	3	5.97	2	2.5	31.15	3	10.2	2	2.5	0.0
강릉시	22.81	1	0.77	1	1	24.77	1	14.49	2	1.5	0.5
동해시	23.37	1	1.47	2	1.5	25.53	1	13.69	2	1.5	0.0
태백시	22.61	1	0.81	1	1	24.25	1	7.04	1	1	0.0
속초시	23.09	1	0.43	1	1	24.93	1	11.46	2	1.5	0.5
삼척시	23.19	1	1.22	2	1.5	24.99	1	14.21	2	1.5	0.0
홍천군	25.96	2	3.1	2	2	28.41	2	8.41	2	2	0.0
횡성군	26.91	2	3.54	2	2	29.47	2	11.17	2	2	0.0
영월군	25.80	2	2.29	2	2	27.84	2	9.91	2	2	0.0
평창군	24.20	1	0.94	1	1	26.03	1	6.2	1	1	0.0
정선군	23.42	1	0.79	1	1	25.46	1	9.43	2	1.5	0.5
철원군	27.22	2	3.33	2	2	30.23	3	9.7	2	2.5	0.5
화천군	26.24	2	2.71	2	2	29.02	2	8.65	2	2	0.0
양구군	24.90	1	1.51	2	1.5	27.49	2	9.49	2	2	0.5
인제군	23.58	1	0.82	1	1	25.85	1	7.18	1	1	0.0
고성군	22.93	1	0.46	1	1	24.87	1	8.99	2	1.5	0.5
양양군	23.00	1	0.5	1	1	24.71	1	10.18	2	1.5	0.5
전국 평균	28.58	-	8.73	-	-	31.35	-	18.34	-	-	-
표준편차	2.37	-	5.09	-	-	2.70	-	7.34	-	-	-

(근거: 기상청 열지수-폭염일수 분석·전망. 출처: 강원도 고온 취약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안, 2018)

82) 근거: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83) 강원도 18개 시군 2001~2010년 기후환경지표 분석 결과(강원도 고온 취약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안, KRIC, 2018)

- 2018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기상청)에서도 원주는 내륙 지역에서 주간에 최고기온이 상승하는 기후특성이 반영돼 연간 폭염일수가 10일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원주시 기후변화 및 취약성 평가 결과, 건강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생태계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⁸⁴⁾
- 원주시 기후변화 인식조사 결과 및 취약성 평가 결과, 98.63%가 기후변화를 알고 있고,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7.21%로 파악됨

원주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 (2019)

※리스크=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정도(10점만점)*발생규모(10점만점)

분야	항목	영향	점수		총점
			발생규모	영향정도	
건강	홍수에 의한 건강	수인성전염병, 신증후군출혈	3	6	18
	태풍에 의한 건강	수인성전염병, 신증후군출혈	9	9	81
	폭염에 의한 건강	심혈관질환, 온열질환, 식중독, 열사병/일사병	8	9	72
	한파에 의한 건강	저체온증,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8	8	64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환자, 호흡기질환	8	9	72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호흡기질환	7	8	56
	수인성 매개질환에 의한 건강	감염병 발병자수, 비브리오패혈증 발병자수	5	6	30
	곤충설치류에 의한 전염병 건강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 기초생활수급자	7	7	49
농축산	가축생산성	가축전염병, 가축폐사 등	7	9	63
	농경지 토양침식	농경지 상승 침수, 농작물 피해 등	3	3	9
	벼 생산성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 자연재해 피해 등	4	4	16
	사과 생산성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 자연재해 피해 등	8	8	64
	재배사육시설 붕괴	태풍, 강우 등으로 인한 시설붕괴 등	8	9	72
재난재해	홍수에 의한 기반시설	전기공급, 유류저장, 송유설비, 저지대 면적	7	9	63
	폭염에 의한 기반시설	무더위 쉼터	8	8	64
	폭설에 의한 기반시설	교통, 주택수, 제설장비 보유	8	8	64
물관리	치수의 취약성	제반면적, 홍수피해면적, 저수지 저수량	5	7	35
	이수의 취약성	용수사용량, 상수도보급률, 하수처리수, 물재이용량	6	7	42
	수질 및 수생태	하천면적	5	5	25
산림 생태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산림피해면적, 임목축적량	5	5	25
	산불의 취약성	토양수분, 활엽수림, 침엽수림, 산림방재면적	7	9	63
	병해충의 취약성	산림공무원수, 병해충 방제 고용인력	7	7	49
	산림생산성	천연림 보육면적, 산림방재면적	2	3	6
	곤충의 취약성	벌사육 농가수, 병해충 방제기시	3	4	12
	국립공원의 취약성	식물, 동물 멸종위기종, 국립공원내 동물, 식물종	4	2	8
	침엽수의 취약성	침엽수 조림면적, 임목벌채 생산량	3	5	15

출처: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84) 근거: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 원주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강조하며 치안·범죄 예방, 생활안전, 도시재생에 따른 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주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와 붕괴, 산불, 온열질환 발생 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정책도 중장기 관점으로 고려하고 있음
-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는 농촌과 도시지역 격차를 보이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영향이 큼.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함
 - 무엇보다 기수립된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대응방안의 효과적인 활용·추진이 제고되어야 함
- 원주는 우선 개인적·지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 정립이 필요함.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보호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도시 원주, 기후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원주, 기후위기 적응 회복도시 원주를 실현해 나가야 함
 - 취약계층과는 엄밀히 다르나 교집합이 많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복합결정 요인으로 분류가 필요하며, 이에 기반해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함. 민관산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범주를 정립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현황 및 당사자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원주시는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생태계를 우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열지도, 침수위험등급, 기후위기위험등급 등을 기반으로 한 기후재난 안전지도를 마련해 기후재난에 노출되는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상황에 대한 인프라 중심 접근을 환경적 접근과 공동체 회복 접근과 통합·연계가 필요함. 도시정책, 보건정책, 주택정책과도 연동되어야 하는데, 특히 도시계획 수립 시 주택, 공원, 흡수원 등 기후회복력을 주요 이슈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를 작동해야 함

-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응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해외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날씨와 생물계절을 기록하고 재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기후위기 관련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원주시는 시 정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원주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수 있음
 -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의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이를 고려한 최종사업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자원순환경제, 오염물질과 위험관리,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목표에 기여하거나 위해를 주지 않도록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 추진함

□ 추진전략

- 기후영향예산제 도입을 통한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환경 및 기후영향 검토 의무화를 통한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 통합성 및 예산 일관성 검토
-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과 연계
 - 거버넌스를 통해 부문 조정 또는 세부목표 조정
 - 부문별 기후위기 피해조사 및 기후취약성 리스크 평가
 -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운영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민관산학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 원주시민 체감형 대표과제 선정 및 점검
 -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① 기후영향예산제 도입 [기후에너지과]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반영(환경부 가이드라인 기반)
- 원주시민 체감형 과제 선정 및 점검·평가
 - 시민숙의를 통한 원주시민 체감형 대표과제 선정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거버넌스 기반 대표과제 검토

②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안전총괄과]

-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또는 개편)
 - 정부 기후위기 관련 매뉴얼 전면 개편 방침과 연계 추진
-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운영
 - 기후재난 안전망에 관한 이해관계자 회의 운영
-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
 - 고립, 붕괴 등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행정안전부 협의 기반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여부	도입	준비	준비	도입	도입	도입	
원주시민 체감형 과제 수 및 점검·평가 여부	여부	과제 수: 1 점검평가 여부: 0	과제 수: 1 점검평가 여부: 0	과제 수: 1 점검평가 여부: 0	과제 수: 1 점검평가 여부: 0	과제 수: 1 점검평가 여부: 0	
기후위기대응 매뉴얼 마련(또는 개편) 여부	횟수	-	1	1	1	1	
재해위험지구 정비 연도별 추진율	%	10	20	30	10	30	국도비 확보후 추진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운영 횟수	횟수	1	2	2	2	2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원주시민 체감형 과제 선정 및 점검·평가																					
기후위기대응 매뉴얼 마련(또는 개편)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운영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추진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장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광터회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석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060,000	45,760,000	44,960,000	2,960,00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원주시민 체감형 과제 선정 및 점검·평가	국도비	-	-	-	-	-	
	시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기후위기대응 매뉴얼 마련(또는 개편)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운영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추진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500,000	500,000	-	-	-		
		시비	500,000	500,000	-	-	-		
	무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	2,000,000	2,000,000	-	-	-	
		-	-	2,000,000	2,000,000	-	-	-	
	우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	20,000,000	20,000,000	-	-	-	
		-	-	20,000,000	20,000,000	-	-	-	
	장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	350,000	350,000	-	-	-	
		-	-	350,000	350,000	-	-	-	
	광터회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	-	100,000	100,000	-	-	
		-	-	-	100,000	100,000	-	-	
	외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	-	-	750,000	750,000	-	
		-	-	-	-	750,000	750,000	-	
	석지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	-	600,000	600,000	-	
		-	-	-	-	600,000	600,000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기후에너지과, 안전총괄과 협업부서: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원회: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 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민형 체감 대표과제 선정 거버넌스 참여 ▪ 기후위기 적응 위한 시민과학 활용 프로그램 주도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거버넌스 참여 ▪ 시민사회단체 ▪ 중간지원조직 ▪ 마을공동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관련 훈련 참여 ▪ 기후위기 적응 추진 위한 후원 및 투자유치 ▪ 기업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참여 ▪ 기후위기 적응 연구단체 및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공공기관협의회

□ 기대효과

- (경제)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으로 사회경제적 지지망 구축
- (사회) 기후불평등 해소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환경) 기후영향예산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기후위기 적응 기여, 기후탄력성 제고
- (거버넌스) 민관산학 숙의공론 통한 사회 전반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부서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737-3170) / 기후정책팀장 박성명(☎3171) / 담당자 박성명(☎3171) 담당자 유지안(☎3174)
	안전총괄과장 박노영(☎737-3660) / 자연재난팀장 박상중(☎3261) / 담당자 김유란(☎3262) / 담당자 전배진(☎3264) / 상황관리팀장 홍현기(☎3262) / 담당자 김상미(☎3682)

U N 목 표	Goal 14. 해양생태계				
원 주 목 표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목 표 지 표	소하천 수질 (BOD 평균 등급)	2020	2025	2030	2040
		중음하천 (11개 평균)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14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물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여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하천에 대한 사회·문화·환경적 여건 변화로 이·치수 위주의 하천관리(개발) 사업이 생태환경적 기능(가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치수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하천사업은 목적(수환경 보전 및 복원, 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에 따라 세부 내용은 상이할 수는 있으나, 하천사업으로 인해 하천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생태적 기능은 훼손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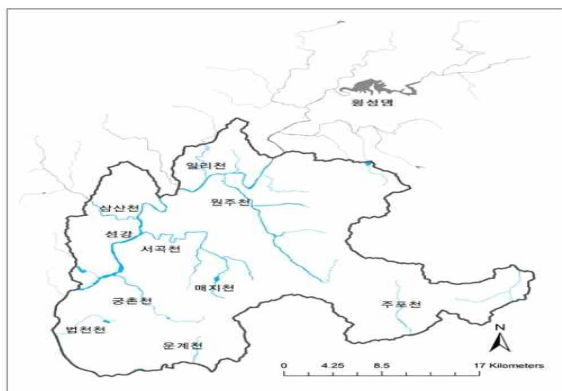
- 이에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하천의 자연성 복원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방안이 필요함

- UN의 SDGs 14번은 해양생태계이며, K-SDGs 14번은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2021년 7월부터 진행된 ‘원주시민숙의위원회(원주-MGoS)’⁸⁵⁾에서는 내륙 지역인 특성을 반영하여 원주시 14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방향성은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 하기로 함. 아울러 하천은 해양생태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음. 이에 원주시민숙의위원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원주시 14번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로 설정함
- 원주시에는 국가하천 3개(섬강, 한강, 원주천)와 서곡천, 삼산천 등 19개의 지방2급하천이 있으며, 소하천은 184개가 있음

원주시 하천 현황(2021년 1월 기준)

구분	개소수	하천연장(km)	개수율(%)
국가하천	3개소	87.28	93.4
지방2급하천	19개소	166.31	85
소하천	184개소	309.99	52.9

출처 : 원주시, 원주시홈페이지



[그림] 원주시 하천 현황

출처: 강원연구원(2020)



[그림] 원주시 수질측정망 지점

8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을 의미. 원주시 주요 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 원주시 관내 호소는 농업용 저수지 100개소 위치해 있으며, 원주시 관할 84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16개소임
-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11,084km³으로 강원도내 총 저수량의 22.6%를 차지함
- 원주시에는 수질측정망 지점 37개소가 있으며, 일반측정망 지점과 수질총량측정망 지점으로 구분됨
- 수질총량측정망 지점은 원주(한강D), 섬강4-1(섬강B)지점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충청북도의 경계지점임

○ 원주시 주요 하천 11개 측정소 수질현황(2021년 10월 기준)을 살펴본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등급은 원주천2를 제외하고 ‘매우좋음’ 혹은 ‘좋음’ 등급임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g/L) 등급은 섬강3, 섬강4는 ‘약간좋음’ 등급, 원주천2 ‘보통’ 등급이며, 그 외는 ‘좋음’ 등급임
- 총유기탄소량 TOC(mg/L)에서는 섬강2, 섬강3, 원주천1 ‘약간좋음’ 등급이며, 원주천2는 ‘나쁨’ 등급이고, 그 외는 ‘매우좋음’ 등급임.
- 총인 T-P(mg/L)등급은 섬강3, 섬강4, 섬강4-1, 운계천은 ‘약간좋음’ 등급이며, 원주천2는 ‘보통’ 이며, 나머지는 ‘좋음’ 등급임

원주시 수질현황(2021년 10월 기준)

측정소명	수온 (°C)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등급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등급	총유기탄소량 TOC (mg/L)	등급	총인 T-P (mg/L)	등급
삼산천	15.5	1	매우 a 좋음	3.1	b 좋음	1.5	매우 a 좋음	0.036	b 좋음
서곡천	16.3	1.3	b 좋음	3.2	b 좋음	3.1	약간 b 좋음	0.036	b 좋음
섬강2	16	0.9	매우 a 좋음	3.6	b 좋음	2.1	b 좋음	0.039	b 좋음
섬강3	16	1.8	b 좋음	4.3	약간 b 좋음	3.7	약간 b 좋음	0.045	약간 b 좋음
섬강4	16.8	1.8	b 좋음	4.3	약간 b 좋음	4	약간 b 좋음	0.044	약간 b 좋음
섬강4-1	16.3	1.3	b 좋음	4.6	약간 b 좋음	2.7	b 좋음	0.064	약간 b 좋음

운계천	14.3	0.8	Ia 매우 중음	3.5	Ib 중음	2.2	Ib 중음	0.042	II 약간 중음
원심천	14.8	0.8	Ia 매우 중음	2.6	Ib 중음	1.3	Ia 매우 중음	0.027	Ib 중음
원주	12.5	0.9	Ia 매우 중음	3.3	Ib 중음	1.9	Ia 매우 중음	0.033	Ib 중음
원주천1	14.3	1.3	Ib 중음	3.2	Ib 중음	3.1	II 약간 중음	0.029	Ib 중음
원주천2	16.5	4.1	III 보통	6.3	III 보통	5.5	IV 약간 나쁨	0.116	III 보통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재가공)

- 원주시 하천에는 각시붕어, 갈겨니, 꺾지, 납자루, 돌고기, 독중개, 메기, 모래무지, 묵납자루, 미꾸라지, 벼들치, 붕어, 쉬리, 얼룩동사리, 중개, 참마자, 피라미 등 담수어류가 서식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곤충류, 파충류 등이 하천 일대에 서식하고 있음

[포유류] 호저면섬강일대(두더지, 너구리), 원주교원주천일대(등줄쥐, 생쥐, 시궁쥐)
[조류] 호저면섬강일대(검은댕기해오라기,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힘빡검 등오리, 멧비둘기, 참새, 까치), 우산동원주천일대(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양비둘기, 할미새사촌, 참새, 까치), 봉평교원주천일대(검은댕기해오라기, 중대백로, 왜가리, 양비둘기,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양서류] 호저면섬강일대(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움개구리), 봉평교원주천일대(무당개구리, 움개구리), 원주교원주천일대 양서류 목록 : 청개구리, 움개구리
[곤충류] 호저면섬강일대(왕잠자리, 된장잠자리, 깃동잠자리, 방아깨비, 벼메뚜기, 말매미충, 끝검은말매미충, 무당벌레, 호랑나비, 대만흰나비, 배추흰나비, 네발나비), 봉평교원주천일대(왕잠자리, 밀잠자리, 등검은메뚜기, 대만흰나비, 네발나비), 원주교원주천일대(검은물잠자리, 왕잠자리, 깃동잠자리, 벼메뚜기, 털두꺼비하늘소, 양봉꿀벌, 호랑나비, 대만흰나비, 노랑나비, 네발나비)
[파충류] 호저면섬강일대(무자치, 누룩뱀, 유혈목이, 살모사), 봉평교원주천일대(붉은귀거북)

- 2015년과 2020년에는 원주천과 서곡천 상류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포착됨.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깨끗하고 수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으로 수달의 서식지가 잘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함



▲ 2020년 원주서곡천 상류(흥업면 매지천) 성인 수달 한 쌍 모습
출처 : 강원도민일보

▲ 2015년 원주천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수달
출처 : 원주투데이

○ 원주시 하천·소하천 정비종합 및 기본계획과 원주시지방하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하천사업으로 인해 하천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생태적 기능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 복원을 유도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물순환 거버넌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이 필요함

하천·소하천 정비종합 및 기본계획

천별	하천명	하천연장 (km)	기본계획	
			수립연장 (km)	하폭(m)
소 계	21개소	324.46	206.59	
국가 하천	2개소	58.92	54.22	
	한강	10.82	10.82	450~755
	섬강	48.1	43.4	160~405
지방 하천	19개소	265.54	152.37	
	황둔천	12.04	9.5	25~50
	원주천	28.5	22.7	45~120
	흥양천	10.91	8.5	33~75
	법천천	12.22	7.5	30~50
	궁춘천	16.85	13.1	30~50
	서곡천	26.2	19.6	60~210
	대안천	9.1	5	25~50
	매지천	10.99	7.6	40~65
	삼산천	22.09	7.3	50~100
	일리천	23.3	8.7	30~70
	옥산천	10.02	4.68	30~50
	장양천	9.92	7.7	20~40
	하수남천	13.47	8.4	25~40

	주포천	14.5	10.2	30~70
	화 천	7.23	5.5	20~40
	오미천	6.7	1.7	20~30
	원심천	12.7	4.69	20~30
	운계천	16	16	
	신촌천	2.8	2.8	
소 계	198개소	339.99	171.17	
소하천	198개소	339.99	334.16	10~30

출처 : 원주시, 원주시 홈페이지(2021년)

- 소하천은 대부분 수계의 발원지로서 수질과 수량 확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 소하천의 수생태계는 큰 하류 하천 생태계의 종 다양성, 개체의 풍부성, 기능 및 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소하천은 하류 하천의 서식지에 유량, 영양염류, 먹이 등 생태적 활동을 제공하고 종 다양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서동물에 상위포식자로부터 도피처나 번식처를 확보해 주어 하천의 건강성과 수 생태계적 평형성 (equilibrium)을 유지해 감
 - 또한 소하천은 상류 지역에서 이동되는 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이 통로의 단절은 유역 전체 또는 지역적인 생태계 훼손 및 단절을 유발할 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훼손은 도시화나 농업개발 등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오염부하량의 결과이므로 소하천으로 시작되는 오염원 유출 관리방안은 하류하천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함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 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비점오염원관리’ , ‘수질기준 ’ 좋음 (Ib)’의 유지 및 관리’ ,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한 철저한 수질 관리’ 등이 필요함
- 문막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섬강이 흐르는 지역임. 따라서, 공업단지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관리강화’ 및 ‘비점오염물질 억제시설 설치’ 등의 추진이 필요함
- 도심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하천을 여가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관리’ 및 ‘자연친화형 하천 복원’ 등의 추진이 필요함
- 치악산국립공원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운영’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더욱 보전하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 원주 내 하천을 둘러싼 자연성, 장소성을 비롯하여 강 문화를 보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방안 마련
 - 하천의 생태환경적 기능(가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생태하천 복원으로 도심 옛물길 살리기
-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통합물관리 조례, 거버넌스 구축, 소하천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방안 마련
-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복원
 - 생태하천 조성,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비점오염 저감
- 원주천 르네상스를 통한 시민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기반마련
 - 시민 여가 공간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

□ 이행(추진)계획

① 원주천 친수 환경 조성 [생태하천과]

- 원주천 르네상스 추진
 - 원주천 일원 시민 여가활동 증진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생태하천 조성 방안 마련 [환경과]

-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주요 하천(섬강, 남한강 등 5개)의 목표수질(BOD, T-P) 달성
 -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 개발사업 검토 협의 및 개발부하량 할당
 -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관리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 확인
-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초기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질 저감
 - 저류시설 공사

③ 하천 거버넌스 구축 [생태하천과]

○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통합물관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 포함

○ 하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통합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 하천 유역관리를 위한 소하천 거버넌스 구축

○ 생태하천 시민모니터링

- 수질, 수생태, 수생동식물 등 모니터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원주천 르네상스 추진율	추진율	20	40	60	80	100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개발부하량 범위 내 할당률)	할당률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공정률	%	67	100	-	-	-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여부	여부	준비	착수	완료	-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률	여부 / %	준비	착수	완료	30	50	
통합물관리 위원회 운영 횟수	횟수	준비	준비	2	2	2	
소하천 거버넌스 운영 횟수	횟수	준비	준비	2	2	2	
생태하천 시민모니터링 횟수	횟수	1	1	1	1	1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원주천 르네상스 추진		■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하천 거 버년스 구축	통합물관리 위원회 운영	■																			
	하천 거버년스 구축 및 운영	■																			
	생태하천 시민모니터링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6,742,000	5,508,250	4,502,000	42,000	42,000	
원주천르네상스 추진	국도비		-	-	-	-	-	
	시비		3,080,000	4,460,000	4,460,000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도비		3,052,000	776,625	-	-	-	
	시비		588,000	149,625	-	-	-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국도비		-	-	-	-	비예산
		시비		-	-	-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도비		-	-	-	-	
		시비		-	100,000	-	-	
하천 거 버년스 구축	통합물관리 위원회 운영	국도비		-	-	-	-	
		시비		-	-	10,000	10,000	10,000
	하천 거버년스 구축 및 운영	국도비		-	-	-	-	
		시비		-	-	10,000	10,000	10,000
	생태하천 시민모니터링	국도비		-	-	-	-	
		시비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환경과, 생태하천과 협업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기후에너지과, 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순환 도시 거버넌스 참여 생태하천 시민 모니터링 참여 소하천살리기운동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약, 수자원확보, 오염방지 등 환경 분야 ESG경영 추진 기술 협력 환경보호 및 수자원확보, 하천 살리기 등 생태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수생태, 소하천살리기, 기후변화 관련 중간지원조직 지역내 농업, 에너지, 환경단체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 단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공공기관 공단협의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물순환 건전성 제고를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 시민여가활동 증진 및 휴식공간 마련
- (사회) 강문화, 소하천 문화를 누리는 마을공동체 형성 기여
- (환경) 수변생태계 보존,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예방
- (거버넌스) 물순환 거버넌스 활성화로 파트너십 강화

추진 부서	환경과장 이정용(☎737-3030) / 유역관리팀장 김근식(☎3061) / 담당자 최성민(☎3063)
	생태하천과장 원민철(☎737-2520) / 하천정책팀장 강민수(☎2521) 수질보전팀장 이규자(☎2525) / 담당자 손건희(☎2528) 하천시설팀장 김경태(☎3241) / 담당자 조형준(☎3243) 하천관리팀장 심상혁(☎3251) / 담당자 김형래(☎3252)

U N 목 표	Goal 15. 육상생태계				
원 주 목 표	인간과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생태도시 원주를 만든다				
목 표 지 표	원주 도심 연결녹지	2021	2025	2030	2040
		1개	10개	20개	40개

15 도시숲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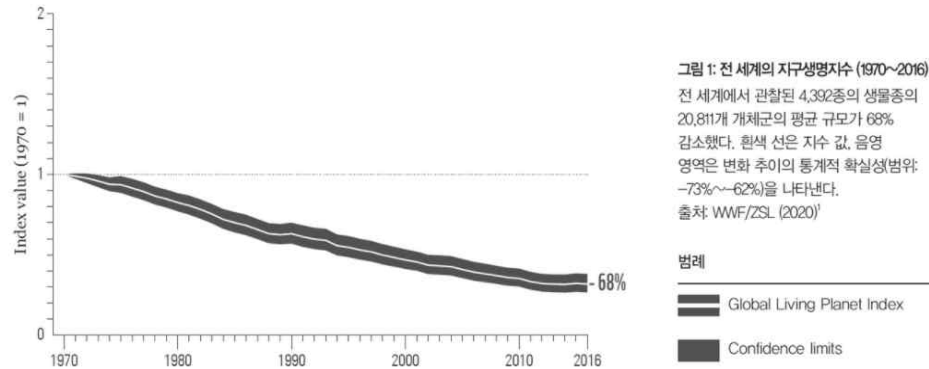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는 거주민들에게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를 제공해 왔음
 -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받는 편익’이라 정의하며 크게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함⁸⁶⁾. 새천년 생태계 평가(ME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는 생태계 서비스가 인간의 웰빙, 행복,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등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자 편익을 제공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자원임을 강조함
-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는 크게 성장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이 요구되어옴
-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유엔(UN)은 육상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으로 채택하며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인류가 맞이할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라고 경고함
 - 전 지구적으로 육지 면적의 51%는 도시, 마을, 농지 등 고강도 이용 지역이고 30%는 숲이나 건조지역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문명화된 지역이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야생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은 전체 육지 면적의 19%에 불과함(미국 국립과학원, 2017)
 - 지구생명보고서(2020)는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 규모의 평균이 지난 50년 동안(1970~2016) 68% 감소했으며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86) 식량·물·자원 등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온실가스·대기질·수질·홍수 등을 저감해 주는 **조절서비스**, 생태 관광·여가·경관미를 포함하는 **문화서비스**, 마지막으로 위 3가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의 물질순환·일차생산·서식지 등의 **지지서비스**가 있음

추세를 반전시킬 방안으로 회복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며 자연보존 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를 주문함

전 세계의 지구생명지수(1970~2016)



출처 : 지구생명보고서(2020)

- 영장류 3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있으며(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17년), 2200년쯤 되면 양서류의 41%, 조류의 13%, 포유류의 25%가 멸종하며 사람을 포함한 지구 생물의 75%가 사라지는 ‘6번째 대멸종’ 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네이처, 2015)
-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 중에서도 특히 도시지역은 중요한 이슈임. 전 세계 인구 대다수가 도시 권역에 거주하며 과도한 개발과 인구 밀집으로 녹지 감소, 동식물 서식지 훼손 및 침범 등으로 생태계 훼손 및 생물 다양성 문제가 심화함.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침
 - 야생동물들의 생활 공간이 인간 거주영역과 최소 33%에서 많게는 50%까지 겹치며, 벌목, 개간 등으로 점점 생존영역이 좁아져 개체 수가 줄어들음(사이언스, 2018)
 - 우리나라는 전국 국토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이고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약 92%) 도시화율이 높음(2021)
 -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주거단지, 도로, 철도, 공장 등의 무분별한 개발과 외연적 확산이 심화함.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 등의 생태적 기능을 하는 녹지가 지속하여 감소하며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음
- 국내에서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간과 다양한 생물 종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 중 제도개선으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함

- 서울, 성남, 광양, 고양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친화적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듦
-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은 온라인 플랫폼 로드킬 정보시스템 ‘굿로드’를 통해 로드킬 관련 데이터를 등록·관리함. 2019년 등록된 자료(2만 1397건)를 바탕으로 전국 로드킬 다발 구간(국도 50개 구간)을 선정하였고, 실제 현장 방문으로 지점별 구체적인 로드킬 저감 방안을 수립함
- 원주시는 육상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강원도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한 원주시 환경보전 계획(2012-2021)으로 원주시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인간과 생물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축 복원 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음
 -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는 도시지역 생태 현황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지도 보완,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기능 활성화, 도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녹화사업을 계획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함
 - 2010년 원주시민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2.2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6.58㎡로 3배 정도 증가하였고, 2023년 목표를 15㎡로 설정하며 명품 공원도시 정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음
 -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개운, 우산, 건등, 문막, 귀래운계공원 등을 도시공원 해제 대신 보전녹지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함
 - 2022.12.기준 도시공원 조성 및 조성추진 면적은 2,950천㎡이며, 현재 중앙공원 2 구역, 마장공원, 단구공원 조성 중에 있고 추후 반곡근린공원, 반곡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있음

원주시 공원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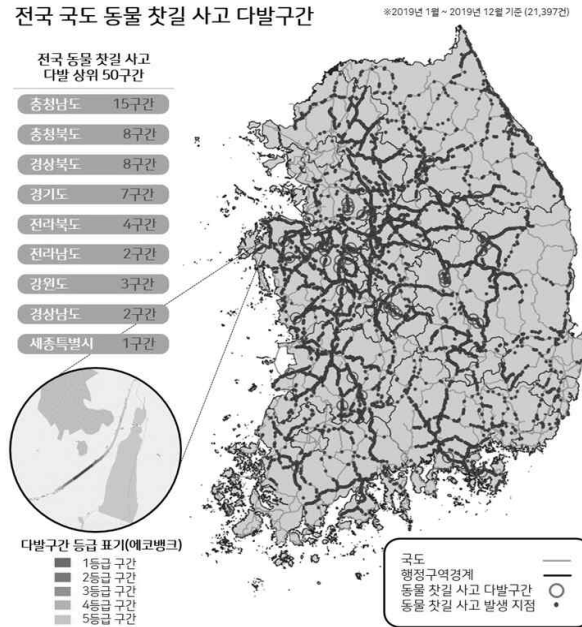
구분	공 원 결 정 현 황 (천㎡)															
	합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지정	201	5,694	50	4,890	84	200	42	75	17	204	4	279	2	35	2	8
조성	166	2,950	39	2,265	70	162	37	62	14	145	4	279	1	30	1	4

출처 : 원주시청(2022)

- 전국 국도 동물 찾길 사고 다발구간(2019)에 원주시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5~2019년 기간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이 1,364건으로

지역별 고속도로 중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함(한국도로공사, 2019)

전국 국도 동물 찾길 사고 다발구간(2019년 1~12월)



출처 : 국립생태원(2020)

-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네이처링, 2021)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8,287건, 2021년 7,570건의 충돌 사례가 관찰되었으며, 이 중 약 80%가 인공시설, 약 15%가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관찰한 사례 이외의 충돌을 포함하면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임. 원주시에서도 주로 도심지역인 단계동, 무실동, 반곡동, 행구동에 있는 도로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됨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원주시)



출처 : 네이처링(2021)

- 최근 개최한 원주시 지역사회전문가 공론장(원주시민속의위원회, 2021.9.)에서도 인간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내 생태성 복원, 녹지면적의 유지와 확대, 원주 도심의 도시숲화가 결국에는 원주 시민의 삶도 이롭게 할 것이라는 공동 의견 및 우선순위를 정함
- 원주시가 도시의 육상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원주시는 지속하여 도시가 확장하고 있어 생태계 훼손과 단절이 우려됨.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생물 자연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태축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등을 돕는 녹지 면적을 확장할 수 있음
 - 도시개발 과정에서 녹지면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심의기구를 강화하고 시민주도형 도시숲(도시녹화) 조성으로 담론 형성 필요.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등)를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하거나(민간위원 주관으로 개편 등) 별도의 위원회 설립을 통하여 실효성 담보 필요
 - 원주시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지도 구축 완료 후, 해당 지도를 바탕으로 동물종과 식생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 조사를 주기마다 업데이트하여 원주시 도시계획, 경관계획, 환경계획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시설녹지현황의 연결녹지를 보면 녹지와 녹지 간 연결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연결녹지 조성이 필요하며, 도시화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확대 방안 필요

원주시 시설녹지현황

종류	녹지수(개)	면적(m ²)
완충녹지	129	921,584
경관녹지	68	1,641,776
연결녹지	1	3,463
합계	198	2,566,823

출처 : 원주시 통계연보(2022)

- 다양한 생물종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이 안심하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이러한 과정 전반에 관련 기관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도시 원주 담론 형성과 실질적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대안 도출
- 추후 이행계획 지표에 ‘가로수에 새가 날아드는 횟수, 공원에 포유류 및 조류 출현 빈도 등’의 다양한 생물종 중심의 지표 필요

□ 추진전략

- 현황조사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 면밀한 현황조사를 도심 생태축 복원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 거버넌스를 통해 생태축 복원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 민.관.산.학.연 거버넌스 운영 및 논의로 생태축 복원 담론 형성
- 시민참여로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 도출
 - 공론장 및 시민주도 프로그램(리빙랩, 아이디어톤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 도출
- 제도 강화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 강화 지원
 - 도시개발의 녹지면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심의기구 강화, 시민주도형 도시숲 조성 등)

□ 이행(추진)계획

- ① 시민참여형 도심 녹지공간 확대 [공원녹지과]
 - 도심 녹지공간 현황조사
 - 공원녹지, 산지, 하천, 공터 등 면밀한 현황조사
 - 도심 녹지공간 조성확대
 - 시민주도형 도시녹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이후 행정의 주도적 추진
 - 도심 녹지공간 보호 제도 강화
 -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②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 [환경과]
 - 포유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 관계기관 거버넌스 구축
 - 굿로드 어플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실태 조사
 - 원주 동물사고 다발구간 선정
 - 로드킬 및 조류충돌 감소를 위한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구축
 - 로드킬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수립
 -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아이디어톤 및 리빙랩 등을 통한 실사구시 대책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도심 녹지공간 현황조사 실시	여부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시민 1인당 공원 면적	m ²	15	16	17	18	19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횟수	횟수	4	4	4	4	4	
포유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여부	여부	-	조사	-	-	-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완료 후 실태별 맞춤형 방지대책 수립
로드킬 및 조류충돌 감소를 위한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수	개	-	준비	4	-	-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	개	-	준비	4	-	-	

□ 연차별 추진계획 (2027년까지 사업별 추진일정 반영)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도심 녹지공간 현황 조사				■				■				■				■				■				
도심 녹지공간 조성확대	■																							
도심 녹지공간 보호 제도 강화	■																							
포유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	■	■	■	■																
로드킬 및 조류충돌 감소를 위한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구축									■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340,980	10,020,000	15,100,000	35,000	0	
도심 녹지공간 현황 조사	국도비	-	-	-	-	-	-	비예산
	시비	-	-	-	-	-	-	
도심 녹지공간 조성확대	국도비	15,000	-	-	-	-	-	
	시비	1,325,980	10,000,000	15,000,000	-	-	-	
도심 녹지공간 보호 제도 강화	국도비	-	-	-	-	-	-	비예산
	시비	-	-	-	-	-	-	
포유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및 조류충돌 조사	국도비	-	-	-	-	-	-	
	시비	-	20,000	-	-	-	-	
로드킬 및 조류충돌 감소를 위한 실태별 맞춤형 방지 대책 구축	국도비	-	-	-	-	-	-	
	시비	-	-	50,000	10,000	-	-	
야생동물 이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	-	-	-	-	-	
	시비	-	-	50,000	25,000	-	-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공원녹지과, 환경과 협업부서: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생태계 거버넌스 참여 현황조사 및 시민참여 리빙랩 등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시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환경 분야 ESG 경영 추진 기업 개발자 연계를 통한 원주형 현황조사(자투리 녹지 및 로드킬)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동물단체,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공공기관 및 대학 관내 공단협의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기대효과

- (경제) 중앙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자연환경복원업 일자리 창출
- (사회) 인간과 생물종 간 공존 필요성 인식 및 세계시민역량 강화
- (환경) 도심 녹지환경 개선 및 생물종 보전
- (거버넌스) 지역사회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 부서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737-3620) / 공원정책팀장 김영언(☎3641) 도시숲팀장 박경선(☎3641) / 담당자 홍예린(☎3646)
	환경과장 이정용(☎737-3030) / 자연환경팀장 하경옥(☎3037) / 담당자 이재근(☎3037)

U N 목 표	Goal 16. 제도·인권·평화				
원 주 목 표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목 표 지 표	시정관심도(‘관심있음’ 비율)	2021	2025	2030	2040
		28.8%	35%	50%	75%

16 시정 참여 거버넌스 혁신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사람 중심’ 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역시 주민참여 확대에 더욱 초점이 맞춰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나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중 상당 수가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권 및 (절차적)정의, 자치 관점이 기반에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발견과 해법 모색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첨단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의 필요성도 점차 커짐
- 정부는 국정과제(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활성화와 지방행정·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핵심 전략인 ‘주민주권 구현’ 을 위해 7개 주요 과제를 제시함 (①주민참여권 보장 ②숙의기반 주민참여방식 도입 ③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조례 제.개정 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⁸⁷⁾

- 또한 주민참여 강화, 자치분권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음⁸⁸⁾. 법 개정 방향은 ①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②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③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지자체 사무수행 능력성 향상임
-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학행정을 구현하는 정책도 추진 중임(국정과제 8「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 정부혁신 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정부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24’,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서비스 등이 대표적임. 이와 함께 2017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은 6대 핵심 가치(공정/투명/유연/신뢰/창의/포용)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제시함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4대 목표	중점 추진과제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Wonderful Mind-Caring Gov.	①알아서 제공하는 ‘Before Service’ 구현 ② ‘3-Any(Any-Time, Any-Where, Any-Channel) 개인비서’ 서비스 실현 ③민의 분석 ‘로보틱스 플랫폼’ 구축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Innovative Problem-Solving Gov.	①자가학습기반 선제적 행정 프로세스로 재설계 ②블록체인 행정플랫폼으로 신뢰사회 구현 ③기동성 있는 현장행정 고도화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Sustainable Value-Sharing Gov.	① ‘지능형 데이터’ 민관 분석·공유체계 구축 ② ‘DIO(Do it Ourselves)’ 사이버 마당 구현 ③디지털 신산업 ‘하이브리드형 생태계’ 조성 ④사회배려자를 위한 디지털 밀착서비스 구현 ⑤국경 없는 ‘B-ID(Blockchain-ID)’ 도입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Enhanced Safety-Keeping Gov.	①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안전망’ 구현 ②자가진화형 사이버 안전 기반 구축 ③전국 방방곡곡, Smart Nation 조성

자료: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2017), 행정안전부

- 정부는 주민 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 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해옴.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87)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위원회, 2018.8.24.

88) 2012.1.13. 시행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목표와 14개 중점과제를 담아냄⁸⁹⁾

○ 강원도 역시 지방분권, 주민참여 확대 등 사회변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춰 도정 전반에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설계하고 있음[‘강원도 종합발전계획(2021~2040)’]

- 아동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 재해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
- 중기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직접·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개편, 시민주권위원회 발족, 주민총회 개최
- 초고령화 시대 지역 맞춤형 주민참여 복지모델 개발

○ 원주시 역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 15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⁹⁰⁾

- 2020년 기준 총 728회 회의를 개최(서면 477회, 대면 251회)했고, 위원회 당 평균 4.63회의 회의를 열었음(2019년 4.89회, 2018년 5.36회)
- 위원회 전체 위원 2,017명(중복 포함) 중 여성 위원은 29.9%에 해당하는 604명이며(당연직 114명, 위촉직 490명), 시의원은 6.6%(133명)를 차지함
- 위원회 성격별로 보면 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가 2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131개, 자문·조언 역할의 위원회가 26개 운영되고 있음

○ 원주시는 정책수립, 행정제도 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접수하기 위해 시민제안 제도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여론 및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시정모니터단⁹¹⁾ 운영도 하고 있음

- 2022년 118건, 2021년 141건, 2020년 140건의 시민제안이 있었음

89)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스톱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이상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이상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민원인 권익보호(이상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국민이 참여하는 민원제도 개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선,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이하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90) 2020. 12. 기준

91) 2009년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

-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이슈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으며, 총 17,067명이 응답에 참여했음
- 시정모니터단의 경우 26명(2023년 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정에 관한 의견 및 지역주민 여론 전달,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직접 제보함

원주시 시민제안 내용 분야(단위:건)

구분	합계	관광	교통 도로	환경	건강 복지	시정 행정	시민 생활	경제 기업	주택 건축	농촌 농업
2020년	32	2	4	6	5	4	3	6	1	1
2019년	44	1	8	3	10	14	7	-	-	1
2018년	63	9	18	6	8	7	5	7	3	-
2017년	48	5	8	9	7	6	4	6	2	1
2016년	53	29	6	4	3	3	4	-	3	1

원주시 시정모니터 제보 현황(단위:건)

구분	합계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기타 시정발전 사항
		도로	교통	환경	기타불편		
2020년	140	17	28	28	33	15	19
2021년	141	32	15	40	19	18	17
2022년	118	25	22	25	22	12	12

자료: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2019~2020년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 2020~2022년 시민제안 현황

- 이와 함께 원주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까지 시청 본청 1층 민원실과 읍.면.동에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을 보급하기로 함
- 원주시는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소통·행정 분야 핵심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감행정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원주 미래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 : 지역 시민대표, 시의회, 기관장,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논의 협력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확대 운영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통한 시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과정 마련, 참여예산 규모 확대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부론(富論)마당’ 구축 및 활성화 : 온라인 기반 시민참여, 의견제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정제안, 생활민원, 주민생각, 커뮤니티맵핑 지도, 법률상담, 소식알림 등의 메뉴로 구성됨
- 여기에 원주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민원인이 웃는 원주’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도 내놓음. 특히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지원 확대, 시장실 1층 이전을 통한 민원실 직접 관리 등을 통해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따라서 원주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 실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첫 단계로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참여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 함

□ 추진전략

- 시민 체감형 소통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
 -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정혁신 도모
 - 시민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기 위한 관련 제도 활성화
- 행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 확대
 -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시민참여가 일상화된 문화 조성
 - 각종 위원회 참여 주체 다양화, 주민 참여 및 제안 제도 실효성 강화
 - 안전 분야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선 8기 공약인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 공동체 구축

□ **추진계획**

①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

○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기획예산과]

- 제도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통해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기획예산과]

- 주민제안 적극 검토 및 사업화 가능성 향상 위한 방안 마련

○ 시정모니터제도 활성화 [자치행정과]

- 원주시정 및 시책 관련 지역주민 의견 및 시민 불편사항 제보

② 참여 방식의 혁신

○ 위원회 참여 주체 다양화 [기획예산과]

- 전체 시민 대비 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별, 연령별 대표성 확보
- 참여에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 다문화인 등 사회적 약자 포함

○ 주민체감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통신과]

- 정보공개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 시민 안전 공동체 활성화 [안전총괄과]

-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운영 통한 주민 주도 안전 공동체 구축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시민제안 신청 건수	건수	459	472	486	500	515	매년 3% 증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 대비 반영 건수(반영율)	%	9	10	13	14	15	
시정모니터원 제보/건의 건수	건수	150	160	170	170	170	
청소년·청년, 장애인, 다문화 등 참여 비율	%	-	5	10	15	20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대비 공개 비율	%	95	95	95	95	95	
자율방범 합동 순찰 횟수	횟수	11	12	12	12	12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정모니터제도 활성화																				
위원회 참여 주체 다양화																				
주민체감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시민 안전 공동체 활성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총예산액			66,720	95,520	99,380	106,626	108,296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국도비		-	-	-	-	-	
	시비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시정모니터제도 활성화	국도비		-	-	-	-	-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시비		9,720	9,720	9,720	9,720	9,720	
위원회 참여 주체 다양화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주민체감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시민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자율방범대 운영)	국도비		-	-	-	-	-	
	시비		9,800	38,600	42,460	49,706	51,376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위원회: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평화·자치' 실천 및 내재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민관 협업 및 시정 참여 ▪ '생명·평화·자치'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헌 ▪ '생명·평화·자치'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협의체 ▪ 시민사회단체 ▪ 중간지원조직 ▪ 관내대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지역 기업 ▪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 기대효과

- (경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인 민관 거버넌스 조성
- (사회) 민·관 소통 확대에 따른 공동체 회복력 및 갈등 대응력 강화
- (환경) 지속가능한 원주 구현을 위한 공감 기반 기후위기 대응력 증대
- (거버넌스) 시민 참여의 일상화를 통한 민·관 협업 문화 내재화

추진 부서	안전총괄과장 박노영(☎737-3660) / 사회재난팀장 차일남(☎3671) / 담당자 최광모(☎3673)
	기획예산과장 강지원(☎737-2140) / 기획팀장 정성원(☎2141) / 담당자 홍혜선(☎2144) 재정심사팀장 권은경(☎2461) / 담당자 이승희(☎2464) 시정평가팀장 김선희(☎2171) / 담당자 허남규(☎2173)
	자치행정과장 박태봉(☎737-2250) / 시정팀장 이수민(☎2251) / 담당자 송예원(☎2252)
	정보통신과장 홍창희(☎737-2530) / 기록물관리팀장 남궁미숙(☎2561) / 담당자 윤지현(☎2562)

U N 목 표	Goal 17. 파트너십				
원 주 목 표	지역사회와 함께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한다				
목 표 지 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률	2020	2025	2030	2040
		-	60%	80%	100%

17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합의문으로 환경의 보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경제의 발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인류 보편적 발전전략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엔(UN)은 제76차 총회(2021.9.)를 개최(뉴욕 본부)하며 제2차 SDG Moment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코로나19, 산업변화 등으로 인한 문제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 필요성을 재확인함

제2차 SDG Moment(제76차 유엔총회) 개최식 연설문 주요내용



- 폭염, 한파 등 탄소배출과 환경 파괴 고리로 밀접하게 이어져
- 코로나19, 목표의 중요성 더 절실하게 일깨워 줌
- 국경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 지속가능발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적극 활용해야
- 미래세대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 모아야

<p>폭염, 한파 등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고리로 밀접하게 이어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법도 연결되어 있을 것 • 인류가 국경 넘어 협력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 • 유엔, 6년 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합의 • 2년 전,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 약속 	<p>지속가능발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적극 활용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 해소'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
<p>코로나19, 목표의 중요성 더 절실하게 일깨워 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극복 넘어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 이뤄야 • '모용과 상생의 마음'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 • 한국, G7 정상회의서 코백스 2억 불 공여 약속 • 백신 보급과 지원 늘리는 노력도 계속할 것 •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 	<p>미래세대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 모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가져야 •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기성세대의 의무 •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해법 찾을 수도 •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 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해 •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p>국경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조 맞춰야 • 기후 선진국 경험과 기술, 개도국들과 공유돼야 •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 말 확정 • (COP26) 계기에 상향된 NDC 목표 제출할 계획 • 그린 뉴딜 ODA 확대 우리의 경험과 기술 공유 •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해 •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 정부도 UN SDGs를 반영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고(2018),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확정하였음(2020.1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목표

	K-SDGs
Goal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Goal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Goa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Goal 5	성평등 보장
Goal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Goal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Goal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Goal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Goal 14	해양생태계
Goal 15	육상생태계
Goal 16	제도·인권·평화
Goal 17	파트너십

- 각 지방정부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발히 논의하여 수립하고 있음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현황

구분	수립한 지방정부
광역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경남, 강원
기초	서울 도봉, 서울 강북, 서울 강서, 서울 은평, 서울 종로, 인천 남구, 인천 부평, 수원, 당진, 여수, 부여, 담양, 순천, 포항, 김해, 통영, 화성

- 강원도는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내재화와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2017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35)을 수립함
 - 2021년 10월 기준 강원권에서 운영 중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영월, 원주, 정선, 춘천, 태백, 평창이 있음

- 원주시는 「환경기본조례」(2013) 제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환경교육, 기후홍보관 운영 등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해옴
 - 「원주시 기후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8)로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지역 전파와 우수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모델을 창출하고 있음
 - 지역사회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원주’를 만드는 데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원주시는 기획예산과 내 지속가능발전TF팀을 신설(2021.4.)하고,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2022~2040)」을 수립하였음
 -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숙의위원회를 위촉과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의 W-SDGs(2040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2022. 1.)
- 향후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주시 시정 전반에 내재화하고,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거버넌스 기반의 평가.환류 과정 포함)
 - 행정계획,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민관산학 협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핵심의제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원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모델



- 원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3세대 모델은 전환목표 중심으로 비전-목표-중점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합성을 가짐. 전환목표체계로 다른 계획과의 차별성을 띄어 성과관리에 실효성을 담보함
 - 전환목표 중심의 핵심의제 발굴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계
 - 핵심의제 추진 협업-협력-협치 체계 마련
 - 공동학습 기반 핵심의제 민관산학 네트워크 및 워킹그룹 구성
-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실천이 중요함. 이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와 연계해서 마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운영 공모 등
 - 민관협력,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공공리더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시민강사 양성을 확산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바탕으로 마을지속가능발전(마을지속가능발전소, SDGs 리빙랩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주민참여형 마을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예시)



-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그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연도인 2040년 성인이 되는 현재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다음 세대들의 각종 거버넌스위원회 참여 보장
 -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핵심의제 발굴 및 추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추진전략

- 시정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 내재화
 - 조례 제정 등 실질적 지원
 -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W-SDGs와 연계한 정책 추진
 -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지정
- 시민참여에 기반한 W-SDGs 이행 및 점검
 - 행정·지역사회·지속협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자치역량 강화
 - SD 기반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추진
 - 지역 자원 발굴 및 협치·협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민참여형 W-SDGs 지표 연계 지속가능성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효성 점검
 - W-SDGs 비전 선언, 17개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 이행(추진)계획

- ① 지속가능발전 추진 제도화 [기후에너지과]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 민·관·산·학·연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지속가능발전 포럼 및 세미나 운영 지원
- 대상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
 - 공무원, 시민사회, 대학생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형 W-SDGs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 지속위위원 및 시민참여 공론장 기반 이행점검 추진

②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자치역량 강화 [기후에너지과]

- 공동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활성화 지원
 - 공동체(마을, 학교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 지속가능발전 공동체 지정 및 홍보
 - 지역자원 발굴 기반 마을지속가능발전 활동 거점공간 지정 지원
 - W-SDGs 17개 목표별 지속가능발전 강사 양성 지원
- 주민주도형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지속가능발전소 및 SDGs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횟수	횟수	2	3	5	3	5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원 수	공무원	명	60	80	100	120	140	
	시민	명	5,000	5,500	6,000	6,500	7,000	
지속가능발전 추진점검 공론장 운영 횟수	횟수	-	2	4	5	6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공동체 수	개	1	3	6	8	10		
주민주도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	횟수	2	4	5	5	5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대상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																				
주민참여형 W-SDGs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공동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주민주도형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국도비		-	-	-	-	-	
	시비		7,000	7,000	7,000	7,000	7,000	
대상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	국도비		-	-	-	-	-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주민참여형 W-SDGs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국도비		-	-	-	-	-	
	시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공동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활성화 지원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주민주도형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	-	-	-	-	비예산 사업
	시비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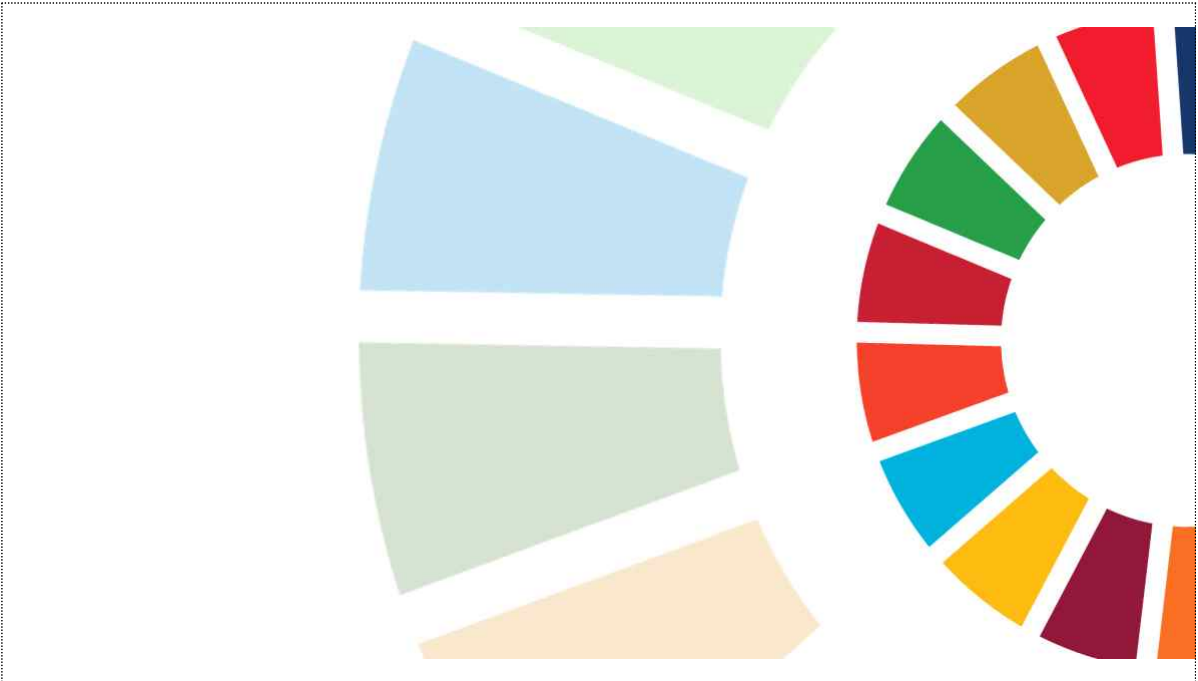
□ **주체별 협업사항**

부서·기관·위원회 간 협업	지역주민(단체)과 협업	기업과 상생
주무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업부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위원회: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공론장을 통한 이행점검,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강사 등 양성, 지속가능발전마을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공론장 참여를 통한 기업의 이행점검 참여,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책임(ESG) 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 주민 모임, 주민자치회, 청년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민간기업 ▪ 공공기관

□ **기대효과**

- (경제)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행정자원 절감
- (사회) 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환경) 행정 및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적 지속가능발전 가치 심화
- (거버넌스) 민·관·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체계 구축 및 추진

주진 부서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737-3170) / 지속가능발전TF팀장 박정화(☎2451) / 담당자 김명식(☎2452)
------------------	---



VI.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실효성 확보 방안

- 제1절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제2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 제3절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 제4절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발간
- 제5절 향후 과제

1.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험 증대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주시민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한 2040년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음
 - 비전 : ‘자연이 숨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 원주’
 - 위 비전은 지속가능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전환의 나침반으로 17개의 도전적 목표를 기반으로 마련한 위 핵심정책(추진과제/단위사업/세부사업)의 이행수준에 힘입어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됨



〈그림 48〉 2040 원주 지속가능발전 비전 달성 체계

- 비전선언을 통해 행정의 각 부분과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민관산학 협력을 토대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민선 8기 원주의 6대 시정목표⁹²⁾와의 연계성 확보를 우선 고려해 추진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92) 민선 8기 원주 6대 시정목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민원인이 웃는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언제나 안전한 원주,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 누구나 평등한 원주

2.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실천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꼽을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이 행정 전 부서의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교육 시 지속가능발전 강의를 추가해 분야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이 내재화 되도록 해야함
-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많은 구성원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따라서 다양한 교육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의 실천역량 강화와 직결됨. 대표적으로 참여기반 자치역량, 사회혁신 방법론을 적용한 지역문제 해결역량, 재난 대응 공동체 역량 등을 꼽을 수 있음

3. 기본전략·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17개)와 추진과제(38개), 단위사업(101개)은 지역 민·관·산·학 이해관계자와 행정 각 부서 논의를 통해 도출함. 실행단계 역시 공공과 민간부문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함
 - 원주시청, 시민사회, 산업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조례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산업계의 경우,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촉진, 이와 함께 지역 읍면동 동네기반 협력체계 마련도 필요함

1. 설치 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기초 지방정부의 지속위 설치의 임의규정임. 그러나 이것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준비된 지자체부터 시작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었음.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책임관과 지속위 설치의 필수사항임
- 즉,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기본전략 심의의결, 정책의견 제시, 조례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표평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임

2. 주요 기능

- 기본법에 의거해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함 (※심의사항은 기본법 제20조에 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구성 운영 방안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다년직 위촉직 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함
-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4.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과 기능

-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행정과 민간의 쌍두마차 추진 시스템으로 정비
 - 행정 외부 : 민관협력기구로서 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행정 내부 : 행정기구로서 원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민관협력기구로서 민·관·산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 가능
 - 행정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는 한계 (지속협위원의 지속위참여로 해소 가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심의·자문기구로서 행정계획, 주요정책, 주요사업의 지속가능성 심의
 - 일상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

〈표 236〉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과 기능 비교

구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로서 행정중심(정책, 계획, 사업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행정단위의 정책추진과 가치 내재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기구로서 민관협력(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시민단위의 인식확산과 네트워크, 사업 필요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 대표자 및 전문가 중심 20인 이내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모든 기관단체 참여가능 (100~200명)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전략, 추진계획) 및 지표, 평가보고서 심의의결,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심의 자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전략, 추진계획) 및 지표개발 전 과정에 참여, 민관협력 사업의 기획추진, 시정 모니터링 등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TF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1. 목적

-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조례와 중장기 행정계획임. 따라서 주요 조례의 제정과 개정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과 변경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 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의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검토 주체와 대상

- 주체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대상
 - 위원회가 정하는 행정계획과 집행부 발의 조례
 - : [행정계획] 시 종합계획, 청년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 30여개 내외 권장
 - : [조례] 모든 제정안, 전부개정안 중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큰 개정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검토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항
- 대상 선정
 - 원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아래의 중장기 계획을 참고하여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전지속가능성 검토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추진계획과 관련 있는 30개 이내로 검토대상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아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5년)
-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계획 (5년)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투자유치계획 (5년)
-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4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5년)
- 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5년)
-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돌봄기본계획 (5년)
-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 원주시 에너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5년)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 (4년)
-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5년)
-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돌봄 기본계획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 (5년)
-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5년)
-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5년)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장기 행정계획

4. 사전검토의 추진절차 (30일 이내 검토 기준)

〈표 237〉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및 추진절차



5. 지속가능성 검토 시 중점 고려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지속위에서 검토 시 논의)

- 원주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평가항목 중에서 검토 대상 계획에 따라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하여 검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 검토팀이 사전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이나 조례에 맞게 평가항목을 선정

〈표 238〉 세부 평가항목 은행(안)

분야	세부 평가항목 은행 (안)
경제	현세대의 편의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가?
	지역 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전하는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 감소 및 노동환경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사회	디지털 불평등 등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지역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가?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지역의 빈곤해소에서 기여하는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강화에 기여하는가?
	건전하고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환경	2040 탄소중립에 기여하는가?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지역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재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
협치 제도	숙의공론장을 통해 공식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계획과정에 시민,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해당 계획을 공개하고 홍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6. 사전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검토위원(지속위 분과위원회 또는 검토TF)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의견서를 총괄 작성하여 지속위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계획 또는 조례 담당부서에 송부

〈표 239〉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예시)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 제6항 및 「강원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00조에 따라 ○○○○○ 계획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을 송부합니다.

소관부서						
검토 분야	경제		사회		환경	제도

검토 분야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의견 (수정의견 및 사유 등)
경제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사회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환경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협치 제도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7. 지속가능성 검토 소관부서 회신서 (예시)

- 지속위의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반영결과를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에 회신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신함
- 1년간 진행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의회에 보고

〈표 240〉 지속가능성 검토 소관부서 회신서 (예시)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반영결과 회신서

원주시 행정계획 담당부서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 제7항 및 「강원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00조에 따라
 “○○○○○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검토의견 접수일: 반영결과 회신일: 계획담당부서 :

검토 분야	검토항목	검토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여부	사유(부분 및 미반영 시)
경제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부분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사회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부분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환경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부분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협치 제도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부분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1. 추진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7조(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고나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8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원주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는 2년마다 이루어지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발간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방추진계획(현행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발간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주요 내용

- ❖ 성과지표에 의한 원주시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 원주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 ❖ 그 밖에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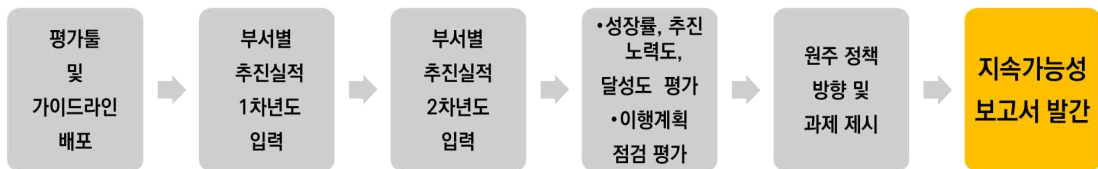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추진계획 성과지표>의 측정임”

[목차구성(예시)]

-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제도와 추진체계)
 -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점검
 -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진단 및 달성 가능성 평가
 -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평가)
 - ◆ 원주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
- ※ 작성과정은 숙의공론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야 함

3. 작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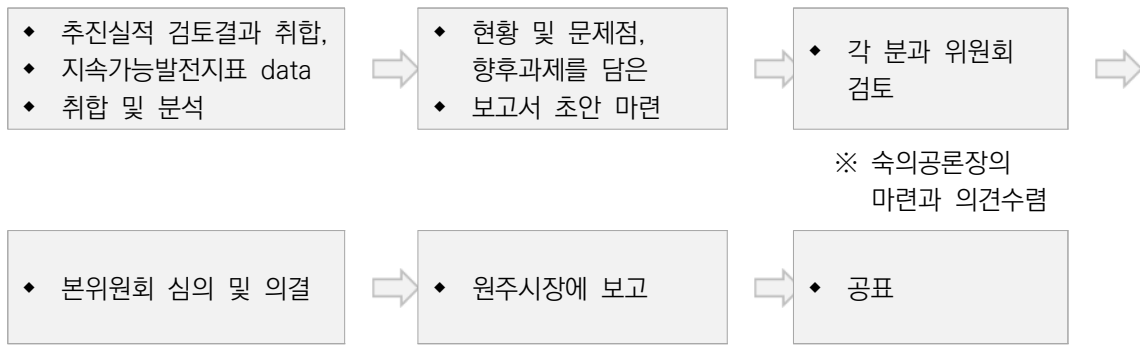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하게 되지만, 추진계획의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추진상황)은 매년 취합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데이터 취합과 일관성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전체 과정은 그림과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그림 49〉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과정(2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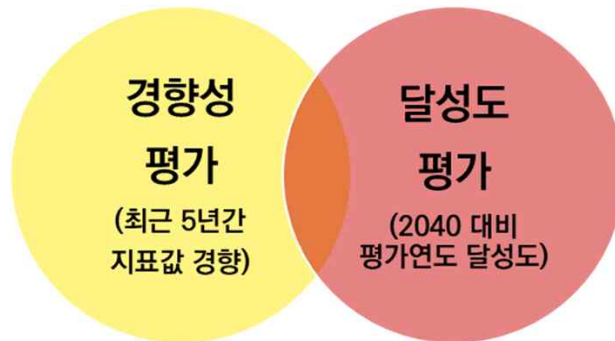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평가TF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월함
- 이때 중요한 것은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

〈표 24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절차



○ 이러한 과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원주시 지속위와 지속협의 협력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원주 SDGs 지속가능발전지표 측정 방법



〈그림 50〉 지속가능발전지표 측정

- 지속가능발전지표 측정은 ‘경향성 평가’와 함께 2040년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를 측정함
- 지속가능발전지표 경향 평가
 - 최근 5개년간 지표값의 변화와 기준연도 지표값과 비교, 경향성 조사
 - 경향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진전, 정체, 후퇴로 평가

〈표 242〉 지속가능발전지표 경향 평가

경향성 평가 기준	표시
5년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통계치가 진전되었음	↑ (↗ 또는 ☺)
5년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통계치가 정체되었음	→ (또는 ☹)
5년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통계치가 후퇴되었음	↓ (↘ 또는 ☹)

○ 지속가능발전지표 2040 목표달성도(%) 평가

- 목표달성도(%) : [현재 평가연도의 SD지표값 / 2040년 SD지표 목표값 × 100]
- 평가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2040년 목표달성률(%)을 산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달성 정도를 진단
- 이를 정책에 환류, 지속가능발전지표별 달성률이 산출되면 이를 근거로 목표별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대안 마련

$$\text{달성률} = \frac{\text{평가연도 지표치} - \text{기준연도 지표치}}{\text{목표연도 지표치} - \text{기준연도 지표치}} \times 100$$

5.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방안(성과지표 평가)

-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취합하되,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을 권장함
- 추진계획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평가 :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x)표시
- 추진계획 추진실적 측정은 단위과제별 사업 성과지표의 최근 2개년간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한 후 종합적 진단 및 평가

연번	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2년 실적	23년 목표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달성 여부 (○,△,X)	담당자	담당부서
Goal1	빈곤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든다											
1	빈곤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1-1	① 취약계층 상호지지·지원체계 구축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사업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횟수	횟수	3		3		3	3		유00(☎2602)	희망복지팀
	② 취약계층의 경제적안정 지원	간접생활지원확대 여부	여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③ 빈곤지역 주민 소통 온오프 플랫폼 운영	빈곤지역 주민 소통 온오프 플랫폼 운영 여부	여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2	② 빈곤층 자립지원 체계 구축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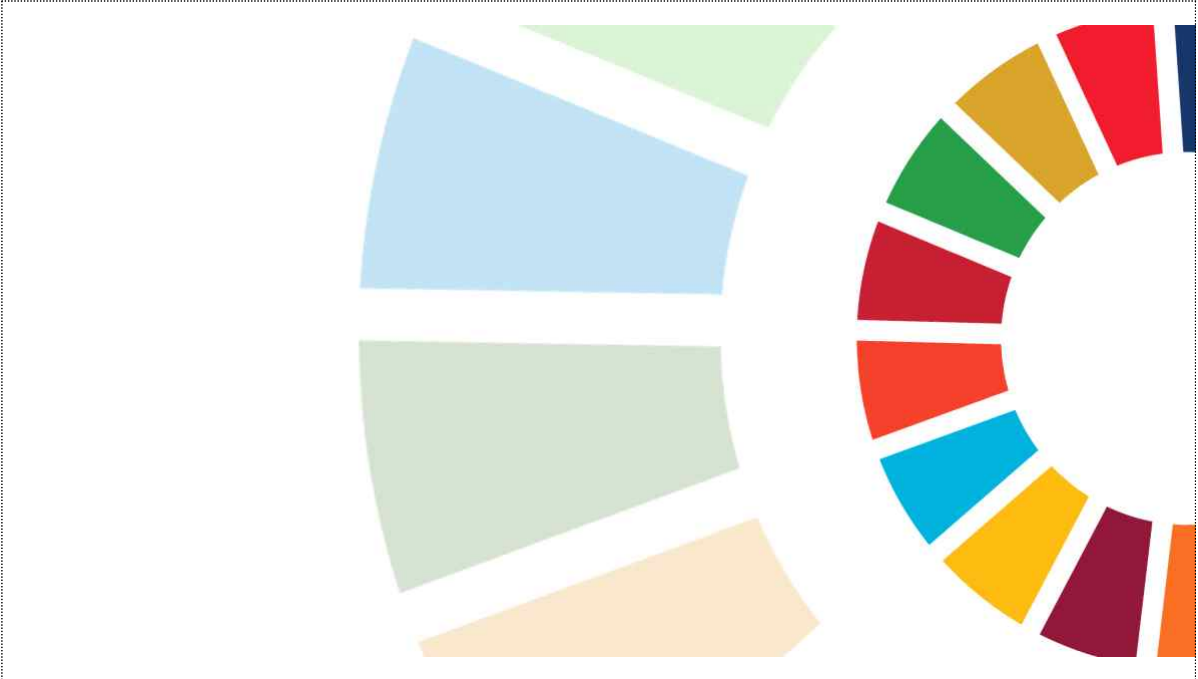
〈그림 51〉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표(예시)

- 본 연구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원주시의 각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40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안을 제시했음. 향후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민선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원주시장의 확정을 통해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안을 확정해야 함
- 목표 확정 후에는 원주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원주민 등 민·관·산·학이 함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여 미래를 위한 공동의 나침반을 갖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확정된 이후 2년마다 거버넌스에 기반해 추진현황 점검 및 지표평가를 실시하고, 추진과제와 단위사업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 단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3년 내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장함

-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원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 수립 및 수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하는 방향을 반영해야 함
-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공무원, 시민 모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
- 원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확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미 원주지역 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많은 성과와 사례가 존재하는만큼,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부록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3. 3. 31.]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2204호, 2023. 3. 31.,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기후에너지과), 033-737-24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의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원주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원주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원주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원주시 부시장
 2. 제5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 ④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원주시 소속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수립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원주시 정책자료】

- 원주시(2019)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 원주시(2019)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 원주시(2020)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계획
- 원주시(2020)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계획
- 원주시(2020) 원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 원주시(2020) 원주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 원주시(2020) 2020 지역사회건강통계
- 원주시(2020) 2020 문화도시 원주 사업소개서
- 원주시(2020)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단 활동보고서
- 원주시(2020) 원주시 발전계획(2018~2022)
- 원주시(2020) 원주비전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2020)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혁신타운 활용방안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2020) 2020 문화도시 원주 사업소개서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2020) 2020 원주시 청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원주시(2021) 2022년 원주시업무자료
- 원주시(2021) 원주시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 원주시(202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2021년 원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 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취약계층 방문안전교육 운영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계획
- 원주시(2021)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기본계획
- 원주시(2021)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 원주시(2021) 2020년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 원주시(2021) 21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 원주시(2021)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고서
- 원주시(2021) 2021년 원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원주시(2021) 2021년 원주시 혁신 실행계획
- 원주시(2022)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 원주시(2022)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 원주시(2022) 2022 원주시 청년통계
- 원주시(2022) 2021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 원주시(2023) 2022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 원주시(2023) 2023 원주시 세출예산서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2021) 원주형 문화지표 개발 및 PDCA 모델 구축 운영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2021) <문화도시 81실천과제 이행 점검 테이블> 운영

[기관 자료]

강원도(2019) 제3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강원도(2020) 제2차 강원도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강원도(2020) 2021년 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강원도(2021) 강원도, 전국최초 204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강원도(2021) 2021-2040 강원도 종합계획
강원도(2021) 2020 강원도의 사회지표
강원연구원(2020) 원주시 발전계획(2018~2022)
강원연구원(2020) 강원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강원연구원(2020) 원주시 발전계획(2018~2022)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2021) 강원지역 SDGs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원주시
강원지방통계지청(2021)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경상남도(2020)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계부처합동(2020)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관계부처합동(2020)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20)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관계부처 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국토교통부(2019)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국토연구원(2020)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국토지리정보원(2020) 국가지도집 2권 2020
국회기후변화포럼(2020)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입법조사처(2020)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기획재정부(2022)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2021)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2021)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세계경제포럼(WEF)(2021) 2021 세계위험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
외교부(2021)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 2021.7.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20) 통계로 본 농업 구조 변화
통계청(2021) 고령자통계
통계청(2021)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20) 지방소멸위험지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21)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2012) 강원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2020 농업전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2021) 2019년 기초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은행 강원본부(2020) 강원지역 경제 사회 구조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2021) 강원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환경부(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
 환경부(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1 -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
 환경부(2020)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과 홍수량 변화 연구
 환경부(2022) 2022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8)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50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IPCC (2021) 제6차 평가보고서(AR6)

[단행본, 논문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토론토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2019.09.17.
 고병수 외(2018), 주치의제도 바로 알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재경 외(2020),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7기 정책 연계 방안, 경기연구원
 고재경 외(2020), 그린뉴딜 성 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 GRI 이슈&진단, No. 430
 고재경 외(202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과학 활용 방안 연구, 2020-04, 경기연구원
 고흥석 (2017), 디지털 격차와 삶의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대별, 사회경제적지위, 도시-농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5
 국회미래연구원(2021), Futures Brief 2호
 국회예산정책처(2021), NABO 재정동향&이슈, 재정동향&이슈 제17호
 권규상 외(2018),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18-22
 권규상 외(2019), 컴팩트시티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NO. 705, 2019.3.11. 국토
 연구원
 권기태(2019),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2019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 기조강연
 권기태(2021),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사례 고찰,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권기태(202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해와 과제
 권기태 외(202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역확산 과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법의 이해와 지방정부 적용방안
 권의정(2020),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질병구조의 변화-내원일수를 중심으로, HIRA 정책동향 2020
 년 14권 5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나정(2020),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이슈와 논점, 제1774호, 국회입법조사처
 김대중(2016),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 모델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6.05.
 김병완 외(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김선애(2021), 문화도시 원주
 김수연(2019), 강원도 지역의 공간형태 전환을 위한 추진방안, 강원연구원
 김수진(2018),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국토연구원, 18-37
 김영배(2019), 거버넌스 기반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김용우(2007), 원주지역의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 고찰
 김은란 외(2020),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 김은정 외(2020), 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제 34권 제4호(통권 123호) 2020. 12. 213~238
- 김지은 외(2021), 거주지역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경험, 보건행정학회지 2021;31(2):197-206
- 김태환(2012), 건강도시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국토 2012년 8월호(통권 370호)
- 대한의사협회(2018),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8.11.18. 대한의사협회
- 문성제(2020), 스웨덴 원격의료 도입의 현황과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2020년 Vol.18 No.3.
- 박정은 외(2020),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41
- 변미리(2018), 포용도시를 향하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45, 2018.2.19. 서울연구원
- 송미령 외(2021),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97호(2021. 4. 16.)
- 신광문(2017), 강원도 고온 취약주거지의 열환경 개선 방안, 정책연구 2017-003,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신지영 외(2021),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KEI 포커스, 제9권 제5호 통권 제75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안소영(2019), 일차의료의 현황 및 과제, KIRI리포트, 2019.10.14. 보험연구원
- 오수길, 광병훈(2019), 주요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체계와 프로그램 분석: 핀란드, 스웨덴, 독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 오영인 외(2019),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 KMA 의료정책연구소 2019-06
- 옥스팜(2020), 2020 불평등 해소실천지표 - 코로나19 시대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옥스팜보고서
- 우윤석(2020), 포용도시 개념의 다차원적 모색, LHI Journal 2020;11(4):27-34
- 윤재문 외(2021), 기능적 일차의료의 정의와 국내 현황, KJFP, Korean J Fam Pract. 2021;11(1):3-9
- 이강익(2020),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바란다
- 이동석(2021), 영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비대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pp. 27~40
- 이래혁 외(2020),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 이삼수 외(202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기획 2021-86호
- 이상원(2021), 해외 분석기관들이 보는 2021년 글로벌 12대 리스크, Issue Analysis, 2021.2.17. 국제금융센터
- 이영성(2018), 스마트포용도시를 위한 방향과 전략, GRI Focus, Vol. 17. 2018.11.8. 경기연구원
- 임준홍 외(2018),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충남리포트 Vol. 308, 2018.5.31. 충남연구원
- 전용호(2018), 노인 돌봄이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보건사회연구, 38(4), 2018, 010-039
- 정국상 외(2016), 개인건강기록(PHR) 산업, 표준 및 정책 동향, TTA Journal Vol.164
- 정성호(2019),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0권 제3호(2019년), pp.5-28
- 정연경 외(2020),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도시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 비교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 제현수(20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0)의 지역화와 문화도시
- 조대현(2015), 디지털격차와 공간 : 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 한국지리학회지 4권1호 2015(155~168)

조세훈(2007), 협동조합지역사회-원주지역에서의 실험

주수연(2016),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위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 영역 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주우영(2020), 생태계서비스의 주류화, 자연과 공존의 시작

채수미 외(2020),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서 20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여라 외(2020), 2020 폭염영향 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혁진(2007),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문제의식과 실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글로벌 보건사업 동향, Vol.36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글로벌 보건사업 동향, Vol.389

한국유네스코위원회(2021), <SDGs 돋보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도시재생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64호(2019. 4.)

허경선(202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 월간 재정포럼, 202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남희 외(2020),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2020-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STEP(2021),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STEPI(2021),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276호

[인터넷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Stockholm Resilience Center <https://www.stockholmresilience.org/>

UN <https://sdgs.un.org/goals>

UN 지속가능발전지식플랫폼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 <https://kacc.kei.re.kr/portal/>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

디지털배움터 <https://www.xn--2z1bw8k1pjz5ccumkb.kr/site/nia/main.do>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https://kier-solar.org/user/main.do>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원주롭다 홈페이지 <https://xn--2j1bz8hx3nt7b.kr/bd/biz/30>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https://asp.unesco.or.kr>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https://www.khealth.or.kr/ncd>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sdkorea.org/>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www.ncsd.go.kr/>

통계청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통영RCE세자트라숲 <https://rce.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customer/notice_list.aspx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https://www.etrans.or.kr/main/main.ph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https://gsis.kwdi.re.kr/>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https://www.en-ter.co.kr>